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228-230009-10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소중안권리 공정안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경북대학교 엄기홍, 강원대학교 임유진,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정다빈)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 일러두기 |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실적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내 '자료공간-선거/법규/정당-자료공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 연구	01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95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117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129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49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시대전환 시대전환LAB)	155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161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169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75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181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189

I. 서론

본 연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22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을 토대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 및 운영 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정당과의 관계에서 정책연구소의 기능 강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개정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설립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표 1-1> 참고). 특히 「정당법」 제38조 1항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은 정책 개발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법」 제38조 2항에서 국가가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을 통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매년 지원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정당연구소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정당법」 제35조 3항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연간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제35조	제38조	제28조
정기보고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p>③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정당과의 관계에서 정책연구소는 설립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양면적이다. 정당이 정치적 신념과 주장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면, 정책연구소는 독립적인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정파적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는 정파적 성격과 함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정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친밀성을 가져야 하는 모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시기였다. 따라서 정책연구소가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정책 개발 등 본연의 역할 및 기능의 수행을 통해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정당의 정책경쟁 강화라는 측면에서 2022년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 실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정책연구소를 연구원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차원과 재정, 지출, 활동 등 운영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정책연구소의 영향력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당과 정책연구소의 관계를 이해하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연구소의 위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2017~2022년 간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선거기간 동안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싱크탱크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연간운영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정책연구소이며, 2022년의 경우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기본소득당), 시대전환LAB(시대전환), 혁신과미래연구원(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민생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우리공화당), 진보정책연구원(진보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친박신당) 등 10개의 정책연구소이다 (<표 1-2> 참고). 이 가운데 2022년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활동실적을 제출했으나, 2022년 활동실적이 전무한 민주평화연구원(민생당)과 미래한국사회연구원(친박신당)은 제외하고 8개의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1-2> 2022년 정책연구소 현황

정당명	정책연구소	연구소장	법인등록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정태호	2008.09.04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2004.11.26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2012.12.11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2020.10.27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윤혜정	2020.12.27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박상병	2018.10.30
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공석	2018.03.15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주천	2018.12.11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정태흥	2018.01.12
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신재춘	2020.10.2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lidx=1241>)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202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성과를 분석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중앙당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정책연구소의 자체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운영 차원에서 기존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평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22년 정책연구소의 조직 및 구성, 재정과 회계, 그리고 각종 활동들을 비교 분석하고 최근 6년 간(2017-2022년) 정책연구소의 시계열적 변화와 2022년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고 2022년 정책연구소의 차별적인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10개의 정책연구소 모두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진정한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핵심 인사 및 실무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정당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소 운영의 실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소의 원장, 부원장, 연구원 등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당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한계 등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와 중앙당 간의 관계, 정책연구소 내부의 의사결정, 정책연구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 기간 동안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정책연

구소 활동의 특징과 의미 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소 운영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004년 정책연구소가 설립되고 2006년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발전 방안과 대안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정책연구소 활동분석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2022년의 활동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의 실천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소가 가지는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당의 명칭 변경, 합당과 분당 등 정당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정책연구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 주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 문제 의식과 배경, 그리고 정책연구소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배경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2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을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활동 실적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 분석한다. 특히 각 정당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소의 기능적 지위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6년간(2017~2022년) 정책연구소 운영의 흐름과 연간 활동 실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인터뷰 분석을 통해 각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각 정책연구소의 핵심 인사 및 실무진(원장, 부원장, 그리고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설문 자료를 분석한다. 특히 서면 인터뷰에는 정책연구소와 중앙당의 관계, 정책연

연구소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2022년 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책연구소의 정책 차원의 역할과 평가, 정책연구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전체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2022년 정책연구소 운영에 대한 총평과 함께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촉진하여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2022년 정책연구소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연구소에 대한 일반적 기능과 정당의 선거 참여에 관한 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제언이 포함된다.

II.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2022년 활동 실적

한국에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은 정책의 개발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정당법」 제38조),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8조). 그러나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신생 정당의 출현이 빈번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정당 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의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 2023년 8월 현재 9개의 정당이 10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활동 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표 2-1> 정당과 정책연구소의 변화(2013-2022)

정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2013.10.10.)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2008.9.4.)			민주연구원 (2016.11.4.)						
정의당	진보정책연구소 (2012.12.11.)		미래정치센터 (2015.8.24.)		정의정책연구소 (2017.11.7.)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020.10.27.)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2020.12.27)
민생당				국민정책연구원 (2016.3.9.)		바른미래연구원 (2018.10.30.)		혁신과미래연구원 (2020.4.1.)		
	민주평화연구원 (2018.3.15.)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12.11)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2018.1.12)									
찬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2020.10.27)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2년 연간 활동 실적을 보고한 10개 정책연구소를 기준으로 현재의 정당명을 배치하였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과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에 불과하며, 정의당의 정책연구소는 2012년 창당 이후 진보정의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정의정책연구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왔다. 2018년 애국정책전략연구원(우리공화당), 진보정책연구원(진보당), 민주평화연구원(민생당)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이후 기본소득정책연구소(기본소득당), 시대전환LAB(시대전환), 혁신과미래연구원(민생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친박신당)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2-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2년에 활동 실적을 보고한 10개의 정책연구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기능에 미친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9개 정당의 10개 정책연구소 가운데 활동 실적이 있는 8개 정책연구소의 활동과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소의 조직, 재정 등 기본적인 현황과 함께 연구와 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실적, 교육과 연수활동, 정책홍보, 자료발간 등 정책연구소의 활동과 실적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1. 정책연구소의 조직

1) 설립 및 운영 근거

2022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10개의 정책연구소는 「정당법」에 근거하여 당헌에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시대전환,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5개 정당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별도의 당규 없이 당헌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당규로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4개의 정당은 별도의 정책연구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2-2> 참고).

<표 2-2> 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규정

	당헌		당규
더불어민주당	[제57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3.5.28.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의힘	[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3.6.9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0.2.17.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 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정의당	[제46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2.9.17.	제11호 정책연구소 제정 2012.11.09 개정 2019.05.04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 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기본소득당	[제32조] 정책연구소	(개정) 2022.11.26.	제5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정 2020.06.20. 개정 2022.11.26.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 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연구소 정관으로 정한다.		

시대 전환	[제45조] 정책연구소	(제정) 2020.2.23. (개정) 2022.12.20.
	<p>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시민교육 및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민생당	[제8장] 정책연구원	(제정) 2020.2.24. (개정) 2023.2.13.
	<p>제98조(위상과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p> <p>제99조(조직과운영)</p> <p>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p> <p>②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정책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④ 정책연구원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p>	
우리공화당	[제50조] 정책연구소	(제정) 2020.03.11. (개정) 2022.8.29.
	<p>①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p> <p>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p> <p>④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진보당	[제45조] 정책연구소	(제정) 2017.10.15. (개정) 2021.9.5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정 2017.11.1. 개정 2023.1.14.
	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 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친박신당	[제31조] 정책연구원	(제정) 2020.2.25.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 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2023년 8월 현재 친박신당의 당헌은 홈페이지 미운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보 및 현황에 게시되어 있는 강령·당헌을 활용하였음.
<https://www.nec.go.kr/site/nec/politicalParty/doctrineConstitutionView.do?searchOption1=1&searchOption2=37&searchOption3=%EC%B9%9C%EB%B0%95%EC%8B%A0%EB%8B%B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cbIdx=256&bcIdx=134657>

2) 조직

정책연구소의 조직은 중앙당과 정책연구소의 관계,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자체 조직 역량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당헌은 중앙당을 포함하여 정당조직 및 기구의 구성,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중앙당과 정책연구소의 관계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연구소와 관련한 당규 및 연구소 정관을 통해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로서 1995년 여의도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2013년 여의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책연구소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산하에 위치하며 사무총장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그림 2-1> 참고).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46조 1항),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있다(당헌 제46조 2항). 이에 따라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여의도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하며(제5조 2항), 연구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제6조 2항). 또한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제6조 4항).

그러나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원장이 중앙당의 의사결정구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제12조 1항), 연구원의 연차 사업 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 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최고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한다(제12조 2항). 또한 원장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사무총장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제15조 4항).

여의도연구원의 오랜 역사와 연구원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당규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를 채운 원장은 이주영 원장(2013.5~2015.6)과 지상욱 원장(2020.6~2022.6)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장들은 가장 짧게는 4개월(추경호 원장, 2017.3~2017.7)에서 1년 내외의 짧은 기간만 재직하는 등 원장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ydi.or.kr/history?id=0>). 또한 2022년 지상욱 원장 퇴임 이후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김용태 원장(2022.10~2023.3)을 거쳐 현재는 박수영 원장(2023.3~)이 재직 중이다. 물론 원장의 잦은 교체가 중앙당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정책개발 및

1) 실제로 1990년대 당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했던 시기 연구소장의 임기는 상대적으로 길었다. 예컨대, 윤영오 소장(1996.2~1998.5), 유승민 소장(2000.2~2003.9)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 활동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원장의 잦은 교체는 정책연구소의 연구 활동이 지속성을 담보받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림 2-1>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 조직도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party.kr/about/organization>)

②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산하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당대표 산하 기관이다(<그림 2-2> 왼쪽 참고).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당헌 제57조 1항에 민주연구원은 중앙당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며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헌에 따라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만(당헌 제57조 2항),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당헌 제57조 3항) 등 인사의 독립성을 확

보호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연구원의 원장은 당헌에 근거하여 중앙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국대의원대회(당헌 제15조), 중앙위원회(당헌 제19조), 당무위원회(제22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의 선거인단(당헌 제42조)을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당헌 제28조).

그러나 실제 운영 차원에서 민주연구원이 중앙당과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헌을 통해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원장이 정해진 임기를 채운 경우는 많지 않다. 2012년 이후 연구원장 가운데 2년의 임기를 채운 경우는 변재일 원장(2012~2014년), 민병두 원장(2014~2016년), 김민석 원장(2017~2019년)에 불과하다. 반면, 김용익 원장(2016~2017년), 양정철(2019~2020년), 홍익표 원장(2020~2021년), 노웅래 원장(2021.6~2022.12)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했다. 특히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여러 원장들의 인터뷰는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정책연구소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제21대 총선 승리 이후 사임한 양정철 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임한다고 밝혔으며(『매일경제신문』 2020.4.17.), 송영길 전 대표 기간에 임명되었던 노웅래 원장 역시 이재명 당대표 취임 후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고 봤다”라며 사의를 표명하는(『조선일보』 2022.11.11.) 등 연구원장의 독립성이 실제적 차원에서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2-2〉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 조직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s://theminjoo.kr/main/sub/introduce/organization.php>);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idp.theminjoo.kr/ochart>).

③ 정의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의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당헌 제46조 1항) 설립되었으며, 중앙당에 별도 법인(당헌 제46조 2항)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이사회 구성(당헌 제46조 3항) 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당헌 제46조 4항).

정의정책연구소는 중앙당과의 관계가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정의정책연구소는 당대회와는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당 대회 산하에 위치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그림 2-3> 참고).

둘째, 정의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당규 제11호(정책연구소)에는 중앙당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다(당규 제11호 제5조).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경우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연구원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이사장(당대표)가 연구원장을 지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정책연구소에서는 당대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정의정책연구소의 소장과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하며(당규 제11호 제11조 2항),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당규 제11호 제11조 3항). 실제로 이사장은 2015년 미래정치센터(2017년 정의정책연구소로 명칭 변경)에 손호철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2017년과 2019년 연임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또한 김정진 소장(2016.8~2019.11)과 김병권 소장(2019.11~2022.11) 모두 규정된 임기를 채우는 등 연구소의 연구와 운영의 연속성이 실제로도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당 대회의 개최전까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전국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18조 2항).

다만 정의정책연구소는 다른 정책연구소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정책연구소의 경우 당외 인사를 이사와 감사에 포함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정책연구소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당규 제11호 제8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2-3> 정의당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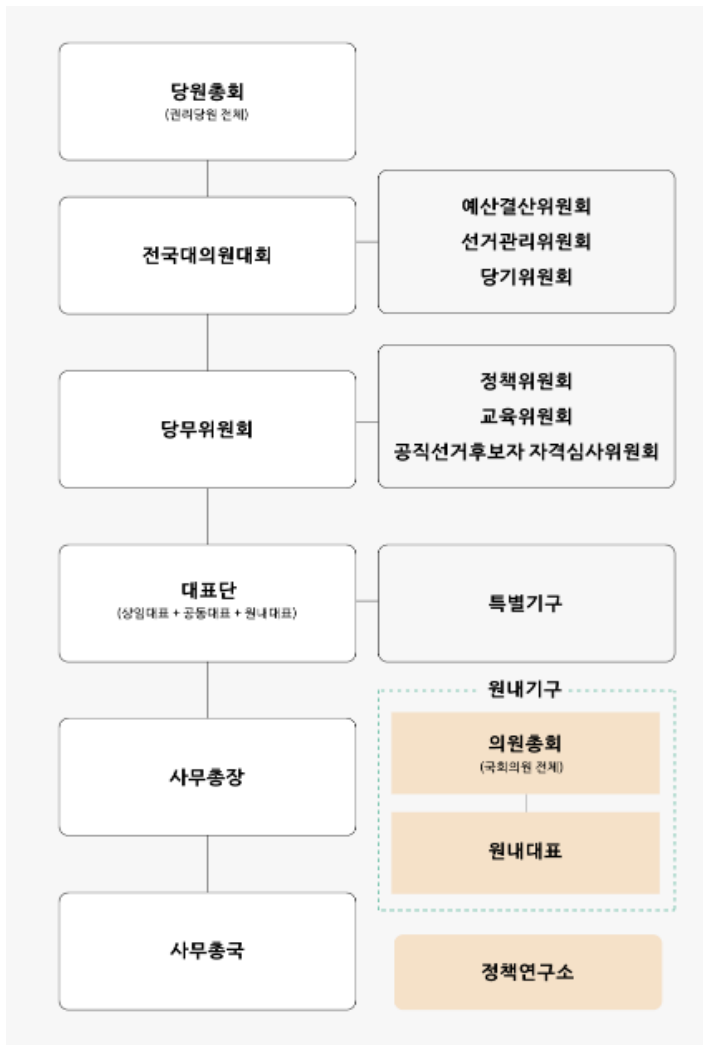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5.html>)

④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당헌 제32조 1항)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당헌 제32조 2항)로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은 당규 제5호 정책연구소 규정에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림 2-4> 기본소득당 조직도



출처: 기본소득당 홈페이지(<https://www.basicincomeparty.kr/about/people>)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²⁾ 우선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당원 총회 산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다(<그림 2-4> 참고). 또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인사의 독립성도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당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당규 제5호 제5조). 또한 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하며(당규 제5호 제11조 2항), 임기는 2년이다(당규 제5호 제11조 3항). 현재 안효상 이사장(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과 서정희 소장(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재임 중이다.

또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당의 당원에 한정”(당규 제5호 제8조)하고 있다.

⑤ 시대전환 LAB

시대전환LAB은 시대전환의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시민교육 및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당헌 제45조 1항).

2023년 3월 시대전환 홈페이지 개편 이후 정당의 조직도가 게시되지 않아 현재 시대전환LAB과 중앙당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홈페이지 개편 이전 시대전환LAB은 다른 정책연구소와는 다르게 중앙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연구소가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된다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대전환LAB은 중앙당의 정책기획조정위원회 산하 기구로 위치해 있었다. 또한 연구소의 이사장을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이사회 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당헌 제45조 2항). 즉 연구원장의 인사와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 중앙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⑥ 혁신과미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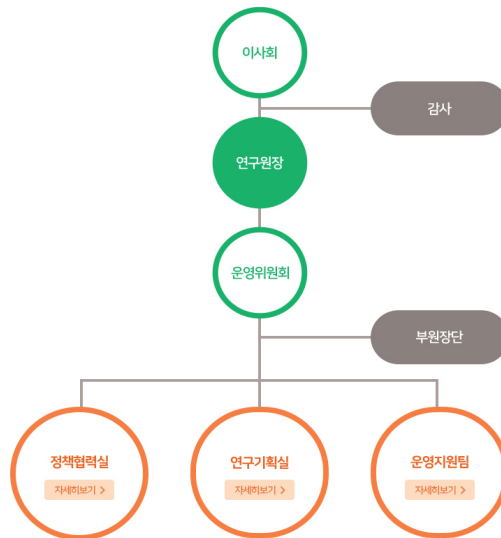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민생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된다(당헌 제98조).³⁾

2)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와 유사함.

그러나 현재까지 민생당 홈페이지(<http://www.minsaengdang.kr/>)에 정당 조직도가 나타나지 않아 민생당에서 혁신과미래연구원의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헌에서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난다. 예컨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의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당헌 제99조 1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장이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며(당헌 제24조 1-2항),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등(당헌 제38조 2항) 중앙당의 의사 결정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차원에서 중앙당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정책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원의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당헌 제 99조 2항), 여전히 연구원장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 실제로 초대 홍경준 원장(2018.10.~2020.4) 이후 이수봉 원장(2020.4~2020.5), 박상병 원장(2020.5~2021.7), 홍승태 원장(2022.4~2023.1) 등 원장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불과하여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림 2-5> 혁신과미래연구원 조직도



출처: 혁신과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if.or.kr/html/15>)

3) 사실 2020년 2월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과 합당되어 민생당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소였던 민주평화연구원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활동 실적이 전무하여 혁신과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석했음.

⑦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우리공화당의 정책연구소로서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당헌 제50조 1항).

그러나 실제 운영의 차원에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보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공화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당 조직도에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최고위원회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6> 참고). 또한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며(당헌 제50조 2항), 당헌에 연구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당헌 제50조 3항). 더욱이 최고 위원회 등 중앙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연구원장의 참여 보장에 대한 규정도 나타나지 않는 등 중앙당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조원진 당대표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8년 창립 이후 이주천 원장이 재임 중이다.

<그림 2-6> 우리공화당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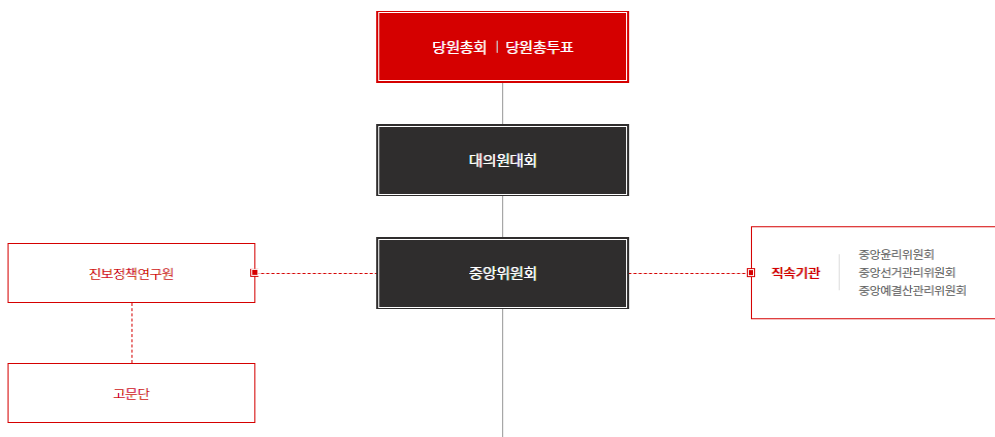
출처: 우리공화당 홈페이지(http://www.orp.kr/main/sub_menu/sub_01_org_chart6.php).

⑧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은 진보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당헌 제45조 1항),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45조 4항). 이에 따라 당규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에서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연구원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담당하며(당규 제13호 제5조), 연구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당규 제13호 제6조 2항),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당규 제13호 제6조 3항). 또한 진보정책연구원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며(당규 제13호 제4조), 임원의 자격을 “우리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당규 제13호 제9조)로 제한된다.

그러나 진보정책연구원은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별도 법인으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보당 조직도에서도 진보정책연구원은 중앙위원회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그림 2-7> 참고),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당헌 제45조 3항). 또한 원장이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승인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림 2-7> 진보당 조직도



출처: 진보당 홈페이지(<https://jinboparty.com/pages/?p=12>).

3) 연구원

정책연구소가 연구역량 확보를 통한 정책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년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를 제출한 정책연구소의 전체 연구인력의 규모는 연구원 101명과 직원 125명을 합하여 226명이었다.⁴⁾ 연구인력은 박사급 35명(34.7%), 석사급 38명(37.6%), 기타 28명(27.7%)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 이외에 여의도연구원(58명), 민주연구원(59명), 정의정책연구소(1명), 혁신과미래연구원(5명), 진보정책연구원(2명) 등 5개 정책연구소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125명), 민주연구원(4명)을 제외하고 고용 형태는 모두 정규직이었다.

<표 2-3> 2022년 정책연구소 연구 인력 현황 (단위: 명, %)

	연구원				직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여의도연구원	14 (24.1)	25 (43.1)	19 (32.8)	58 (100.0)	58 (100.0)	0 (0.0)	58 (100.0)
민주연구원	16 (80.0)	4 (20.0)	0 (0.0)	20 (100.0)	55 (93.2)	4 (6.8)	59 (100.0)
정의정책연구소	3 (27.2)	4 (36.4)	4 (36.4)	11 (100.0)	1 (100.0)	0 (0.0)	1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0 (0.0)	0 (0.0)	3 (100.0)	3 (100.0)	0 -	0 -	0 -
시대전환 LAB	0 (0.0)	1 (100.0)	0 (0.0)	1 (100.0)	0 -	0 -	0 -
혁신과미래연구원	0 (0.0)	3 (75.0)	1 (25.0)	4 (100.0)	5 (100.0)	0 (0.0)	5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 (100.0)	0 (0.0)	0 (0.0)	2 (100.0)	0 -	0 -	0 -
진보정책연구원	0 (0.0)	1 (50.0)	1 (50.0)	2 (100.0)	2 (100.0)	0 (0.0)	2 (100.0)
합계	35 (34.7)	38 (37.6)	28 (27.7)	101 (100.0)	121 (96.8)	4 (3.2)	125 (100.0)

출처: 각 정당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주) 미래한국사회연구원(친박신당)의 경우 인력에서 박사급(3), 기타(1), 비정규직 직원(1) 등 5명을 보고하였으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

4) 2021년 정기보고까지 직원의 경우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으로 구분했음.

인력구성과 관련하여 전체인력에서 2021년 연구원 97명, 직원 74명 등 총 1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연구원(4명)과 직원(51명)의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정기보고와 비교하여 박사급 6명, 석사급 9명이 각각 증가했으며 기타로 분류되는 석사학위 미소지 연구원의 수는 7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이후 박사 및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제기되어온 정책연구소의 연구 및 정책 능력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인력 증가와 함께 행정인력의 규모 역시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인력의 전체 규모는 2020년 57명에서 2021년 74명, 2022년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책연구소의 규모 확대가 박사급 연구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책연구소 자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소의 전문성과 역량이 제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표 2-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별로 연구 인력의 규모와 구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14명(24.1%), 석사급 연구원 25명(43.1%), 기타 19명(32.8%)으로 총 58명의 연구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2021년과 비교하여 박사급 연구원 8명, 석사급 연구원 8명이 각각 증가하는 등 우수 연구인력의 확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16명(80.0%), 석사급 연구원 4명(20.0%) 등 전체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021년 조사와 비교해 박사급 연구원은 2명이 증가, 석사급 연구원 2명이 감소했다. 2019년 73명, 2020년 35명, 2021년 20명과 비교하여 더 이상 연구 인력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과 비교하여 1/3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역량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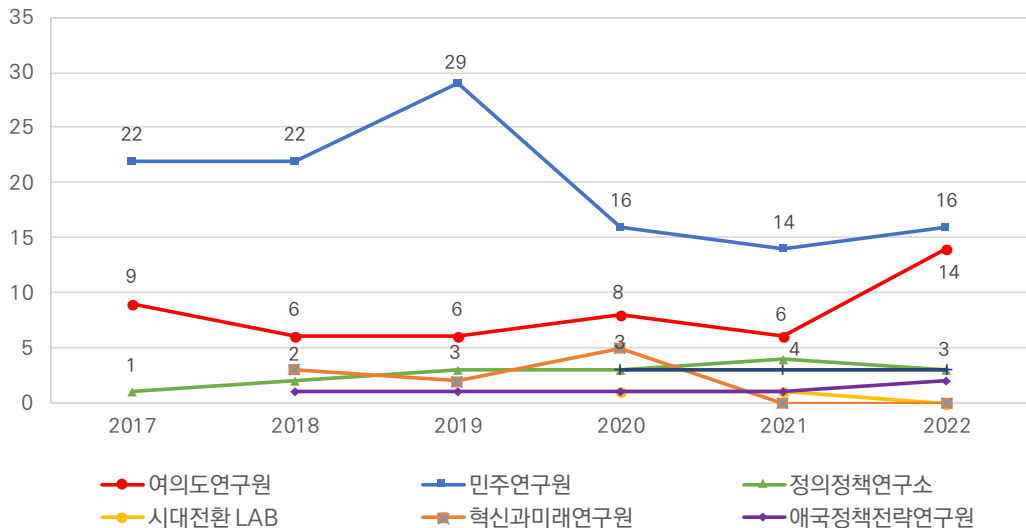
정의정책연구소는 박사급 연구원 3명(27.2%), 석사급 연구원 4명(36.4%), 기타 4명(36.4%)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2021년과 비교하여 2명이 감소했다. 이는 2021년 정기 보고와 비교하여 박사급 1명, 석사급 2명이 각각 감소했으며, 기타에서 1명이 증원된 것이다.

이외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2명의 연구인력 모두 박사급 연구원이었던 반면, 기본소득정책연구소(기타 3명), 시대전환LAB(석사급 1명), 혁신과미래연구원(석사급 3명, 기타 1명), 진보정책연구원(석사급 1명, 기타 1명) 등 4개의 정책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원이 부재했다.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역량과 관련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는 중요하다. <그림 2-8>에서처럼 지난 6년간 각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2021년 정기보고에서 가장 많은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던 민주연구원의 경우 2017년 22명, 2018년 22명, 2019년 29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16명, 2021년 14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2년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16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9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의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의 규모는 2018년 9명에서 2018년 6명, 2019년 6명 등으로 감소했다. 2020년 8명, 2021년 6명, 2022년 14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의 수는 1~2명을 유지해오다 2021년 4명으로 잠시 확대되었으나 2022년 다시 3명으로 감소했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1명을 유지해왔으나 2022년 2명으로 확대되었다. 시대전환LAB은 2020년 설립 이후 박사급 연구원 1명을 유지해왔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0명으로 조사되었고, 혁신과미래연구원은 2018년 3명, 2019년 2명에서 2020년 5명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 이후 박사급 연구원이 더 이상 충원되지 않고 있다(<그림 2-8> 참고).

<그림 2-8> 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인력 수의 변화(2017~2022)



주) 2017~2022년 기간 동안 박사급 연구인력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정당연구소만을 기준으로 작성함. 따라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진보정책연구원이 포함되지 않았음. 반면, 2022년 기준으로 박사급 연구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시대전환LAB, 혁신

과미래연구원은 포함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7~2022);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2022년에는 2021년 정기보고와 비교하여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의 총합은 다소 증가했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 대규모 정책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원의 확충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소규모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최근 몇 년간 소규모의 정책연구소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증가되어 왔던 추세와는 다르다. 결국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책연구소의 규모 증가가 박사급 연구원의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박사급 연구원 수가 정책개발과 연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2-4> 2022년 정당연구소 연구원의 경력별 분류(단위: 명, %)

	7년 이상	2년이상 ~7년 미만	2년 미만	합계
여의도연구원	27 (46.6)	8 (13.8)	23 (39.6)	58 (100.0)
민주연구원	9 (45.0)	8 (40.0)	3 (15.0)	20 (100.0)
정의정책연구소	3 (27.3)	7 (63.6)	1 (9.1)	11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0 (0.0)	0 (0.0)	3 (100.0)	3 (100.0)
시대전환 LAB	0 (0.0)	1 (100.0)	0 (0.0)	1 (100.0)
혁신과미래연구원	0 (0.0)	0 (0.0)	4 (100.0)	4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 (100.0)	0 (0.0)	0 (0.0)	2 (100.0)
진보정책연구원	0 (0.0)	1 (50.0)	1 (50.0)	2 (10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표 2-4>는 2022년 정책연구소별 연구원 경력에서 7년 이상 경력자 비율을 보여준다. 7년 이상 경력자의 규모는 여의도연구원(27명, 46.6%)과 민주연구원(9명, 45.0%)이 정의정책연구소(3명, 27.3%)와 애국정책전략연구원(2명, 100%)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시대전환LAB, 혁신과미래연구원, 진보정책연구소는 7년 이상 경력자가 부재했다. 상대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운영 역사가 오래된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에서 7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4) 재정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정책연구소는 수입의 대부분을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받는 정당보조금으로 충당해왔다. 정책연구소의 예산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재정에도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각 정책연구소의 재정 수입 규모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정책연구소의 수입 중 정당지원금의 비율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높다(<표2-5> 참고).

<표 2-5> 2022년 정당연구소 활동 경비(단위: 천원, %)

	수입				지출	잔액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계		
여의도연구원	9,135,219 (79.0)	37,509 (0.3)	2,397,372 (20.7)	11,570,100 (100.0)	7,971,895 (68.9)	3,598,205 (31.1)
민주연구원	9,088,767 (68.7)	6,015 (0.0)	4,144,410 (31.3)	13,239,192 (100.0)	7,113,385 (53.7)	6,125,807 (46.3)
정의정책연구소	948,001 (82.1)	294 (0.0)	206,938 (17.9)	1,155,233 (100.0)	1,109,936 (96.1)	45,297 (3.9)
기본소득정책연구소	73,000 (93.0)	1,218 (1.6)	4,279 (5.5)	78,496 (100.0)	76,250 (97.1)	2,246 (2.9)
시대전환 LAB	10,107 (51.8)	9 (0.0)	9,391 (48.1)	19,508 (100.0)	2,627 (13.5)	16,880 (86.5)
혁신과 미래연구원	266,464 (10.2)	1,964 (0.1)	2,345,483 (89.7)	2,613,911 (100.0)	818,751 (31.3)	1,795,161 (68.7)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6,500 (41.3)	20,001 (50.1)	3,418 (8.6)	39,919 (100.0)	39,732 (99.5)	186 (0.5)
진보정책연구원	100,000 (92.4)	2,630 (2.4)	5,633 (5.2)	108,263 (100.0)	104,090 (96.1)	4,173 (3.9)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2022년 정책연구소별 정당지원금은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420억여원이며, 2022년에 실시된 양대선거에 따른 선거보조금을 제외하고 경상보조금은 465억 3백여만원이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원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배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정당들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 대비 정책연구소 지원금 비율은 국민의힘(46.1%), 더불어민주당(4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의당, 민생당, 시대전환은 법정하한선인 30%를 지급했다. 반면,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경상보조금(3500여만원)을 훨씬 초월하는 규모로 정책연구소 지원금(7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여의도연구원이 91억 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주연구원이 90억 9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소는 9억 5천여만원, 혁신과미래연구원은 2억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기본소득정책연구소(7300만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1600여만원), 시대전환 LAB(1천여만원), 진보정책연구원(1억원)도 정부 보조금을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책연구소의 수입 중 정당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93.0%), 진보정책연구원(92.4%), 정의정책연구소(82.1%) 등 소규모 정책연구소에서 뿐만 아니라 여의도연구원(79.0%)과 민주연구원(68.7%)과 같은 주요 정당의 정책연구소도 역시 정당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전년도 이월금의 비율이 높은 시대전환LAB(48.1%)과 혁신과 미래연구원(89.7%)에서 정당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 전년이월금이 23억 4천여만원으로 정당지원금(2억 6천여만원)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활동경비에서 기타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50.1%)을 차지하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기타 수입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정기보고에서 각 정책연구소의 지출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출한 정책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으로 79억 7천여만원을 지출했으며, 민주연구원(71억 1천여만원), 정의정책연구소(11억여원), 혁신과미래연구원(8억 1천여만원), 진보정책연구원(1억여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7천6백여만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3천9백여만원), 시대전환LAB(2백60여만원) 등의 순으로 지출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2-6〉 2022년 정당별 보조금과 정당정책연구소 지원금(단위: 천원, %)

	총액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 소득당	시대 전환	민생당
총지급액	142,014,599	68,462,710	60,287,310	9,504,040	1,765,491	106,633	69,282	1,819,133
경상보조금	46,503,089	22,231,155	19,806,012	3,160,002	348,508	35,029	34,169	888,215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45,913	22,473,829	19,448,560	3,170,922	1,416,983	35,619	-	-
제8회 지선 선거보조금	46,545,913	22,396,287	19,974,494	3,173,116	-	35,985	35,114	930,918
여성추천보조금	1,539,799	874,641	665,157	-	-	-	-	-
장애인추천보조금	219,971	119,816	100,156	-	-	-	-	-
창년 추천보조금	659,914	366,983	292,931	-	-	-	-	-
총액		9,088,767	9,135,219	948,001	-	73,000	10,107	266,464
경상보조금대비(%)		40.9	46.1	30.0	-	208.4	29.6	30.0
총액 대비비율(%)		13.3	15.2	10.0	-	68.5	14.6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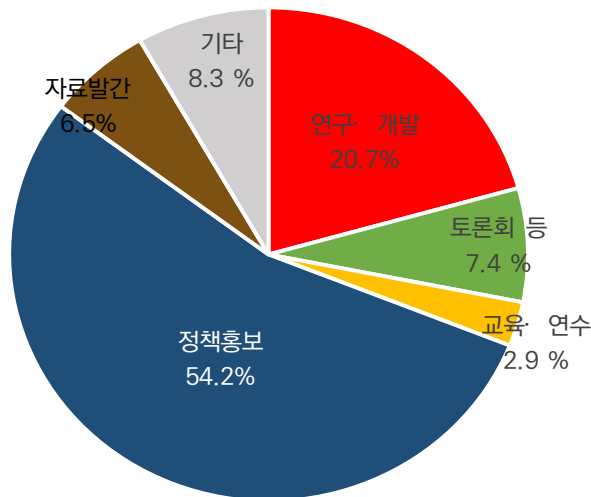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한편, 정책연구소의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은 애국정책전략연구원(99.5%), 기본소득정책연구소(97.1%), 진보정책연구원(96.1%), 정의정책연구소(96.1%) 등 소규모 정책연구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민주연구원(53.7%), 여의도연구원(68.9%) 등 규모가 큰 정책연구소와 혁신과미래연구원(31.3%), 시대전환 LAB(13.5%)에서 낮게 나타났다. 정책연구소 수입대비 지출은 제8회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직접 참여했던 중소 정당에서 높게 나타났던 반면, 직접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2022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10개 정책연구소 가운데 분석 대상이 된 8개 정책연구소의 전체 활동형태별 실적을 연구·개발, 토론회 등 개최실적, 교육·연수 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등 자료 발간,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202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정책홍보(54.2%)였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20.7%), 토론회 등 개최실적(7.4%), 간행물 등 자료발간(6.5%), 교육·연수(2.9%) 등의 순서였다. 개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로 분류된 활동도 8.3%를 차지했다(<그림 2-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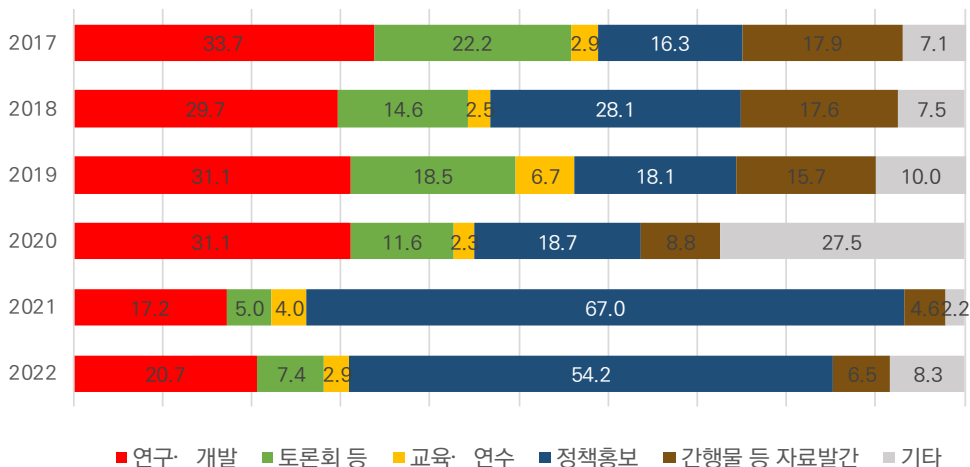
<그림 2-9> 2022년 정책연구소 활동형태별 실적(%)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한편, <그림 2-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비중은 각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2017-2020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활동 형태는 연구·개발 활동이었으나 2021-2022년의 경우 정책홍보 활동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간 정책홍보 경쟁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은 2021년 17.2%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다시 2022년 20.7%로 증가했다. 반면 2020년 이후 간행물 등 자료발간과 토론회 등 실적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교육·연수 활동의 비중은 최근 6년간 실적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0>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변화(2017~202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7~2022).

그러나 <표 2-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2년 개별 정책연구소의 유형별 활동실적은 정책연구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활동실적 전체 건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995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246건), 정의정책연구소(190건), 진보정책연구원(82건) 등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했으며, 혁신과미래연구원(29건), 기본소득정책연구소(21건), 시대전환 LAB(8건), 애국정책전략연구원(2건)이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했다. 이는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 대형 연구원에서 활동 실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의정책연구소와 진보정책연구원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연구원의 규모가 작은 정책연구소도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소별 활동 실적에서 연구소별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여의도연구원은 995건의 활동 실적 가운데 정책홍보 778건(78.2%)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연구·개발 99건(9.9%), 토론회 등 54건(5.4%)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반면 교육·연수 21건(2.1%), 자료발간 5건(0.5%)의 활동비중은 낮았다. 민주연구원은 246건의 활동 가운데 연구·개발 102건(41.5%), 자료발간 67건(27.2%)에 비중을 두었으며 토론회 등 24건(9.8%)과 정책홍보 8건(3.3%), 교육연수 5건(2.0%)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의정책연구소 역시 190건의 활동실적 가운데 연구·개발 98건(51.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정책홍보 26건(13.7%), 토론회 등 13건(6.8%), 자료발간 7건(3.7%), 교육·연수 2건(1.1%)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83건의 활동실적 가운데 정책홍보 31건(37.3%), 토론회 등 14건(16.9%), 자료발간 14건(16.9%), 교육·연수 10건(12.0%)이 이루어졌던 반면 연구·개발은 8건(9.6%)에 불과했다.

나아가 활동 형태에 따라 202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분석해보면 정책연구소별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정책연구소(66.7%)이며, 다음으로 정의정책연구소(51.6%), 민주연구원(4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혁신과미래연구원(13.8%), 여의도연구원(9.9%), 진보정책연구원(9.6%)에서 연구·개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시대전환LAB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서는 전무하다. 물론 이는 정의당, 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홍보 활동에서 여의도연구원(78.2%)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다. 2022년 양대선거 국면에서 정책홍보를 통한 지지층 확대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대전환LAB(37.5%), 혁신과미래연구원(24.1%) 역시도 정책홍보 활동의 비중은 높았으나 활동 실적이 많지 않아 적은 활동으로 비중이 커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양대선거 국면에도 불구하고 민주연구원은 정책홍보활동이 8건(3.3%)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7> 202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단위: 건, %)

	연구 개발	토론회 등	교육 연수	정책 홍보	자료 발간	기타	합계
여의도연구원	99 (9.9)	54 (5.4)	21 (2.1)	778 (78.2)	5 (0.5)	38 (3.8)	995 (100.0)
민주연구원	102 (41.5)	24 (9.8)	5 (2.0)	8 (3.3)	67 (27.2)	40 (16.3)	246 (100.0)
정의정책연구소	98 (51.6)	13 (6.8)	2 (1.1)	26 (13.7)	7 (3.7)	44 (23.2)	190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4 (66.7)	2 (9.5)	2 (9.5)	0 (0.0)	3 (14.3)	0 (0.0)	21 (100.0)
시대전환 LAB	0 (0.0)	1 (12.5)	3 (37.5)	3 (37.5)	0 (0.0)	1 (12.5)	8 (100.0)
혁신과미래연구원	4 (13.8)	7 (24.1)	3 (10.3)	7 (24.1)	7 (24.1)	1 (3.4)	29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0 (0.0)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진보정책연구원	8 (9.8)	14 (17.1)	10 (12.2)	30 (36.6)	14 (17.1)	6 (7.3)	82 (100.0)
합계	325 (20.7)	117 (7.4)	46 (2.9)	852 (54.2)	103 (6.5)	130 (8.3)	1573 (10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 시대전환LAB은 교육·연수(1건), 진보정책연구원은 정책홍보(31건)에서 각각 오기가 있었으며, 본 보고서는 활동 실적 보고 실적 건수를 바탕으로 바로 잡았음.

1) 연구·개발 활동실적

2022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수행 주체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표 2-8> 참고). 2022년 8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전체 325건의 연구·개발 활동실적 가운데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실적은 286건(88.0%), 외부용역 7건(2.2%), 자체와 외부의 공동실적 32건(9.8%)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 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실적은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결과였으며, 외부용역의 비중이 높았던(100.0%) 혁신과미래연구원을 제외하면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일부만이 외부용역 또는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각 연구소별로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99건의 연구·개발 활동 중 자체 연구 97건(98.0%), 자체·외부(공동) 2건(2.0%)으로 대부분 연구가 연구원 자체에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연구원은 전체 102건의 연구·개발 활동 중 자체연구 75건(73.5%), 외부용역 2건(2.0%), 자체·외부(공동) 25건(24.5%) 등으로 공동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전체 98건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자체 연구 96건(98.0%), 외부용역 1건(1.0%), 자체·외부(공동) 1건(1.0%) 등으로 소규모 연구원임에도 자체 연구의 활동건수와 비중에서 모두 높았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은 14건의 연구·개발 활동이 모두 자체적으로 집행한 성과였던 반면, 혁신과미래연구원은 4건 모두 외부용역으로 이루어졌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자체와 자체·외부(공동)이 같은 비율이었다. 반면, 시대전환 LAB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보고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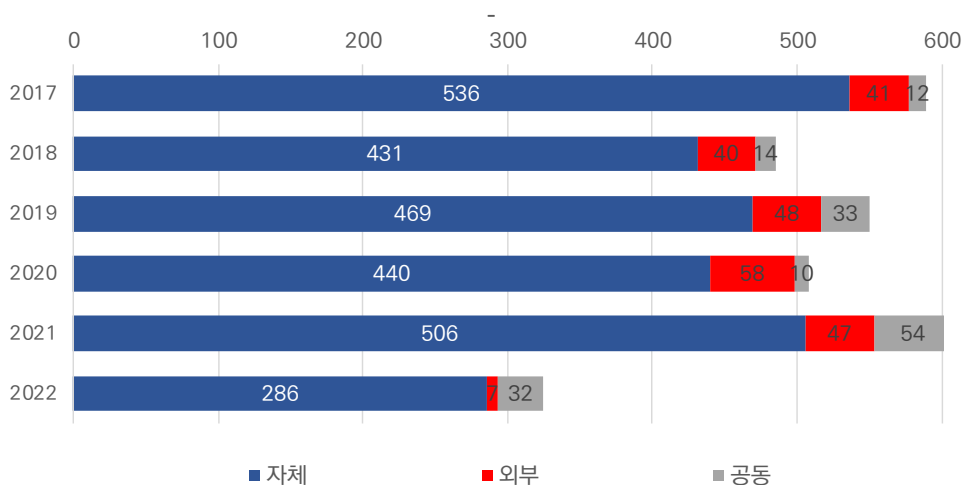
<표 2-8> 2022년 정당연구소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단위: 건, %)

	자체	외부	자체외부 (공동)	합계
여의도연구원	97 (98.0)	0 (0.0)	2 (2.0)	99 (100.0)
민주연구원	75 (73.5)	2 (2.0)	25 (24.5)	102 (100.0)
정의정책연구소	96 (98.0)	1 (1.0)	1 (1.0)	98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4 (100.0)	0 (0.0)	0 (0.0)	14 (100.0)
시대전환 LAB	0 -	0 -	0 -	0 -
혁신과미래연구원	0 (0.0)	4 (100.0)	0 (0.0)	4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0 -	0 -	0 -	0 -
진보정책연구원	4 (50.0)	0 (0.0)	4 (50.0)	8 (100.0)
합계	286 (88.0)	7 (2.2)	32 (9.8)	325 (10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또한 <그림 2-11>에서 2022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최근 6년간의 연구·개발 활동 실적과 비교하면 2022년의 변화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6년간 연구·개발 활동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으나 2022년 양대선거 국면에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 주체의 측면에서 자체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의 수는 감소했음이 나타난다. 이는 2022년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 같은 대규모 정책연구원에서 박사급 연구원의 확충을 통해 정책연구소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의 강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소규모 연구원의 경우 한정된 연구원으로 운영되는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연구소 및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공유를 통해 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11> 2017~2022년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7~2022).

2)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

202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 중 토론회 개최등의 개최활동은 117건이었다(<표 2-9> 참고).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당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8개의 정책연구소가 개최한 117건의 토론회 개최 활동 실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활동은 간담회 65건(55.6%)였으며 토론회 31건(26.5%), 세미나 12건(10.3%), 포럼 3건(2.6%) 등의 순이었다.

또한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에서 정책연구소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연구원 24건, 진보정책연구원 14건, 정의정책연구소 13건의 순이었다. 이외에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각각 2건, 시대전환LAB 1건이 수행되었다.

<표 2-9> 2022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분류(단위: 건, %)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여론조사	기타	합계
여의도연구원	2 (3.7)	50 (92.6)	0 (0.0)	0 (0.0)	0 (0.0)	2 (3.7)	54 (100.0)
민주연구원	20 (83.3)	3 (12.5)	0 (0.0)	1 (4.2)	0 (0.0)	0 (0.0)	24 (100.0)
정의정책연구소	3 (23.1)	4 (30.8)	0 (0.0)	4 (30.8)	0 (0.0)	2 (15.4)	13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2 (100.0)
시대전환 LAB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혁신과미래연구원	0 (0.0)	7 (100.0)	0 (0.0)	0 (0.0)	0 (0.0)	0 (0.0)	7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진보정책연구원	5 (35.7)	1 (7.1)	2 (14.3)	4 (28.6)	0 (0.0)	2 (14.3)	14 (100.0)
합계	31 (26.5)	65 (55.6)	3 (2.6)	12 (10.3)	0 (0.0)	6 (5.1)	1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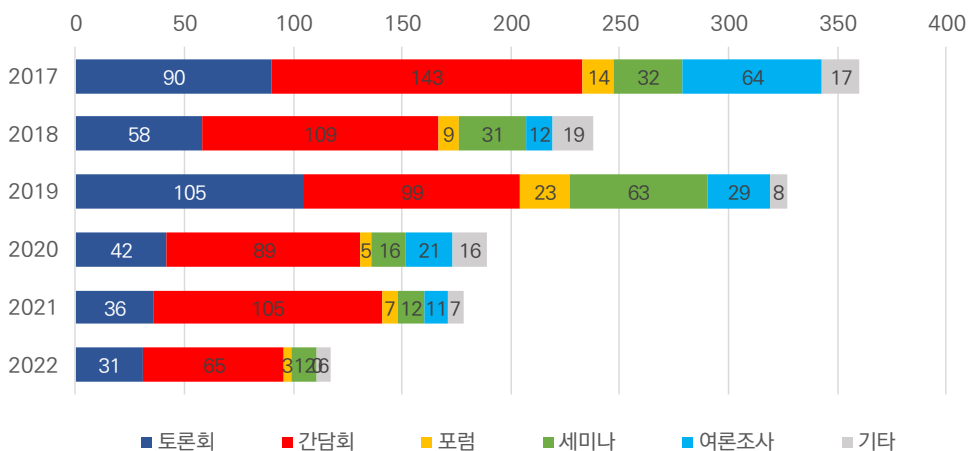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준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54건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 가운데 간담회가 50건(9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민주연구원은 24건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가운데 토론회가 20건(8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진보정책연구원은 14건

의 활동실적 가운데 토론회 5건(35.7%), 세미나 4건(28.6%), 포럼 2건(14.3%), 간담회 1건(7.1%) 등의 순이었으며 정의정책연구소는 13건 가운데 간담회와 세미나가 각각 4건(30.8%), 토론회 3건(23.1%) 순이었다. 이외에 혁신과 미래 연구원은 전체 7건 모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애국정책전략연구소는 전체 2건 모두 세미나를 개최했고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토론회 1건, 세미나 1건을 개최했다. 시대전환LAB은 포럼을 1회 개최했다. 다만, 양대선거 국면에서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이후 정책연구소들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림 2-12> 참고). 특히 이러한 감소는 여론조사 실적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한 활동실적은 2017년 64건에서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21건, 2021년 11건, 2022년 0건 등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체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2> 2017~2020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7~2022).

3) 교육·연수 활동실적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뿐만 아니라 당원과 당직자, 지지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2022년 8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교육·연수 활동은 총 46건

으로 정책연구소의 활동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정기보고에서는 이전 조사와는 다르게 교육·연수 활동 실적을 교육 방법에 따라 집합교육, 현지교육, 통신교육, 그리고 교육 대상에 따라 정예당원교육, 지방당직자 교육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2022년의 경우 교육 방법별로는 통신교육이 26

건(5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집합교육 5건(10.9%), 현지교육 4건(8.7%) 순이었으며 교육 대상에 따라서는 정예 당원교육 10건(21.7%), 지방 당직자 교육 1건(2.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10> 참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통신교육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직자 대상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표 2-10> 2022년 교육 방법별 교육·연수 활동실적(단위: 건, %)

	집합 교육	현지 교육	통신 교육	정예 당원교육	지방 당차교육	합계
여의도연구원	0 (0.0)	1 (4.8)	20 (95.2)	0 (0.0)	0 (0.0)	21 (100.0)
민주연구원	0 (0.0)	0 (0.0)	4 (80.0)	1 (20.0)	0 (0.0)	5 (100.0)
정의정책연구소	1 (50.0)	0 (0.0)	0 (0.0)	1 (50.0)	0 (0.0)	2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시대전환 LAB	0 (0.0)	1 (33.3)	2 (66.7)	0 (0.0)	0 (0.0)	3 (100.0)
혁신과 미래연구원	0 (0.0)	1 (33.3)	0 (0.0)	2 (66.7)	0 (0.0)	3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0 -	0 -	0 -	0 -	0 -	0 -
진보정책연구원	2 (20.0)	1 (10.0)	0 (0.0)	6 (60.0)	1 (10.0)	10 (100.0)
합계	5 (10.9)	4 (8.7)	26 (56.5)	10 (21.7)	1 (2.2)	46 (10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별로 2022년 교육·연수 활동실적을 구분해보면 여의도연구원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통신교육 20건(95.2%)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지교육 1건(4.8%)도 일부 이루어졌다. 진보정책연구원의 교육·연수 활동 실적 10건 가운데 정예당원교육 6건(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방당직자 교육은 1건(10%)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연수 방법으로는 집합교육 2건(20%) 현지교육 1건(10%)이었으며 통신교육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연구원은 5건의 교육·연수 활동은 통신교육 4건(80%)과 정예당원교육 1건(20%)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 시대전환LAB은 3건 가운데 현지교육 1건(33.3%)과 통신교육 2건(66.7%)이 이루어졌으며 혁신과미래연구원은 3건 가운데 현지교육 1건(33.3%)와 정예당원교육 2건(6.7%)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홍보 활동실적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활동은 정책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 성과를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도 공유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22년 8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정책홍보 활동은 85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4.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정기보고에서는 정책연구소에 따라 정책 홍보 건수와 홍보 방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11> 참고).

정책홍보 건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77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활동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보정책연구원 30건, 정의정책연구소 26건, 민주연구원 8건, 시대전환LAB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정책홍보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또한 정책홍보 수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정당 또는 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770건, 90.4%), SNS를 활용하는 방법(70건 8.2%)이 주로 활용되었다. 반면, 전통적인 정책홍보 방법인 보도자료 작성(12건, 1.4%)을 활용하는 방식은 낮게 활용되었으며 책자배포를 통한 정책홍보 활동은 전무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총 778건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는 매일 업데이트하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를 포함한 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홈페이지와 함께 SNS를 활용한 정책홍보 50건

(6.4%)도 이루어졌으며, 보도자료를 통한 전통적인 정책홍보도 2건(0.3%) 활용되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전체 30건의 정책홍보활동을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보도자료를 활용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전체 26건의 정책홍보 활동실적을 보고했는데 전통적인 방식인 보도자료가 10건(3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보도자료 활용 9건(34.6%), 홈페이지 게시 및 SNS 활용 7건(26.9%) 등의 순이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7건의 정책홍보활동 가운데 홈페이지 게시를 주로 활용했는데 보도자료 5건(71.4%)와 SNS 2건(28.6%)을 활용했으며, 시대전환LAB은 전체 3건의 정책홍보활동 모두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했다. 반면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정책홍보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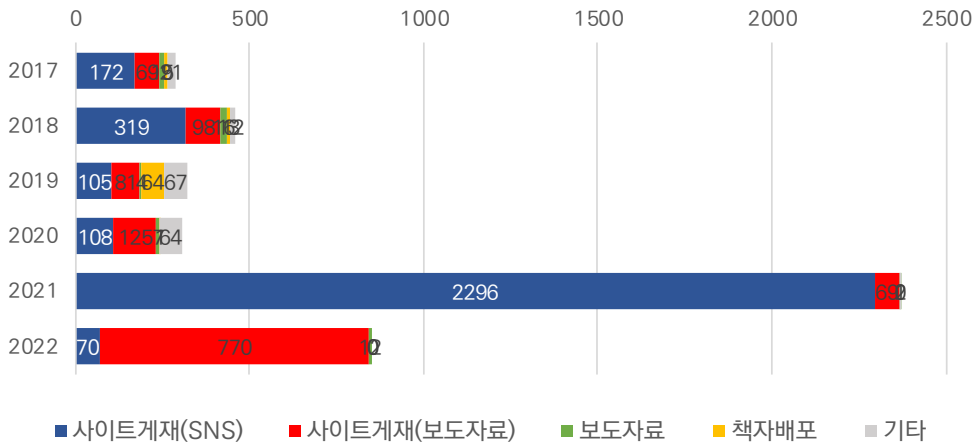
<표 2-11> 2022년 정당연구소별 정책홍보 활동실적(단위: 건, %)

	사이트 게재 (SNS)	사이트 게재 (보도자료)	보도 자료	책자 배포	기타	합계
여의도연구원	50 (6.4)	726 (93.3)	2 (0.3)	0 (0.0)	0 (0.0)	778 (100.0)
민주연구원	8 (100.0)	0 (0.0)	0 (0.0)	0 (0.0)	0 (0.0)	8 (100.0)
정의정책연구소	7 (26.9)	9 (34.6)	10 (38.5)	0 (0.0)	0 (0.0)	26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0 -	0 -	0 -	0 -	0 -	0 -
시대전환 LAB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혁신과 미래연구원	2 (28.6)	5 (71.4)	0 (0.0)	0 (0.0)	0 (0.0)	7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0 -	0 -	0 -	0 -	0 -	0 -
진보정책연구원	0 (0.0)	30 (100.0)	0 (0.0)	0 (0.0)	0 (0.0)	30 (100.0)
합계	70 (8.2)	770 (90.4)	12 (1.4)	0 (0.0)	0 (0.0)	852 (10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한편, <그림 2-13>에서 2022년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실적을 지난 6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2022년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SNS와 보도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대세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추세이다. 반면, 책자배포와 보도자료 활용 등 전통적인 정책홍보 방식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2-13> 정당연구소 정책홍보 방법 비교(2017~202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7~2022)

5)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2022년 8개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자료발간 활동실적은 103건이다. <표 2-1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 103건 간행물 등 발간실적에서 보고서 61건(59.2%), 자료집 27건(26.2%), 기관지 8건(7.8%), 연구논문 4건(3.9%) 등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연구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전체 자료발간 실적이 6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보고서가 49건(7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자료집 14건(20.9%), 연구논문 2건(3.0%), 기관지 1건(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정의정책연구소는 7건의 자료발간 실적 가운데 기관지 4건(57.1%), 보고서 3건(43.9%)으로 기관지의 비중이 높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7건의 자료발간 활동실적 모두 자료집 발간이었으며 여의도연구원은

5건 모두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3건의 발간실적 가운데 자료집 1건(33.3%), 연구논문 2건(66.7%)이었다. 시대전환LAB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자료발간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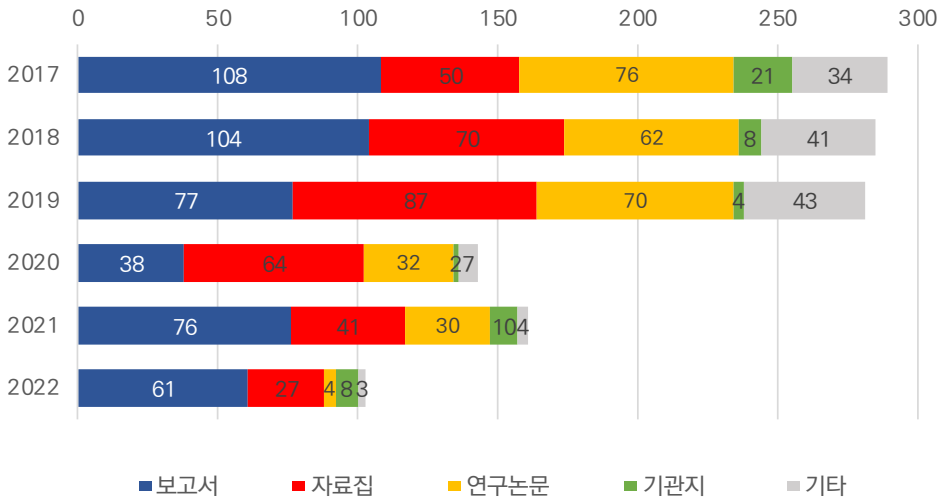
<표 2-12> 2022년 정당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단위: 건, %)

	보고서	자료집	연구 논문	기관지	기타	합계
여의도연구원	5 (10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민주연구원	49 (73.1)	14 (20.9)	2 (3.0)	1 (1.5)	1 (1.5)	67 (100.0)
정의정책연구소	3 (42.9)	0 (0.0)	0 (0.0)	4 (57.1)	0 (0.0)	7 (100.0)
기본소득정책연구소	0 (0.0)	1 (33.3)	2 (66.7)	0 (0.0)	0 (0.0)	3 (100.0)
시대전환 LAB	0 -	0 -	0 -	0 -	0 -	0 -
혁신과미래연구원	0 (0.0)	7 (100.0)	0 (0.0)	0 (0.0)	0 (0.0)	7 (100.0)
애국정책전략연구원	0 -	0 -	0 -	0 -	0 -	0 -
진보정책연구원	4 (28.6)	5 (35.7)	0 (0.0)	3 (21.4)	2 (14.3)	14 (100.0)
합계	61 (59.2)	27 (26.2)	4 (3.9)	8 (7.8)	3 (2.9)	103 (100.0)

출처: 각 정당정책연구소 2022년 정기보고

한편, <그림 2-14>에서 2022년 정책연구소의 자료발간 실적을 지난 6년간 추이와 비교해보면 2020년 자료 발간 활동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2019년까지 연구논문 발간 실적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2020년 이후 연구논문 발간 실적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활동실적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4> 2017~2022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 실적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2017~2022).

Ⅲ. 정당 정책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과 개선사항

본 장에서는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정당과의 연계성과 주요 활동 및 운영방식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양일 동안 전체 8개⁵⁾의 정책연구소 및 정당에 전화와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답변 마감일이었던 7월 17일까지 총 4개의 정책연구소들이 서면 인터뷰를 작성하여 보내왔다. 서면 인터뷰에 답변한 정책연구소와 응답자의 직급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서면 인터뷰의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정책연구소가 전체의 절반 이상임과 동시에 응답자의 직급도 상이하기 때문에 서면 인터뷰의 결과가 전체 정책연구소의 운영현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2장에서 정량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한 각 정책연구소들의 운영과 사업 실적을 보완하는 참고 내용으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3-1> 서면 인터뷰 응답자 현황(단위: 명)

	소장	부소장	연구기획실장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	-	-	1
정의정책연구소	-	-	1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	-	1
혁신과미래연구원	-	-	-	1
합계	0	0	1	3

서면 인터뷰는 크게 1)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중앙당과의 관계, 2)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활동, 3) 2022년 정책연구소 핵심사업, 4) 정책연구소의 개선방안에 대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각 정책연구소의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제1절에서 서술되는 순서는 내용에 따라 서면 인터뷰 문항의 순서와 상이할 수 있다.

5) 민생당의 민주평화연구원은 2023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연구소에 관한 서면 인터뷰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진박신당의 미래한국사회연구원은 당과 연구소 내부사정의 이유로 담당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하였다.

1.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중앙당과의 관계

먼저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중앙당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점과 목표 및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표 3-2>와 같다.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응답자들은 정당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 및 제시 그리고 확산하는 것을 정책연구소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각 정당의 이념과 추구하는 가치 및 비전의 실현을 위해 단기적인 정책 개발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연구소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일반 국민 또는 당원 및 차세대 정치엘리트를 위한 교육 및 육성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민주연구원과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책 및 연구네트워크의 구축도 정책연구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표 3-2> 정책연구소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 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
정의정책 연구소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혁신,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해 창당한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중단기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농민 등 서민 대중을 위한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 및 법안에 심층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신장 등 진보정당으로써 가치 및 비전, 과제 및 담론을 제시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보적 국가 비전 및 전략 등 중장기정책연구와 개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 발표 및 관련 토론회, 정책 교육 및 정책자료출판, 정보화 사업, 연구네트워크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음.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사회 현안에 대한 즉각 입장을 내고 응답하고자 함. 각 현안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분

	석을 통해 당내의 정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료를 생산함.
혁신과미래 연구원	<p>민생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에 따라 비전과 정책의 연구개발, 교육 활동과 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p>또한 당의 싱크탱크로서 민주주의가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기득권 타파에 대한 도전,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생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p> <p>구체적으로 당의 이념, 가치 및 비전 정립에 관한 연,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국가 정책의 주요 의제에 관한 연구, 정책 관련 당내 기구의 활동에 대한 지원, 당 외연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개발, 당원 및 국민 대상 정치의식 함양 교육, 차세대 정치지도자 발굴 및 육성 등을 수행함.</p>

다음으로는 두 가지의 문항을 통해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로는 “「정당법」 제 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는 앞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었다. 이에 대해 모두가 정책연구소의 의견 및 연구 성과가 당내 소속 국회의원의 법안 작성과 발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일정 수준 반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임을 지적하였고,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로 인해 정책연구소의 의견 및 성과가 실질적인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표 3-3〉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과 법안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정 정도 법안에 반영되고 있으나 미진한 상태임.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의제별 TF와 의원실-연구소 구성원 협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과 의원 법안 개정 및 발의에 반영되고 있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의견 및 정책이 당내 소속 정치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개적 입장,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정책연구소의 자문을 받기도 함. 그러나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로 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태임.
혁신과미래연구원	당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연구원 내부의 회의 또는 이사회 등을 통해 정책연구소의 의견 및 관련 사항이 전달되거나 이사장 주재 회의나 당의 당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전달되고 있음.

2. 정책연구소의 운영 평가

일반적인 정책연구소의 업무와 사업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시행하는 사업과 연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및 ‘비정기적’ 사업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특히나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해이기 때문에 각 선거별로 시기를 세분화하여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였던 업무와 사업을 질문하였다. <표 3-4>를 통해 각 정책연구소의 선거(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와 비선거 시기에 시행된 사업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였다. 모든 정책연구소들은 선거 시기에 정책 연구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선 시기에는 주요 의제 선정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지방선거 시기에는 각 지역 현안을 조사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 및 전략 수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의정책연구소는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및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선거 시

기에 맞춰 각 분야별 전문가와 중앙당 및 지역담당자 등으로 정책TF팀을 구성하고 선거 전략 및 정책공약 등의 분석을 수행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비선거 시기에 정책연구소들은 주로 현안이나 정책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연관된 전략 및 정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비선거 시기에 대외적인 동향에 따른 현행 파악 외에도 전문가 등과의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온·오프라인 토론회와 정책간담회,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슈 현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연구원을 대상으로하는 정기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4>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선거/비선거)

정책연구소	제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	비선거 시기
민주연구원	공약 작성, 핵심 어젠더 발굴	지역별 공약 작성	현안 분석보고서,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작성,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정의정책연구소	당원·유권자 대상 각종 정책수요조사, 대선 관련 각종 국민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정의당 후보 FGI 조사, 사회비전 제시 및 공약 개발,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대선 후보 캠페인 진행	각종 정책수요조사, 국민여론조사, 광역 및 기초지역 출마 후보 지지도 및 적합도 및 지역 현안 조사,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선거 후보자 및 시도당·지역위 지원사업 진행	여론조사 분석 및 종합, 중장기 의제 사업 및 전략개발, 분야별 연구 및 동향 보고서 작성, 토론회 추진, 각종 포럼 운영,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등의 사업 진행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대통령선거 주요 의제 선정 및 10대 정책 초안 작성	지방선거 후보자들과의 지역 현안 공유 및 지역 공약	주간 정책 동향 조사, 기후 위기 대응, 기술 혁신, 기

		작성을 위한 정책 자료 제시 및 각종 자문 활동	본소득 등 사회의 분배정책 일반에 대한 조사
혁신과미래 연구원	각 분야전문가, 중앙당, 지역담당자 등 정책TF팀 구성. 선거 지형 파악, 지역분석, 정당 정책 공약 등 선거 전략 분석, 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사업 공모	각 분야전문가, 중앙당, 지역담당자 등 정책TF팀 구성. 선거 지형 파악, 지역분석, 정당 정책 공약 등 선거 전략 분석, 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사업 진행	이슈 현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토론회, 정책간담회, 정책공모전 등 사업 진행, 정기적 연구원 내부 세미나 진행

다음으로 <표 3-5>는 개별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을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대체로 정책연구소들은 연간 정기적인 사업으로 주요 어젠더 조사 및 정책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계간지 발간, 그리고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정기인 사업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현안 분석 등과 같은 비정기적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정책수요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의 경우에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의정책연구소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제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 수요 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별도의 비정기적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청년정책공모전을 실시하거나 분야별 학술용역 진행했다고 답하였다.

<표 3-5> 정책연구소의 연간 사업(정기적/비정기적)

정책연구소	정기적	비정기적
민주연구원	중장기적 전략 및 정책 작성, 국가 핵심 어젠더 연구,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유권자 분석 등	현안 분석, 당원 교육
정의정책	1) 사회경제적 민생의제 및 담론	각종 정책수요 조사 및 국

연구소	제시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사업 및 토론회 상시 진행 2) ‘큰그림 작업반’, ‘의제 TF’ 운영을 통한 당내 의사결정 및 정책개발 3) 당원·유권자 정책수요·정치의 식 조사등 수행 4) 월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 안’, 분기별 진보정책 이론지인 ‘보다 정의’ 발행, 여론동향 보고 서, 연구위원 분야별 이슈브리핑 및 연구보고서, 칼럼 등 작성 5) 분야별 포럼 및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기자단 및 청년포럼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역량 강화 및 청년과의 직간접적 소통에 집중, 노동 및 산업계 연 구소와 연계하여 총선 정책 생산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진행	민여론조사 등 실시, 당원· 유권자 정책선호 및 수요 조사, 20대 청년 및 여성, 무당층(중도층) 등 대상 그 룹별 심층인터뷰(FGI) 조사 등 수행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주간 정책 동향 조사	특정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집중 자료 조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등의 자료 기반 제공
혁신과미래 연구원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진행	청년정책공모전, 분야별 학 술용역 진행

또한 정책연구소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고자 1) 중앙당과의 소통 절차 혹은 의견 조율 및 협력 과정과 2)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였다. <표 3-6>을 통해 정책연구소와 중앙당과의 소통 절차와 협력방식에 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 모든 정책연구소의 사업 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당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연구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중앙당과의 의견 교환 및 협의는 필수적인 것

으로 확인된다. 정책연구소별 중앙당과 협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의 경우 연구소의 사업계획은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관련된 사항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정책연구소는 각 업무 및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실무적인 특성에 따라서 중앙당과 조율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 대표 및 지도부와 연구소장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외에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실장 간에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조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기적 협의는 매주 2회 이상 주로 중앙당 사무총장 주재로 업무조정위원회 개최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는 중앙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 및 연구소 소장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별 이슈 및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중앙당의 요청을 접수하고, 연구소의 입장과 상황,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연구소(연구위원)와 중앙당 정책위원회(정책연구위원) 간 소통 및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책연구소의 최종성과물은 기본적으로 당 대표·부대표 등 지도부 및 국회의원단(상무위), 광역 시도당, 전국위원(회) 등 주요 의결 기구에 회람 및 보고 절차를 거치고, 당론이나 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기획홍보팀, 의원실 등 당내, 원내 유관 단위에서 집행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미래연구원에서는 중앙당의 당 대표가 정책연구소의 당연직 이사장이고, 연구원 정관에 따라 연구원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중앙당과의 의견 조율 및 협력은 이사장과 원장의 조율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당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정책실 등에 파견을 통해 당의 정책개발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6> 정책연구소와 중앙당과의 소통 및 협력 방식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사업계획 등은 연구원 독자적으로 설정, 성과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당 지도부 보고 등
정의정책연구소	업무 및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실무적 특성에 따라 중앙당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 당의 정치 전략과 과제, 지방 의정 전략 등 중장기 연구사업 및 토론회 등을 진행. 긴요한 거시적 결정 사안은 당 대표 및 지도부와 연구소장이 논의하고, 그 외 기본적인 사안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p>및 연구기획실장 간 정기적·상시적 조율과 협의를 진행.</p> <p>중앙당 사무총장 주재로 매주 2회 이상 업무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며, 상시적으로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과 연구소 소장 간 협의를 통해 진행.</p> <p>실무적인 사안은 각 연구위원과 중앙당의 각 부서별 실무담당자, 의원실 보좌진 간 비정기적 회의를 진행.</p> <p>각 시기별 이슈 및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중앙당의 요청을 접수하고, 연구소의 입장과 상황,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음.</p> <p>연 2회 이상 연구소(연구위원)와 중앙당 정책위원회(정책연구위원) 간 소통 및 정책토론을 진행.</p> <p>최종성과물은 기본적으로 당 대표·부대표 등 지도부 및 국회의원단(상무위), 광역 시도당, 전국위원(회) 등 주요 의결 기구에 회람 및 보고 절차를 거치고, 당론이나 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기획홍보팀, 의원실 등 당내, 원내 유관 단위에서 집행.</p>
<p>기본소득 정책연구소</p>	<p>정기적으로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물을 당 홈페이지와 소통 채널에 공유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단 회의 등을 통하여 협력 관계 구축하고 있음.</p>
<p>혁신과미래 연구원</p>	<p>중앙당의 당 대표가 정책연구소의 당연직 이사장이고, 연구원 정관에 따라 연구원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됨.</p> <p>중앙당과 의견 조율 및 협력은 이사장과 원장의 조율을 통해 진행되며, 매년 초 연구원 사업계획안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함으로써 중앙당과 연구원의 사업 및 정책 방향성 등을 조율함.</p> <p>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당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정책실 등에 파견을 통해 정책개발 등을 지원함.</p>

그리고 정책연구소의 사업 결정과 집행방식에 대한 응답 내용을 <표 3-7>에 정리하였다.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정책연구소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사업 결정 방식이 논의 및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과의 협의를 중요한 절차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

적으로 규모가 크고 전통이 있는 민주연구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연구원 실장단, 원장단, 이사회 회의 유기적인 절차를 거쳐 사업이 결정되고 있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 점검회의를 통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점검과 배분을 진행하고, 격주 목요일에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여 일상적인 사업점검 외에 연구소의 상하반기 사업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들은 연구위원들에게 배분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연구기획실장이 총괄 관리하고 연구소 소장이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결재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앙당의 상무위원회와 의원실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매주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비상시 회의를 소집하여 연구소의 사업 결정 및 집행 성과 방안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매년 초 원구원의 부서별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해의 사업 방향성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정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고 운영방식 등을 결정 및 집행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7> 정책연구소의 사업 결정과 집행방식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정기적 사업의 경우 연구원 실장단 회의-원장단 회의-이사회 절차를 거쳐 결정. 보고서나 브리프 등을 통해 홈페이지, 언론 배포 등
정의정책 연구소	반기별로 이사장과 이사진이 참석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 상반기(1월) 이사회는 전년도 결산과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 하반기(7월) 이사회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및 결정. 매주 월요일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및 배분, 연구위원별 주단위 업무보고 및 계획 공유, 일정 공유 등 공유. 격주 목요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소의 상하반기 사업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을 논의하여 결정.

	격주 운영위원회와 매주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담당 연구위원들이 맡은 업무(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간담회·토론회 추진 및 진행)를 배분해서 진행하고 연구기획실장이 총괄 관리하며, 소장이 최종 확인, 결재. 이후 중앙당 상무위원회,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실천적인 사업을 집행.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주1회 정기회의와 비상시 회의를 통해 사업 결정 및 집행 성과 방안 확인
혁신과미래 연구원	매년 초 연구원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해의 사업 방향성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정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고 집행.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에 있어서는 <표 3-8>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수의 정책연구소들이 각 정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동의와 공감을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정책개발 및 의제 발굴에 있어서 연구 전문성과 역량 역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소는 거의 없었으며, 정의정책연구소는 성별, 연령, 학력에 제한은 없음을 밝혔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에는 현재 원외 정당의 연구소라는 한계로 인해 인력충원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비쳤으며, 정책연구소로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3-8>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 기준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필수적인 분야 인원을 기본으로 수요가 있는 분야 충원. 처우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인력 유인 필요
정의정책 연구소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며, 각 분야별 의제개발 및 분석, 정책기획 역량, 진보정당 및 정치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 필요. 분야별 의제 개발 및 정책기획의 전문성과 정의당 강령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요구. 향후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지역

	순환경제 등 분야로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채용 예정.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연구소 자체 역량 기준 평가를 통해 선발. 기본소득당의 정책 및 입장에 대한 동의를 전제.
혁신과미래 연구원	현재 민생당은 원외 정당으로서 2024년 총선에서 원내정당 복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 다음 총선까지 연구원 운영에 있어 최소 인원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정책연구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외 정당도 적정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필요.

마지막으로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한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연구
구소와의 교류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민주
연구원은 독일의 정당 정책연구소 한국지부와 이탈리아 대사관 등과 교류 활
동을 진행하였으며, 각국의 정치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고 답하였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방역
조치의 제약과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로 인하여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는 저조하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정당 및 정책연구소 워크
샵 등 행사를 통하여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연구소와 혁
신과미래연구원은 다른 기관과의 교류 활동은 전무하였다.

<표 3-9> 2022년 정책연구소의 정책네트워크 활동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독일의 정당정책연구소 한국지부, 이탈리아 대사관 등과 교류 각국 정치 현안,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
정의정책 연구소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방역조치로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는 저조하였음.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 및 정책연구소 워크 샵 등의 행사를 진행.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없음.
혁신과미래 연구원	없음.

3. 2022년 정책연구소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

<표 3-10>은 정책연구소의 2022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에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양대선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들이 공통적으로 핵심 어젠더와 정책과제 발굴을 주된 사업으로 다뤘다고 응답하였고, 각 정당의 주요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의제 개발과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민주연구원은 기후 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민주주의, 불평등 등 국가의 핵심 어젠더에 대한 연구 활동에 주력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라는 양대선거에 초점을 맞춰 계간지 출간, 여론조사 등을 활용하여 정책의제 및 담론 제시와 정치전략기획 등 양대선거 대응 핵심사업으로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하였다. 이 외에 정의당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당원 및 유권자 여론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지도부의 정세 상황 이해 및 혁신안 구성을 지원하였고 정당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추가적으로 2022년 10월에 정의당 창당 1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정책의제의 구성이 곧 핵심사업이라고 답하며, 기본소득 탄소세 한국 모델, 기본소득 토지세 한국 모델, 공유지 분형 산업투자 국가 모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제들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모색이 2022년 핵심의제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된 핵심사업으로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진행하였다.

<표 3-10> 2022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국가 핵심 어젠더 연구 사업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민주주의, 불평등 등)
정의정책연구소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의제 및 담론 제시와 정치전략기획을 통한 당의 대응안 검토.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전략과 정책과제, 정세분석 등의 내용을 담아 계간지(보다 정의) 1/4분기에 출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

	<p>대선에서 여론조사에 기반한 당의 전략과 정책 형성을 지원하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및 지역 현안 조사를 통해 출마 후보자의 지역별 판세분석과 지역 현안 파악을 지원.</p> <p>양대선거 선대위 체제 하 지역파견, 전략기획본부, 정책본부, 상황실 등 선거 지원 및 당의 의정활동, 국정감사 등을 적극 지원.</p> <p>정의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이후, 당원 및 유권자 여론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지도부의 정세 상황 이해 및 혁신안 구성을 지원.</p> <p>당내 외 진보정책과 이론의 공론장인 ‘보다 정의’ 3호~6호 발간을 통해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대안, 담론 제시.</p> <p>정당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토론회를 개최</p> <p>양대선거 평가 당원 및 유권자 여론조사 진행</p> <p>하반기 불평등, 돌봄 등 정책개발사업 진행</p> <p>2022년 10월 정의당 창당 10주년 심포지엄을 진행.</p> <p>상시적인 여론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정치의식조사를 진행</p> <p>당의 여론 민감성을 확보를 위해 주 1회 정례적으로 ‘주간여론동향’을 배포하고 있으며, 당면 현안에 대해 국민정책조사를 진행.</p>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정책의제 구성 및 기본소득 탄소세 한국 모델, 기본소득 토지세 한국 모델, 공유지분형 산업투자 국가 모델 연구
혁신과미래 연구원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모색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4. 정책연구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정책연구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1) 정책연구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 2)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 3) 정책연구소의 의사

결정 방식 개선 방향, 3) 정부정책연구기관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에 비해 정당 정책연구소가 가지는 장단점에 관해 물어보았다.

<표 3-11>은 정책연구소가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소에서 연구소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민주연구원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소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은 정당보조금과 같은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거대양당 중심의 불균등한 형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은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당과의 정책협의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연구원 후원금을 모집이 허용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에도 중앙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조직구성에 있어서 당 대표의 당연직 이사취임이나, 현역의원의 연구소 소장 취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재정확장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소 후원회 도입과 민주시민교육을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혁신과미래연구원 역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당보조금을 연구소에 직접적으로 분배하는 형식을 명문화하거나, 보조금을 연구소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정책연구소에 대한 자체적인 후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3-11> 정책연구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독립성을 전제로 당과의 정책협의 시스템 강화 연구원 후원금 모집 허용 필요
정의정책 연구소	정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조직 차원에서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고, 현역의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이사회 총원 비율 제한 등 필요. 재정 차원에서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보조금 교부 방식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 필요. 연구소 후원회 도입(총액 상한선 설정, 기업/법인/단체 기부 엄격 금지, 소액 다수 후원 허용)을 통해 재정확장의 가능성 확보.

	현행법 하 사실상 불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개방 필요.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양당 독식의 국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불균등한 배분 형태의 개선 필요.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구소의 당 내부적인 정책 부서(정책위)의 영향력에서 연구소의 역할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소 재정 측면에서 정당보조금의 배분을 즉시 연구소에 분배하는 것을 명문화하거나, 보조금을 직접 연구소에 지급하거나, 자체적인 후원 등의 검토가 필요.

다음으로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표 3-12>와 같다. 민주연구원은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며, 중앙당 측에 적절한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의 경우에도 정책연구소의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연구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자율성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연구소 조직구성과 연구소 제정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과 부소장의 인사에 있어서 관련 정당 지도부, 지식인 및 전문가의 인사 참여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하며, 정책연구소 인력과 중앙당 정책인력 간 공동운영 보다는 충분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 및 정책활동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 17명의 정책연구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력 충원을 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30%를 정책연구소로 직접적으로 지급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표 3-12>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

정책연구소	응답
민주연구원	조직의 독립성 유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에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
정의정책연구소	<p>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p> <p>국고보조금 30%의 연구소로 직접 지급,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인사에 있어 관련 정당 지도부, 지식인 및 전문가의 인사 참여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함.</p> <p>정책연구소 인력과 중앙당 정책인력 간 공동운영 보다는 충분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 및 정책활동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p>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17개 상임위 대응을 위해 최소(17명) 정책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p> <p>국고보조금 방식 개선: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이 직전선거 2% 이상의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에는 정치생태계의 다양성과 정책경쟁 강화, 협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 생존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100의 국고보조금이 배분되어야 함.</p>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당장의 시급한 사안은 없음.
혁신과미래연구원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함.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연구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자율성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민주연구원은 연구 기획 단계에서 연구위원들의 아이템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정의정책연구소, 기본소득연구소,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특별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다고 답하였다.

끝으로 정부정책연구기관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에 비해 정책연구소가 보유

하고 있는 장단점에 관해 물어보았다. <표 3-13>과 같이 민주연구원은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와 법안 설계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거시적인 연구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집권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와 선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교하여 집권여당에 대한 정책 및 의제에 대한 비판, 접근성과 자율성 우위에 있고, 정책 및 의제 선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미약한 민간정책연구기관에 비교하여 정책 및 의제를 의회에 직접 관철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우위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중앙당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거대양당의 정책연구소와 다르게 군소정당의 연구소로서 국고보조금에 의지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설명하였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해 연구원의 개인 의사에 따른 연구 방향 설정에서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장점이지만, 정보접근권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답하였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정치 현안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요구를 민첩하게 확인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폭넓게 기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원외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구직원으로 모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관련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 부분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 3-13>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급한 사항

정책연구소	장점	단점
민주연구원	구체적인 제도 설계, 법안 설계 역량 높음. 국민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미흡. 거시적인 연구 미흡
정의정책연구소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해 집권여당에 대한 정책 및 의제에 대한 비판, 접근성과 자율성 우위에 있음. 민간정책연구기관과 비해 정책 및 의제를 의회에 직접 관철시키	정당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국고보조금에 의지하다보니 재정상황에 있어서 취약함.

	는 정치 능력의 우위에 있음.	
기본소득 정책연구소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해 연구원 개인 의사에 따른 연구 방향 설 정의 자율성이 보장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해 정보접근권이 떨어짐
혁신과미래 연구원	정치 현안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요구를 민 첩하게 확인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연구 활동을 폭넓게 기획하고 발전시 킬 수 있음.	원외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 한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에 있어서 부분 적인 한계가 존재.

IV.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기보고를 바탕으로 연구소 조직과 재정을 포함하여 연구와 정책개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실적, 교육 및 연수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 등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을 분석했다. 2022년의 경우 9개 정당이 10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활동실적이 나타난 8개 정당의 8개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우선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관련하여 전체 연구인력의 수는 2021년 97명에서 2022년 101명으로 4명 증가했다. 특히 박사급 연구원은 6명, 석사급 연구원이 5명 증가하는 등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충이 두드러졌다. 2020년 이후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인다.

둘째,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여의도연구원(91억3천여만원)과 민주연구원(90억 9천여만원) 등 대형 정책연구소의 경우 정당 지원금이 9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반면,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는 9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 대비 정의정책연구소의 정당지원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며, 정당지원금의 격차는 2021년 대비 더욱 확대되었다. 이외에 혁신과미래연구원 2억 7천여만원과 진보정책연구원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기본소득정책연구소(7300만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1600여만원), 시대전환LAB(1천여만원) 등은 1억 미만에 머물렀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정당지원금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책능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과 시대전환LAB 등 1천만원 정도의 정당지원금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당지원금 규모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2022년 정책연구소의 활동 실적에서 정책홍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산출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면서 정당들의 홍보활동이 활발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순 홍보성 게시물 또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는 홍보활동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산정방식으로 인한 착시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분야, 토론회, 자료발간, 교육·연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의 설립·운영 목적이 정당의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전제하면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가운데 연구·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2년의 경우 자체 연구 비중이 높아진 반면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실적은 감소했다. 이는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 같은 대규모 정책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원 확충으로 정책연구소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와 정책연구소 관계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책연구소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의 문제이다. 당대표가 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이사장이 정책연구소의 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정책연구소에 대한 정당지원금이 중앙당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정책연구소의 관계자 및 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재와 같은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보조금 교부방식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독일의 정당 싱크탱크들 역시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정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위해 정당 싱크탱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문제이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정당지원금을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에 대한 정당지원금은 정당의 의석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정책연구소 간 심각한 재정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원내정당의 경우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석수가 적은 정당의 경우 형식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저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후원회 설치 및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소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당지원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정책연구소나 민간정책연구소들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상위 혹은 중위권의 싱크탱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책연구소는 연구 업적이나 영향력에서 미비하며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들의 연구 성과와 사업 실적 등을 스스로 보고하는 정기보

고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독립적인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연구소에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거나 미흡한 정책연구소에는 국고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부록 1>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에 관한 서면 인터뷰

※ 서면 인터뷰 질문지 및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연구책임자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다빈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⑤ 시대전환LAB
- ⑥ 혁신과미래연구원
- ⑦ 민주평화연구원
- ⑧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⑨ 진보정책연구원
- ⑩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가?

1-1) 제20대 대통령선거

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3) 비선거 시기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5.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다가?

6. 귀 정책연구소가 2022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2022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2022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주연구원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연구책임자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다빈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⑤ 시대전환LAB
- ⑥ 혁신과미래연구원
- ⑦ 민주평화연구원
- ⑧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⑨ 진보정책연구원
- ⑩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침
독립성을 전제로 당과의 정책협의 시스템 강화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독립성 유지 :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에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1-1)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작성
핵심 어젠더 발굴

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공약 작성

1-3) 비선거 시기

비선거시기 - 현안 분석보고서,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작성,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 -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작성, 국가핵심어젠더 연구, 필요한 정책과 입법 사항 발굴, 유권자 분석 등
비정기적 사업 - 현안분석, 당원 교육

5.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국가 핵심 어젠더 연구 사업(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민주주의, 불평등 등)

6. 귀 정책연구소가 2022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등은 연구원 독자적으로 설정, 성과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당 지도부 보고 등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정기적 사업의 경우 연구원 실장단 회의 - 원장단 회의 - 이사회 절차를 거쳐 결정 보고서나 브리프 등을 통해 홈페이지, 언론 배포 등

-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기획단계에서 연구위원들의 아이템 청취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적인 분야 인원을 기본으로 수요가 있는 분야 충원. 처우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인력 유인 필요

9. 2022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 후원금 모집 허용 필요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영되고 있으나 미진함. 당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채널 미흡

11. 2022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정당정책연구소 한국지부, 이탈리아 대사관 등과 교류
각 국 정치현안,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 구체적인 제도 설계, 법안 설계 역량 높음. 국민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
단점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미흡. 거시적인 연구 미흡

○ 정의정책연구소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연구책임자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다빈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⑤ 시대전환LAB
- ⑥ 혁신과미래연구원
- ⑦ 민주평화연구원
- ⑧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⑨ 진보정책연구원
- ⑩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연구기획실장)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 3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우선 배분하는 등 연구소 설립과 활동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정책정당의 지향과 정책경쟁을 통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소는 기본적으로 ①정의당의 진보정치 가치와 이념의 확립, 중장기 정책개발이라는 씽크탱크의 역할, ②새로운 정치의 기반인 정치인력 풀 형성이라는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③당원 교육의 장이라는 정책공동체(최근, 교육연수기능은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맡고 있음) 등 3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각 정당에서 정책연구소의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연구소 운영이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정책정당화에 최소한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 차원에서,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고, 현역의원의 정책연구소장 취임 금지 및 이사회 총원 비율 제한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차원에서, 중앙당을 거치는 정당보조금 교부 방식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대한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소 후원회 도입(총액 상한선 설정, 기업/법인/단체 기부 엄격 금지, 소액다수 후원 허용)을 통해 재정책장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합니다. 셋째, 현행법상 사실상 불가능한 민주시민 교육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혁신,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해 창당한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중단기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성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빈부격차, 양극화, 자산·소득·교육 불평등 등 전방위적인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위상 뒤편에 중산층은 붕괴하고 사회적 약자는 삶의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인간 절멸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기후위기 대응,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신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농민 등 서민 대중을 위한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 및 법안에 심층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정당으로써 가치 및 비전, 아젠다 및 담론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보적 국가비전 및 전략 등 중장기 정책연구와 개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연구발표 및 관련 토론회, 정책교육 및 정책자료 출판, 정보화 사업,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합니다.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국고보조금 30%의 연구소로 직접 지급,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인사에 있어 관련 정당 지도부, 지식인 및 전문가의 인사 참여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17개 상임위 대응을 위해 최소(17명) 정책연구인력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 국고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에 귀속되지만, 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 방식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바, 정의당 배정 국고보조금의 30%가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소 인력과 중앙당 정책인력 간 공동운영 보다는 충분히 분야별 관련 전문가 및 정책활동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록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이지만, 21대 총선에서 정당비례득표율 9.67%를 획득한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교섭단체 중심의 정당보조금 배분체계 하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상임위별 적어도 1인, 총17인의 정책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역량 유지, 정책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이 직전선거 2% 이상의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에는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과 정책경쟁 강화, 협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최소한 생존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100의 국고보조금이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당체제에서 균등배분 방식 외에도, 구조적으로 야당이 의석수 및 득표수 비례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75년부터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자금 조달이 불리한 야당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쇼트머니(하원), 크랜본머니(상원)라는 의정활동비를 여당을 제외한 야당에게만 지급합니다. 일반보조, 사무보조, 의정지원비 등 세가지 형태로 국고 보조금을 정당에 지원하는 스웨덴의 경우, 일반보조금은 의석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보조금 및 의정지원비 지급 시 야당에 유리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배분합니다. 한국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국회의 진입장벽을 통과한 정당에 대해서는 생존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이 살아남아야 소수정당의 정책연구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 진보정당이 살아남아야 의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1-1)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 시기에는 당원·유권자 대상 각종 정책수요조사, 대선 관련 각종 국민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정의당 후보 FGI조사, 사회비전 제시 및 공약개발,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대선 후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시기에는 각종 정책수요조사, 국민여론조사, 광역 및 기초지역 출마 후보 지지도 및 적합도 및 지역현안 조사, 중앙당 및 정책위원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선거 후보자 및 시도당·지역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3) 비선거 시기

정의정책연구소는 비선거시기에 여론조사 분석 및 종합, 중장기 의제 사업 및 전략개발, 분야별 연구 및 동향보고서 작성, 토론회 추진, 각종 포럼 운영,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으로 첫째, 사회적 약자 및 서민 대중, 중산층 회복을 위한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대기업 규제 등 각종 갑질 근절,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경제적 민생의제 및 담론 제시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사업 및 토론회를 일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큰그림 작업반', '의제 TF'를 운영하여, 당내외 전문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좀 더 긴 안목으로 한국사회를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당의 향후 전략 마련과 장기전망, 성장 프로그램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당내 의사결정 및 정책개발, 전략적 판단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셋째 당원·유권자 정책수요·정치의식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넷째, 일상적으로 월별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분기별 진보정책 이론지인 '보다 정의' 발행, 여론동향 보고서, 연구위원 분야별 이슈브리핑 및 연구보고서, 칼럼 등을 작성합니다. 다섯째, 분야별 포럼 및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청년기자단 및 청년포럼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역량 강화 및 청년과의 직간접적 소통에 집중합니다. 특히, 노동 및 산업계 연구소와 연계하여 총선 정책 생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정기적 사업으로, 각종 정책수요 조사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당원·유권자 정책 선호 및 수요 조사, 20대 청년 및 여성, 무당층(중도층) 등 대상 그룹별 심층인터뷰(FGI)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대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 각 지역출마자 후보 지지도 및 적합도 조사, 전국여론조사, 정당지지도 편성전략 수립을 위한 대국민 정치인식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5.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정책연구소 2022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사업은 21대 대선과 제8회동시지방선거에서 정책의제 및 담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21대 대선과 제8회동시지방선거에 대응하여 정치전략 기획을 통해 큰 틀에서 당의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보다 정의’를 통해 당의 21대 대선과 제8회동시지방선거 전략과 정책과제, 정세분석 등이 담긴 계간지를 1/4분기에 출간했습니다. 또한 21대 대선과 제8회동시지방선거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대선에서 여론조사에 기반한 당의 전략과 정책 형성을 지원하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및 지역 현안 조사를 통해 출마 후보자의 지역별 판세분석과 지역현안 파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소는 21대 대선과 제8회동시지방선거 양대선거 선대위 체제 하 지역파견, 전략기획본부, 정책본부, 상황실 등 선거를 지원하였습니다. 양대선거 이후 당의 의정활동, 국정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양대선거 이후 정의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당원 및 유권자 여론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지도부의 정세상황 이해 및 혁신안 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당내외 진보정책과 이론의 공론장인 ‘보다 정의’ 3호~6호 발간, 이를 통해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대안,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의당의 양대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소는 정의당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양대선거 평가 당원 및 유권자 여론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내내 불평등, 돌봄 등 정책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정의당 창당 10년을 기념하여 정의당 창당 10주년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상시적인 여론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정치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당의 여론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1회 정례적으로 ‘주간여론동향’을 배포하고 있으며, 당면 현안에 대해 국민정책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및 현안에 대응한 각종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당 지원을 강화해했습니다. 21대 대

선과 제8회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계로 당을 뒷받침해줍니다.

6. 귀 정책연구소가 2022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각 업무 및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실무적 특성에 따라 중앙당과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해 당의 정치 전략과 과제, 지방의정 전략 등 중장기 연구사업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합니다. 당이 시급하게 내놓은 전략과 같은 굵직하고 긴요한 거시적 결정사안은 당대표 및 지도부와 연구소장이 논의합니다. 그 외 기본적인 사안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실장 간 정기적·상시적 조율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실무적인 사안은 각 연구위원과 중앙당의 각 부서별 실무담당자, 의원실 보좌진 간 비정기적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조율이나 협의는 중앙당 사무총장 주재로 매주 2회 이상 진행되는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시기별 이슈 및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중앙당의 요청을 접수하고, 연구소의 입장과 상황,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 등 중앙당의 전략적인 정치적 판단과 메시지 생산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이슈에 따라 직접 상무위원회에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연구소에서 생산된 전략과 입장을 보고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중앙당과 회의 빈도는 기본적으로 매주 2회 이상 진행되는 정기 업무조정회의가 있으며, 그 외 상시적으로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과 연구소 소장 간 협의회가 진행됩니다. 연 2회 이상 연구소(연구위원)와 중앙당 정책위원회(정책연구위원) 간 소통 및 정책토론을 진행합니다.

최종성과물의 활용방식은 기본적으로 당대표·부대표 등 지도부 및 국회의원단(상무위), 광역시도당, 전국위원(회) 등 주주의결 기구에 회람 및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최종성과물이 당론이나 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기획홍보팀, 의원실 등 당내, 원내 유관단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정책이슈 및 의제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당대표 및 국회의원의 각종 언론 및 SNS 등 메시지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정의정책연구소는 반기별로 이사장과 이사진이 참석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1월)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하고, 하반기(7월)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 결정합니다.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취임 및 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사진 및 부소장(소장 추천) 임명은 이사장(소장과 논의)이 결정하고 이사회 선출 절차를 밟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매주 월요일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및 배분, 연구위원별 주단위 업무보고 및 계획 공유, 일정 공유 등을 합니다. 또한 격주 목요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상적인 사업 및 업무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소의 상하반기 사업계획 및 중점 추진사업을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격주 운영위원회와 매주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담당 연구위원들이 맡은 업무(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간담회·토론회 추진 및 진행)를 배분해서 진행하고 연구기획실장이 총괄 관리하며, 소장이 최종 확인, 결재합니다. 이후 중앙당 상무위원회,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실천적인 사업을 집행합니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는 연구소 의사소통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우선, 공통적으로 각 분야별 의제개발 및 분석, 정책기획 역량, 진보정당 및 정치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성별이나 연령,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 의제개발 및 정책기획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정의당 강령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지역순환경제 등 분야로 더욱 폭넓게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9. 2022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정책연구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회계관리를 엄격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의제별 TF와 의원실-연구소 구성원 협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과 의원 법안 개정 및 발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1. 2022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코로나 팬데믹 지속으로 인해 비대면 방역조치가 사회적 규범이었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는 저조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 및 정책연구소 워크숍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권여당의 정책 우선순위와 선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비교하여 정당정책연구소는 집권여당에 대한 정책 및 의제에 대한 비판, 접근성과 자율성 우위에 있습니다. 정책 및 의제 선정에서 자유롭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미약한 민간정책연구기관과 비교해 정책 및 의제를 의회에 직접 관철시키는 정치 능력의 우위에 있습니다.

거대양당 정당정책연구소와 달리 소수정당 정당정책연구소의 단점은 국고보조금에만 의지하다 보니 재정상황이 취약합니다. 또한 한국정치에서 전반적으로 각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연구책임자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다빈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4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⑤ 시대전환LAB
- ⑥ 혁신과미래연구원
- ⑦ 민주평화연구원
- ⑧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⑨ 진보정책연구원
- ⑩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3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속 정당에서는 연구소의 연구와 입장이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활용된다고 보이나, 타 정당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음.
법적, 제도적 장치, 현실적 조건 부문에서는 양당 독식의 국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불균등한 배분이 문제라고 생각함.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당의 특성상 사회 현안 문제에 즉각 입장을 내고 응답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음. 현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분석을 통해 소속 정당의 정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료 생산.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시급한 사안은 없음.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까?

1-1)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선거 주요 의제 선정 및 10대 정책 초안 작성

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후보자들과의 지역 현안 공유 및 지역 공약 작성을 위한 정책자료 제시 및 각종 자문활동

1-3) 비선거 시기

주간 정책 동향 조사. 주된 테마로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 혁신, 기본소득을 비롯한 사회의 분배정책 일반에 대한 조사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주간 정책 동향 조사
비정기적으로는 특정 이슈에 대해, 실시간 대응 및 집중 자료 조사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등의 자료 기반 제공

5.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책의제 구성이 곧 핵심사업이었음. 기본소득 탄소세 한국 모델, 기본소득 토지세 한국 모델, 공유지분형 산업투자 국가 모델 연구

6. 귀 정책연구소가 2022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는 정책연구소 연구결과물을 홈페이지와 소통채널에 공유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단 회의등을 통하여 협력 관계 구축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주1회 정기회의와 비상시 회의를 통해 사업 결정 및 집행 성과 방안 확인

-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연구소에서는 없다고 봄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당의 정책 및 입장에 대한 동의를 전제. 연구소 자체 역량기준 평가를 통해 선발.

9. 2022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책연구소 운영 방식 속에서 특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수 정당이기에 때문에 법안 발의로 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나,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정책연구소의 의견 및 정책을 적극 반영함.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개적 입장,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정책연구소의 자문을 받음

11. 2022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 없음.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정책연구기관에 대비해서는 정보접근권이 떨어지나, 연구원 개인 의사에 따른 연구 방향설정의 자율성은 보다 보장된다고 봄. 민간정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음.

○ 혁신과미래연구원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본 서면설문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보고서 작성과 정책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연구책임자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다빈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선생님께서 소속된 정책연구소는 어디입니까?

- ① 민주연구원
- ② 여의도연구원
- ③ 정의정책연구소
- ④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⑤ 시대전환LAB
- ⑥ 혁신과미래연구원
- ⑦ 민주평화연구원
- ⑧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⑨ 진보정책연구원
- ⑩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정책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소장
- ② 부소장
- ③ 연구위원
- ④ 기타 ()

※ 다음의 12개 항목에 대하여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보고서에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1.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가 명실상부한 정당 정책 산출의 핵심 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가 정당의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연구소는 독립적 법인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지향점이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또한 정당의 정체성을 구현할 정책 개발과 연구라는 명확한 미션이 있는 만큼 정책연구소는 각 당의 씽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론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당론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불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구소의 당 내부적인 정책 부서(정책위)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구소의 역할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 제도적 또는 현실적 조건으로, 연구소 재정 측면에서는 선관위에서 분기별로 정당에 제공되는 보조금에서 배분 즉시 연구소에 분배하는 것을 명문화하거나, 보조금을 직접 연구소에 지급하거나, 자체적인 후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2. 귀 정책연구소가 지향하는 정당 정책연구소로서의 지향과 목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민생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에 따라 비전과 정책의 연구개발, 교육 활동과 인재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민생당의 싱크탱크로서 민주주의가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기득권 타파에 대한 도전,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생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의 이념, 가치 및 비전 정립에 관한 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연구 ▲국가 정책의 주요 의제에 관한 연구 ▲정책 관련 당내 기구의 활동에 대한 지원 ▲당 외연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개발 ▲당원 및 국민대상 정치의식 함양 교육 ▲차세대 정치지도자 발굴 및 육성 등이다.

3. 많은 정당 및 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정당의 연구소라는 특성상 정당의 정치 행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연구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성 유지가 우선이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선거 시기'와 '비선거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까?

1-1) 제20대 대통령선거

각 분야전문가, 중앙당, 지역담당자 등 정책TF팀을 구성. 정책TF에서는 선거지형파악, 지역분석, 정당정책공약 등 선거 전략 위주로 분석합니다. 또한 분석에 있어 필요시 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사업을 공모

1-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분야전문가, 중앙당, 지역담당자 등 정책TF팀을 구성. 정책TF에서는 선거지형파악, 지역분석, 정당정책공약 등 선거 전략 위주로 분석합니다. 또한 분석에 있어 필요시 여론조사와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였다.

1-3) 비선거 시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토론회, 정책간담회, 정책공모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한 정기적 연구원 내부 세미나(직원)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 사업으로 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비정기적 사업으로는 청년 정책공모전, 분야별 학술용역을 진행하였다.

5. 귀 정책연구소의 2022년도 주요 정책의제와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의제는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모색과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 용역 및 토론회,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6. 귀 정책연구소가 2022년 사업을 계획,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당과 어떠한 소통 절차 혹은 의견조율 및 협력과정을 가졌습니까? 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미래연구원은 민생당 산하 정책연구원으로서 중앙당 당대표가 당연직 이사장이고 연구원 정관에 따라 연구원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중앙당과 의견조율 및 협력은 이사장과 원장의 조율을 통해 진행되며, 매년 초 연구원 사업계획안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함으로써 중앙당과 연구원의 사업 및 정책 방향성 등을 조율한다. 또한,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당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정책실 등에 파견을 통해 정책개발 등을 지원한다.

7. 귀 정책연구소 내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결정, 집행, 성과 확산 방식 등의 결정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매년 초 연구원 각 부서의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한해의 사업 방향성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정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2) 정책연구소 내 의사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고용 및 충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구인력 충원 및 활용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생당은 원외 정당으로서 2024년 총선에서 원내정당 복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 다음 총선까지 연구원 운영에 있어 최소 인원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외정당도 적정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9. 2022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 경비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당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활동 경비 지출방식 및 항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의 수입은 대부분 경장보조금 즉 정당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기타수입 또한 일부 은행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지출방식 중 대부분 사업이 “정책개발비”계정 과목으로 분류 되는데 정책연구소의 연구직의 인건비 또한 정책개발비로 분류된다.(중앙선관위회계안내) 연구직의 인건비는 정책개발비 계정과목이 아니라 “인건비계정”으로 분류를 해야 실제 연구사업 지출 금액 부분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계정분류 중 전년도이월금은 있는데 선거가 있을 시 당해연도 회계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연도이월금” 구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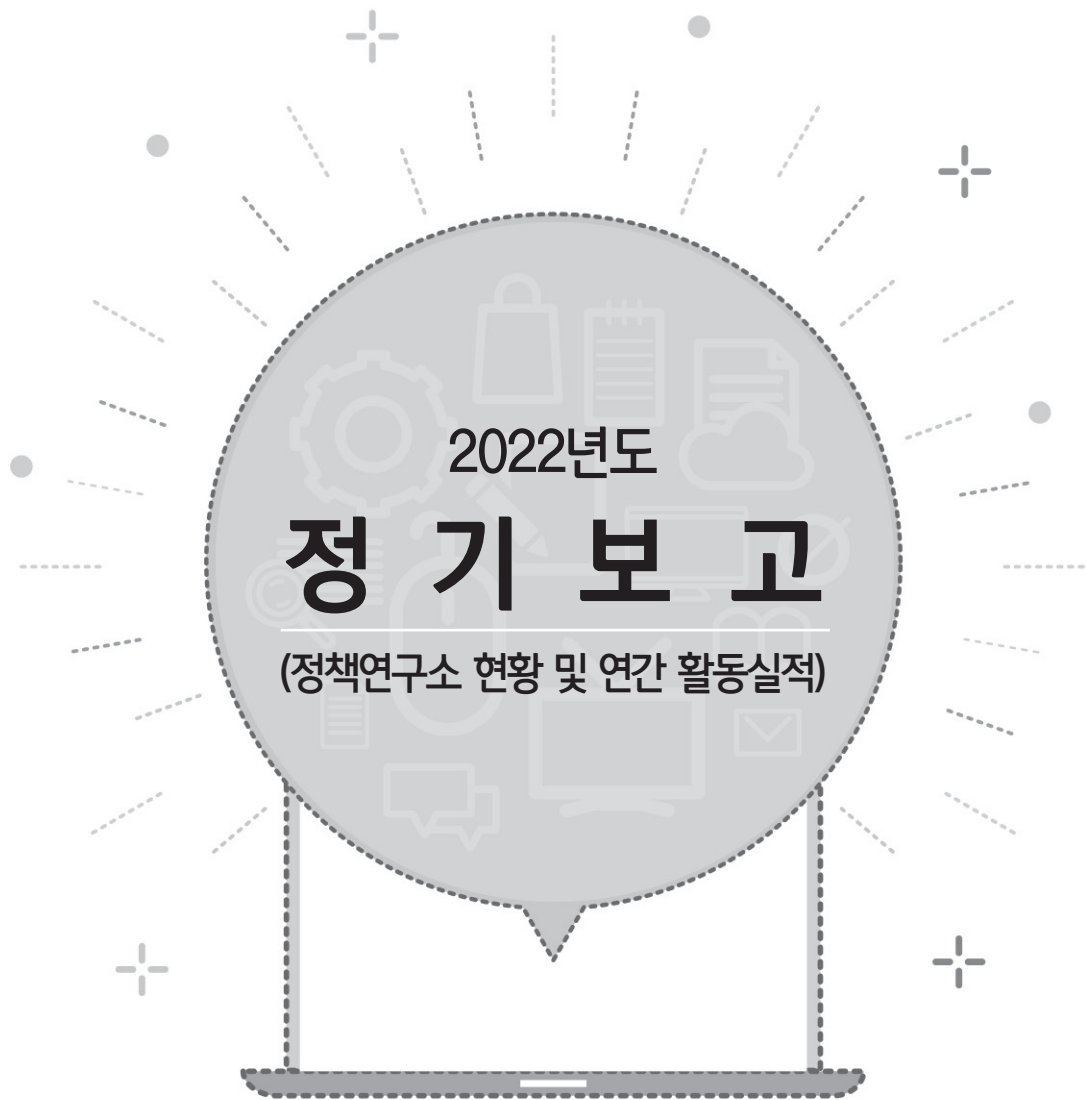
10. 귀 정책연구소의 연구는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정책, 공약, 법안 개발 및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당의 대표는 연구소의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연구원 내부의 회의 또는 이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연구원 자체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당의 당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전달하고 있다. 현재 혁신과미래연구원은 이사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11. 2022년도 귀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류 목적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귀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연구기관(한국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민간정책연구기관(아산정책연구원,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등)에 비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정책연구원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국민들의 정치 요구를 현실로 느낄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을 폭넓게 기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단점으로는 원외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 직원으로 모두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시 부분적 한계가 있다.



2022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민주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8층, 10층			v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16	7년 이상 : 9	정규직 : 55	
석사급: 4	2년 이상~7년 미만 : 8	비정규직 : 4	
기 타: 0	2년 미만 : 3		
합 계: 20	합 계 : 20	합 계: 59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9,088,767,091	6,014,534	4,144,410,213	13,239,191,838	7,113,384,607	6,125,807,231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2. 1. 1.~12. 31.)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02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2021.11.1~2022.1.5.	산자위	대통령선거 소상공인분야 공약	공동	5쪽	별첨1
2021.11.1~2022.1.5.	산자위	대통령선거 중소기업 공약	공동	7쪽	별첨2
2021.11.1~2022.1.10.	산자위	한국형 PPP	공동	7쪽	별첨3
2021.11.1~2022.1.10.	산자위	청년 온라인 한상 10만 명 양성	공동	3쪽	별첨4
2021.11.1~2022.1.17.	정무위	공정위 감독권한 지자체 이양	공동	2쪽	별첨5
2021.11.1~2022.2.15.	정무위/ 기재위	신용대회복	공동	9쪽	별첨6
2021.12.1~2022.1.19.	상임위 전체	서울시장선거 공약	공동	28쪽	비공개
2021.12.1~2022.1.30.	정무위	정치행정 분야 공약작성	자체	30쪽	별첨7
2021.12.26~2022.1.7.	산자위/ 정무위/ 기재위	청년특허은행 설립	자체	2쪽	별첨8
1.1~2.20	정무	정책전략 조사(8회)	공동	672쪽	별첨9
1.2~1.10.	정무위	정치 분야 대선공약 발표문	자체	10쪽	별첨10
1.2~1.17.	행안위	생계형차량 주정차단속 유예	공동	2쪽	별첨11
1.2~1.17.	산자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번역지원서비스 실시	공동	2쪽	별첨12
1.2~2.3.	산자위	전시산업 육성	공동	9쪽	별첨13

1.2.~2.7.	정무위/ 기재위	대출총량 할당제 폐지	자체	5쪽	별첨14
1.3.~1.15.	정무위	대통령의 자격 1	자체	10쪽	비공개
1.2.~1.21.	정무위	대통령의 자격 2	자체	10쪽	비공개
1.5.~1.15.	환노위	증간소음 해결 공약	자체	10쪽	별첨15
1.10.~1.18.	환노위	윤석열 정부의 편자, 독단, 분열의 노동계약	자체	6쪽	별첨16
1.10.~1.30.	산업위	신산업정책	자체	10쪽	비공개
1.16~1.30.	산자위	무분별한 악성리뷰 퇴출	공동	9쪽	별첨17
1.16.~1.20.	정무위	대선전략보고서 1	자체	6쪽	비공개
1.17.~1.28.	정무	2030 청년정책 여론조사	공동	113쪽	별첨18
1.20.~1.22.	정무위	대선전략보고서 2	자체	10쪽	비공개
1.20.~1.25.	환노위	윤정부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확대, 정확한 인력수요 파악이 우선	자체	5쪽	별첨19
1.25.~1.30.	정무위	대선전략보고서 3	자체	10쪽	비공개
1.30~2.5.	정무위	대선전략보고서 4	자체	10쪽	비공개
2.1.~2.28.	정무	대선전략 수립을 위한 전화조사(2회)	공동	120쪽	별첨20
2.3.~2.20.	정무위	주식시장 활성화	자체	8쪽	비공개
2.7.~2.18.	정무	대선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공동	80쪽	별첨21
2.7.~2.18.	정무	대선 정책 및 공약 타겟층 유권자 여론조사	공동	56쪽	별첨22

2.10.~2.15.	정무위	대선전략보고서 5	자체	10쪽	비공개
2.15.~2.20.	정무위	대선전략보고서 6	자체	10쪽	비공개
2.15.~2.20.	정무위	대선 방송토론문 작성	자체	20쪽	비공개
2.19.~2.26.	여가위	아이돌봄비용 세액공제 공약	자체	6쪽	별첨23
2.20.~2.27.	보건복지 위	어린이집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공약	자체	8쪽	별첨24
3.10.~3.20.	정무위	대선평가보고서	자체	25쪽	비공개
3.10.~4.26.	환노위	(지선공약 개발) ①청년위케이션센터 설치 ②5대 영역의 '청년일자리 plus' 지원 의무화 ③지역인재의무채용제 개선	자체	6쪽	비공개
3.20.~3.30.	여가위	대선평가: 2030여성	자체	7쪽	비공개
3.20.~4.8.	정무	지방선거 전화면접 여론조사	공동	50쪽	별첨25
3.20.~4.25.	산자위	지방선거 중소기업분야 공약	공동	16쪽	별첨26
3.20.~4.18.	산자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자체	6쪽	별첨27
3.28.~4.15.	정무	지방선거 우선추진 정책선정 여론조사	공동	61쪽	별첨28
3.30.~4.13.	보건복지 위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혁, 전 국민 주치의 제도	자체	8쪽	별첨29
4.4.~5.16.	정무	전국 유권자 지도	공동	800쪽	별첨30
4.10.~4.20.	국토위	규제자유특구 시즌 2	자체	4쪽	비공개
4.20.~4.29.	정무위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 5대 쟁점	자체	8쪽	별첨31

4.15.~5.6.	산자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자체	6쪽	별첨32
4.18.~5.12.	보건복지위	시민기본권으로서의 장애 관련 입법 및 우선추진과제	자체	11쪽	별첨33
4.20.~5.15.	정무위	6.1 지방선거 전략보고서	자체	30쪽	비공개
4.20.~5.10.	정무위	지방선거 정치 분야 공약	자체	20쪽	별첨34
5.18.	기재위	꼼수 추계, 국가안보 뒷전,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추경예산안	자체	6쪽	별첨35
4.24.~5.24.	환노위	‘청년’ 이 원하는 청년일자리정책	자체	9쪽	별첨36
5.19.	기재위	모두가 역세권 도보 10분 내 도시철도망 구축 및 지하철역사 신설	자체	1쪽	별첨37
5.20.	기재위	초과세수 53조 원 vs. 세수오차 64조 원	자체	7쪽	별첨38
6.3.~6.30.	정무위	지방선거 평가보고서	자체	30쪽	별첨39
6.8.~6.24	기재위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대기업 감세	자체	6쪽	별첨40
6.10.~6.26.	기재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방안 검토	자체	3쪽	비공개
6.14.	기재위	국민 1인당 124만 원의 세수오차. 무능인가, 기획인가	자체	6쪽	별첨41
6.15.~6.29.	정무위	지방선거 평가 여론조사	공동	64쪽	별첨42
6.20.~7.1.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인식 여론조사	공동	178쪽	별첨43
6.28.	기재위	팩트체크: 0.01% 재벌의 법인세 실질부담이 높은가	자체	7쪽	별첨44
7.3.~7.15.	정무위	경찰국 설치 문제점	자체	8쪽	별첨45

7.1.~8.30.	환노위	중고령층을 위한 '보편타당한' 일자리 정책 제안 -일자리지속가능성·고용가능성· 근로가능성제고방안	자체	33쪽	별첨46
7.15.~8.16.	상임위 전체	민주당 강령 개정	자체	28쪽	별첨47
7.15.~8.27.	상임위 전체	새로운 민주당 플랜 어젠다	자체	95쪽	비공개
8.1.~8.17.	정무위	기업인보증추심 일괄면제	자체	3쪽	비공개
8.1.~8.19.	정무위	새 정부 출범 100일 국민인식 여론조사	공동	98쪽	별첨48
8.3.	기재위	재정준칙 강행하면 재정위기 못 넘는다	자체	8쪽	별첨49
8.16.~8.31.	정무위	새로운 민주당 플랜 어젠다 인식조사	공동	98쪽	별첨50
9.1.~9.5.	산자위	서울지역 핵심 공약	자체	4쪽	별첨51
9.5.~9.13.	보건복지 위	위기에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 긴급한 혁신이 필요하다	자체	9쪽	별첨52
9.6.~10.5.	행안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형대통령제에서 정치보복행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자체	18쪽	비공개
9.10.~9.15.	농수위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는 쌀값 폭락,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체	6쪽	별첨53
9.10.~10.5.	환노위	'23년 청년일자리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자체	9쪽	별첨54
9.12.~11.11.	법사위	정치혁신(안)	자체	90쪽	비공개
9.13.~9.20.	보건복지 위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 강화	자체	8쪽	별첨55
9.20.~12.20.	국교위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자산 부문)	외부전문 가	48쪽	별첨56
9.20.~12.20.	환노위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노동개약, 장시간근로의 합법화	자체	8쪽	별첨57

9.23.	기재위	멀쩡한 내 집 팔고 셋방살이? 국유재산 매각확대 재고해야	자체	7쪽	별첨58
9.29.~10.28.	보건복지 위	육아기(만8세 이하)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자체	6쪽	별첨59
10.1.~1.5.	기재위	위기의 가계부채, 특단의 가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자체	6쪽	별첨60
10.1.~10.12.	정무위	개미 올리는 물적 분할, 반쪽짜리 정부대책	자체	6쪽	별첨61
10.12.~11.11.	법사위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감사원 개혁방안 -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확립	자체	8쪽	별첨62
10.20.~11.10.	산업위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응방안	자체	5쪽	별첨63
10.21.~10.26.	기재위	깡통전세 위험지역, 긴급대책을 마련하라	자체	6쪽	별첨64
10.31.~11.15.	정무위	당 지지도 제고 위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공동	180쪽	별첨65
11.1.~11.3.	기재위	김진태 발 경제위기, 금융안정대책 시급하다	자체	5쪽	별첨66
11.1.~11.7.	보건복지 위	이태원참사(10·29참사)는 사회재난, 정부는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	자체	5쪽	별첨67
11.3.~11.8.	정무위	국정조사, 정쟁이 아닌 애도	자체	4쪽	별첨68
11.6.~12.6.	환노위	‘안전하게 일할 권리’ 외면하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논쟁	자체	10쪽	별첨69
11.8.~11.14.	기재위	민생회복긴급프로그램 추진제안	자체	3쪽	비공개
11.13.~12.12.	과방위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언론의 자유 보장방안 -MBC·YTN·TBS등 공영방송사의 독립성 보장	자체	7쪽	별첨70
11.20.~11.25.	기재위	윤 정부 안심전환대출, 무능정책의 표본	자체	6쪽	별첨71
11.20.~12.20.	기재위	윤석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물가대책, 오히려 물가지수 상승	자체	6쪽	별첨72
12.1.~12.8.	환노위	업무개시명령 즉시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재협상하라	자체	6쪽	별첨73

12.1.~12.23.	행안위/ 기재위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7쪽	비공개
12.3.~12.7.	정무위	법왜곡죄 도입	자체	7쪽	별첨74
12.7.~12.15.	환노위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소득 부문)	외부전문 가	74쪽	별첨75
12.9.~12.16.	보건복지 위	서민엔 의료비 폭탄, 부자만 ‘질 좋은 의료’ 보장하는 윤석열 發 의료개혁	자체	7쪽	별첨76
12.18.~12.22.	환노위	통계 왜곡한 윤 정부, 추가연장근로제 즉시 폐지하라	자체	5쪽	별첨77
12.21.~12.27.	보건복지 위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실상은 초부자(super rich) 감세를 통한 복지축소	자체	6쪽	별첨78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78부.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별첨’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24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3.15.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대선평가전문가 간담회	대선 패배요인	
평가간 담회	3.18.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시민발언대<시즌1> 할말있어요! 1차 평가간담회	시민발언대 반응 등 평가 및 향후 운영에 대한 발전 적 방안 모색	
평가간 담회	3.21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시민발언대<시즌1> 할말있어요! 2차 평가간담회	시민발언대 반응 등 평가 및 향후 운영에 대한 발전 적 방안 모색	

토론회	3.22.	더불어민주당 당사 9층	20대 대선평가 및 지선대비 간담회 - 부동산 부문	외부전문가와 당내 인사들의 객관적·전문적인 시각으로, 제20대 대선 결과를 세부 분야별로 종합 분석·평가 후, 향후 당의 대응방향 모색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를 분석	
평가간 담회	5.4.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온라인시민발언대<시즌2> 할말있어요! 1차 평가간담회	시민발언 동영상 제안 활성화 및 향후 운영에 대한 발 진적 방안 모색	
토론회	5.11.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까지 부동산세제의 현황·문제점, 국민 입장의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5.16.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코로나19 손실보상	코로나 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6.8.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지선평가 및 당 혁신 제1차 간담회	전문가-국회의원 지선 및 대선 평가	
토론회	6.9.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지선평가 및 당 혁신 제2차 간담회	전문가-국회의원 지선 및 대선 평가	
토론회	6.1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지선평가 및 당 혁신 제3차 간담회	전문가-국회의원 지선 및 대선 평가	
토론회	7.6.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정신)	새로운 가치와 노선, 시대정신 / 강령 전문가 및 국회의원 토론	
토론회	7.8.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2차 토론회 (사회 분야)	복지, 일자리·노동, 교육 / 강령 전문가 및 국회의원 토론	
토론회	7.13.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3차 토론회 (경제 분야)	경제, 과학기술, 기후·에너지·환경 / 강령 전문가 및 국회의원 토론	
토론회	7.14.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4차 토론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정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 강령 전문가 및 국회의원 토론	
토론회	7.1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토론회	7.1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경제주체별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경제위기 불안감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물가, 부채, 소득충격 등 현재 대두되는 민생현안에 대한 진단, 정부정책 평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안 마련	
토론회	7.19.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5차 토론회(전문)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이념 / 강령 전문에 대한 전문가 및 국회의원 토론	
토론회	7.26.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정책대안	
토론회	7.26.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정책대안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물가, 부채, 소득충격 등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민생현안에 대한 진단, 정부정책 평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안 마련	
토론회	8.16.	국회 의원회관 326호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	11.15.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위기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진단 및 대응 방안	
토론회	11.15.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위기가 향후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및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11.16.	국회 의원회관 306호	이태원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	이태원참사의 국가책임성, 발제 및 토론	
세미나	11.24.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2022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 외부용역 중간보고회	소득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외부용역 연구자와 전문가 세미나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5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	------------	----	------	----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0.20.~11.24.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위드스페이스(서 대문구)	-국제질서, 복합위기, 국 토균형발전, 지역혁신, 정책수립·집행 및 평가, 중앙·지방 예산 등 -현장워크숍 정책연구과 제 발표 -수료 35명, 당대표 표창 (최우수상) 5명, 민주연구 원장 표창(우수상) 5명	전국 51명 대상 통신교육·집합 교육·청년당원 교육 등 결합
법정의무교육	11.1~12.31.	온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	통신교육
법정의무교육	11.1~12.31.	온라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통신교육
법정의무교육	11.1~12.31.	온라인	정보보호	통신교육
법정의무교육	11.1~12.31.	온라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통신교육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라. 정책홍보(8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26.~현재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유튜브(민주ON)	[2022 좋은정책 페스티 벌] 대선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정책 발표 및 시 상식 현장생중계, 보도 자료 배포, 당원SNS, 홈 페이지 게재, 유튜브(민 주ON) 영상(16개) 공유	도서지역 종합병원선,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소 상공인 지원정책, 농작물 잔사 처리, 생애주기별 복 지통합, 육아휴직, 맘애프 터케어, 아파트 관리비 등 일반시민과 당원들의 정책 제안 발표	
2.24.~현재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유튜브(민주ON), 팩트TV,시사타 파TV	<시민발언대 시즌1> 할 말있어요! 1차 현장생중계, 보도자 료 배포, 당원SNS, 홈페 이지 게재, 유튜브(민주 ON) 영상(8개) 공유	부동산 규제, 민주당 청년 정책, 청년세대 불평등과 갈등 조장 등 일반시민과 당원들의 정책제안	1차 홍대입구역

2.26.~현재	SNS, 유튜브(민주ON), 팩트TV,시사타 파TV	<시민발언대 시즌1> 할 말있어요! 2차 현장생중계, 당원 SNS, 유튜브(민주ON) 영 상(13개) 공유	정치인의 청년 갈등조장, 후보 자질 및 역량, 기초생 활수급자 처우개선, 한부모 가정 지원, 군의료체계 개 선, 검찰 개혁, 청년정책 등 일반시민과 당원들의 정책제안	2차 건대입구역
3.3.~현재	SNS, 유튜브(민주ON), 팩트TV,시사타 파TV	<시민발언대 시즌1> 할 말있어요! 3차 현장생중계, 당원 SNS, 유튜브(민주ON) 영 상(10개) 공유	장병 통신비, 후보단일화 비판, 취준생 및 실업자 지 원 정책, 미진학자 지원 정책, 청년 정치, 스타트업 규제완화, 분열·갈등 조장 비판 등 일반시민과 당원 들의 정책제안	3차 강남역
3.5.~현재	SNS, 유튜브(민주ON), 팩트TV,시사타 파TV	<시민발언대 시즌1> 할 말있어요! 4차 현장생중계, 당원 SNS, 유튜브(민주ON) 영 상(18개) 공유	맞벌이부부 양육 지원정책, 색깔론 비판, 동물복지, 대 통령의 역할, 쓰레기 절감, 노동자 처우개선, 특성화고 지원 정책 등 일반시민과 당원들의 정책제안	4차 여의도역
3.6.~현재	SNS, 홈페이지, 유튜브(민주ON)	시민발언대 제안 정책과 질의 등에 민주연구원장 이 대선후보와 당 정책 을 중심으로 답변한 영 상을 당원SNS, 홈페이지 게재, 유튜브(민주ON) 영상(1개) 공유	부동산 규제, 청년 주택마 련, 스타트업 규제완화, 청 년일자리 창출, 청년기본수 당, 한부모가정 지원, 정 당·정치개혁, 군 개혁 및 장병 처우 개선, 삶의 질 개선 후보 등 답변	
5.30.~현재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유튜브(민주ON)	<온라인시민발언대 시즌 2> 할말있어요! 당원SNS,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 지 게재, 유튜브(민주 ON) 영상(8개) 공유	민주당 개혁방안, 정당정 치, 해당행위자 처벌 등 일 반시민과 당원들의 정책제 안	
7.6.~현재	SNS, 홈페이지, 유튜브(민주ON), 당원교육 플랫폼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 아카데미 강의 당 원SNS, 유튜브(민주ON) 영상(6개) 공유 및 당원 교육 플랫폼 탑재	과학기술, 한반도정책, 지 역혁신, 정책수립·집행 및 평가, 중앙·지방 예산 등 강의 공유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67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	-----	-----	------	-----------	-----

1.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3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2.	연구논문 문 모음집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발간	자체발간	100부/최고위 보고 및 배포, 시도당 및 수강 생 배포, 당원SNS 및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정책 홍보, 대선·지선 정책 아이디어 반영	
1.1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6.	연구논문 자료 집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식 자료집 발간	자체발간	100부/현장 및 수상자 배포, 최고위 보고, 당 원SNS, 홈페이지에 공 유하여 우수정책 홍보	
2.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2.1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2.2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2.24.~3.9.	영상 자료	팩트TV 시민발언대<시즌1> 인터넷 생중계 및 영상물 제작	외부용역	현장생중계, 당원SNS, 유튜브(민주ON) 영상 (50개) 공유하여 일반시 민과 당원 정책제안 및 당과 대선후보 정책 홍 보	
3.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3.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3.18.	간담회 자료집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 <시즌1> 1차 평가간담회 자료집 발간	자체발간	20부/현장배포, 홈페이 지 공유	
3.2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3.21.	간담회 자료집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 <시즌1> 2차 평가간담회 자료집 발간	자체발간	20부/현장배포, 홈페이지 공유	
3.2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4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1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1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4.2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4.	간담회 자료집	온라인시민발언대, 할 말 있어요!! <시즌2> 1차 평가간담회 자료집 발간	자체발간	20부/현장배포, 홈페이지 공유	
5.9.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1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16.	토론회 자료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자체	100부 / 토론회 배포	
5.2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5.30.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5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1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20.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6.2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4.	백서	6.1 지방선거 평가	자체	300부 / 의원실 등 배포	
7.6.	토론회 자료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정신)	자체	토론회 배포	
7.8.	토론회 자료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2차 토론회 (사회 분야)	자체	50부 / 토론회 배포	
7.1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13.	토론회 자료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3차 토론회 (경제 분야)	자체	토론회 배포	
7.14.	토론회 자료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4차 토론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자체	토론회 배포	
7.18.	토론회 자료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보전 방안	자체	100부 / 토론회 배포	
7.1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19.	토론회 자료	2022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5차 토론회 (전문)	자체	20부 / 토론회 배포	
7.2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7.26.	토론회 자료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정책대안	자체	100부 / 토론회 배포	
8.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8.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8.1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6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8.16.	토론회 자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자체	100부 / 토론회 배포	
8.2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8.29.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9.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9.13.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9.20.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1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1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2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8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0.3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79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7.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0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14.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1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15.	토론회 자료	레고랜드 사태 국가위기로 가나	자체	100부 / 토론회 배포	
11.21.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2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1.28.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3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5.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4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12.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5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19.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6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12.23.	연구논문 모음 집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발간	자체발간	100부/최고위 보고 및 배포, 시도당 및 수강 생 배포, 당원SNS 및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정책 홍보, 총선정책 아이디어 활용 예정	
12.26.	보고서	여론조사 이슈정리 87호	자체발간	여론조사 연구자료로 활용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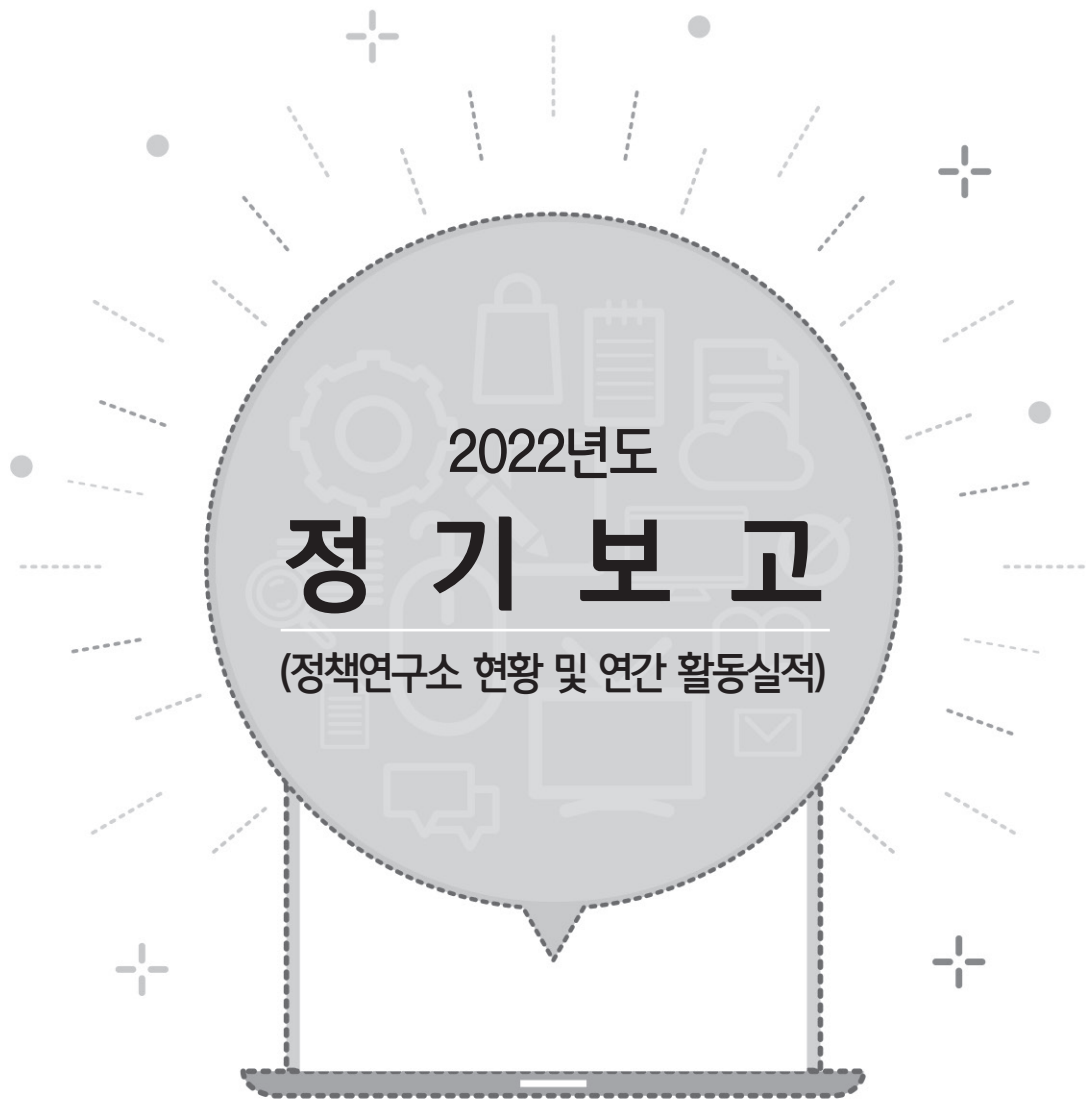
바. 그 밖의 주요활동(4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1.~12.31.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 전자도서관 업로드	부서 생산(발간) 및 활동자료 민주연구원 전자도서관 업로드	민주연구원
1.1.~12.31.	민주연구원	외부전문가 리스트 업데이트	외부전문가 리스트 취합 및 정리(아카데미 강사진 등)	민주연구원
1.11.~1.20.	민주연구원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국민 정책제안 심사 및 평가	내부전문가의 국민 정책제안 1차 372건 심사·평가하여 98건 입선작 선정, 상위 32건 대상으로 2차 국민심사(온라인투표) 통해 수상 대상자 선정	민주연구원 온라인투표
1.26.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자 PT발표 및 시상식	도서지역 종합병원선, 해양쓰레기 업싸이클 선박, 소상공인 지원정책, 농작물 잔사 처리, 생애주기별 복지통합, 육아휴직, 암애프터케어, 국민암행어사 포털, 아파트 관리비 등	유튜브(민주 ON)

2.15.~3.8.	중앙당사 민주연구원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전환 선대위 정책본부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전환선대위 정책본부에 파견되어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홍보 및 지지 활동 추진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2.18.~2.19.	광진·마포·영등 포· 강남경찰서	옥외집회 개최 신고	시민발언대 개최관련 주요 지하철역 인근 옥외집회 개최를 위한 관할경찰서 방문 신고	민주연구원
2.24.	건대입구역 인근	시민발언대<시즌1> 1차 개최	현장발언자 섭외, 사진 촬영, 질서 유지 등 현장지원	민주ON팩트 TV시사타파 TV 유튜브생중 계
2.26.	홍대입구역 인근	시민발언대<시즌1> 2차 개최	현장발언자 섭외, 사진 촬영, 질서 유지 등 현장지원	민주ON팩트 TV시사타파 TV 유튜브생중 계
3.2.	극동VIP빌딩 7층	노웅래원장 시민발언 꼼꼼 답변	시민발언대 제안 정책과 질의 등에 대한 원장 답변 녹화 현장지원	팩트TV 스튜디오
3.3.	강남역 인근	시민발언대<시즌1> 3차 개최	현장발언자 섭외, 사진 촬영, 질서 유지 등 현장지원	민주ON팩트 TV시사타파 TV 유튜브생중 계
3.5.	여의도역 인근 (IFC몰 인근)	시민발언대<시즌1> 4차 개최	현장발언자 섭외, 사진 촬영, 질서 유지 등 현장지원	민주ON팩트 TV시사타파 TV 유튜브생중 계
3.18.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시민발언대<시즌1> 1차 평가간담회 개최	시민발언대 반응 등 평가 및 운영에 대한 발전적 방안 모색	민주연구원
3.21.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시민발언대<시즌1> 2차 평가간담회 개최	시민발언대 반응 등 평가 및 운영에 대한 발전적 방안 모색	민주연구원
4.1~4.10.	민주연구원	시민자문단 선정 및 위촉장 수여	시민발언대 참가자들중 시민자문단(29명) 선정 및 위촉장 수여(발송)	민주연구원
5.4.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온라인시민발언대<시 즌2> 1차 평가간담회 개최	동영상 제안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한 발전적 방안 모색	민주연구원
5.16.~6.3.	전국	정책 지원	정책 지원	
7.6.~7.8.	민주연구원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제2강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민주연구원

7.9.~7.11.	민주연구원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제3강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민주연구원
7.12.~7.14.	민주연구원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제4강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민주연구원
7.16.~7.18.	민주연구원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제5강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민주연구원
7.19.~7.21.	민주연구원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제6강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민주연구원
7.23.~25.	민주연구원	제2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제8강(특강) 강의 영상 내용검토, 편집 및 유튜브 공유	민주연구원
10.06.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강생 OT 개최	온라인 수강방법, 현장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및 수강생 평가 등 안내	화상회의
10.13.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화상회의 추진을 위한 점검회의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화상강의 및 현장중계를 위한 사전 점검회의	민주연구원 수상한협동 조합
10.20.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입학식 및 특강1 개최	입학식 및 특강1 진행을 위한 인사말씀 및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회의
10.25.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1강 개최	제1강 화상강의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회의
10.26.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2강 개최	제2강 화상강의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회의
10.27.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3강 개최	제3강 화상강의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회의
11.01.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4강 개최	제4강 화상강의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회의

11.02.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5강 개최	제5강 화상강의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회의
11.03.	중앙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제6강 개최	제6강 화상강의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회의
11.12.	위드스페이스 P홀 (서대문구)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일차 현장워크숍 개최	현장워크숍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 및 현장중계
11.13.	위드스페이스 P홀 (서대문구)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2일차 현장워크숍 개최	현장워크숍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 및 현장중계
11.16.~11.17.	민주연구원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평가	정책전문가 인증서 수여 및 포상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심사 및 평가	대상 36명
11.24.	중앙당사 9층 민주백송홀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2 및 수료식 개최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특강2 및 수료식 진행을 위한 수료사 및 시나리오 작성, 기기 설치, 화상회의 중계, 사진촬영 등 현장지원	화상 및 현장중계
11.25.	금산빌딩 5층	김대중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기획회의	김대중기념사업회 주관 '김대중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정보공유, 업무협의 등 기획회의	민주연구원 김대중기념 사업회
11.30.	민주연구원 8층 부원장실	중앙당 교육·연수사업 업무 협의	교육연수국 2023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연수 업무 협의 및 공유	민주연구원 교육연수국
12.1.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민주연구원 연구직 당직자 평가 TFT 제1차 회의	당헌·당규, 사무직당직자인사복무규정, 민주연구원 규정 등 평가관련 규정 검토	민주연구원
12.8.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민주연구원 연구직 당직자 평가 TFT 제2차 회의	민주연구원 각 실별 연구직 당직자 평가(안) 발제 및 논의	민주연구원
12.15.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민주연구원 연구직 당직자 평가 TFT 제3차 회의	민주연구원 연구직 당직자 평가(안) 의견 종합 및 정리	민주연구원



2022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

여의도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4층			V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14명	7년 이상 : 27명	정규직 : 58명	
석사급: 25명	2년 이상~7년 미만 : 8명	비정규직 : -	
기 타: 19명	2년 미만 : 23명		
합 계: 58명	합 계 : 58명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9,135,218,948	37,508,879	2,397,371,882	11,570,099,709	7,971,894,961	3,598,204,748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2. 1. 1.~12. 31.)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99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2.16-1.7	국토교통	부동산·주거분야 정책 아젠다	자체	5	40대 정책아젠다
1.1 - 1.13	기획재정	2022대선 대비 금융(대출)지원 공약(안) 검토	자체	2	현안보고
1.1-1.25	국토교통	서울시 '도시 대개조' 방안 검토	자체	21	현안보고
1.3-1.4	정치외교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대책	자체	6	주간동향
1.3-1.5	보건복지	방역패스 없으면 마트도 못가는 '전체주의적 통제'	자체	3	
1.3-1.7	산업통상자원	핵심소재 中 의존도 심화: 현황, 문제점, 대안	자체	8	
1.4-6.2	국토교통 기획재정	부동산·주거·민생경제 분야 정책 개선방안	자체	16	일일메시지
1.5-1.7	환경노동	文정부 '문지마' 태양광 확대 실태 및 시사점	자체	4	
1.5-1.7	기획재정	대선 표심 겨냥한 '선심성 전국민 재난지원금' 절대 반대	자체	3	
1.6-1.8	보건복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강제.억압적 방역 반성해야	자체	3	
1.6-1.9	교육	유보통합 관련 핵심 쟁점과 실행방안	자체	7	주간보고
1.7-1.10	행정안전	선관위의 네티즌 댓글 수사 의뢰가 정상인가	자체	3	
1.8-1.10	국회운영	문재인 정부 역대 신년사 분석	자체	8	주간보고
1.10-1.13	외교안보	인도-태평양 경제틀(IPEF)에 대한 당의 입장	자체	5	주간동향
1.10-1.12	국토교통	서울 집값 상승, 대출 규제에 탈서울 10년來 최대	자체	3	
1.10-1.14	산업통상자원	수소경제 선도할 그린수소 활성화 방안 모색	자체	8	
1.11-1.13	행정안전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는 불공정	자체	3	
1.11-1.15	환경노동	노무현-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자체	8	주간보고
1.12-1.14	산업통상자원	'원전배제' K-택소노미 여파와 시사점	자체	5	
1.12-1.14	보건복지	저소득 중장년 고독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자체	3	
1.13-1.15	환경노동	일자리 77만개 증가 이면엔 3040세대 고용 한파	자체	3	
1.14-1.16	보건복지	설 이후 확진자 하루 2-3만명 예측, 방역 개편 서둘러야	자체	3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고
1.16-1.18	여성가족	대선 젠더이슈 관점에서 본 여성가족부폐지 찬반 양론 분석	자체	8	주간보고
1.17-1.18	환노	尹 노동이사제에 찬성에 대한 우려	자체	3	
1.17-1.18	기재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에 대한 비판	자체	3	
1.17-1.19	행정안전	문정부의 이재명 후보 공약 밀어주기는 사실상 관권 선거	자체	3	
1.17-1.21	환경노동	쓰레기 매립지 논쟁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자체	4	
1.19-1.20	기재	단계적 '기본소득' 공약의 문제점	자체	3	
1.20-1.22	국회운영	후보별 공약으로 짚어 본 차기정부 국정비전	자체	12	주간보고
1.20-3.11	전 분야	2022 대선 필승 정책아젠다 ①TV토론	자체	200	
1.20-3.11	전 분야	2022 대선 필승 정책아젠다 ②프레임	자체	60	
1.23-1.24	기재	李의 국가재정관에 대한 비판	자체	3	
1.23-1.24	기재	李의 무늬만 억강부약(抑強扶弱)	자체	3	
1.23-1.26	행정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차기정부 디지털 혁신과제 분석	자체	14	주간보고
1.25-1.26	기재	공공주도 vs 민간주도 개발 비교	자체	3	
1.25-1.27	산업통상자원	'묻지마' 전기차 확대 공약의 문제점	자체	3	
1.26-1.27	정무	금융무지 드러낸 李의 법정금리 추가 하향	자체	3	
1.27-1.28	정무	李의 기본대출 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	3	
1.27-1.28	기재	李 공공배달업의 문제점	자체	3	
1.27-1.31	국회운영	권력형 성범죄가 중도층 유권자에 끼치는 영향 분석	자체	12	주간보고
2.1-2.13	기재	TV토론 평가 및 제언	자체	24	
2.1-2.5	국회운영	586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자체	13	주간보고
2.4-2.5	외교안보	대선 후보 4자토론 외교안보 분야 평가 및 제언	자체	4	주간동향
2.6-2.9	국회운영	진보 집권당 유권자 인식 분석	자체	9	주간보고
2.7-2.11	환경노동	'실현 가능성 제로' 이재명표 미세먼지 공약 팩트체크	자체	4	
2.8-2.10	대북통일	문정부 5년, 비정상적 대북정책의 실태 관련	자체	8	주간동향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고
2.10-2.13	기획재정, 국회운영	임기말 거시경제 수치와 역대 대선 함수관계 분석	자체	14	주간보고
2.11-2.15	행정안전, 정무	지자체장 법인카드 사용 실태 사례 분석	자체	12	주간보고
2.14-2.15	외교안보	제2차 대선후보 토론회 외교안보 평가 및 보완	자체	4	주간동향
2.14-2.24	국내정치	대선 정국 하 이슈별 공세포인트 점검 및 제언	자체	6	주간동향
2.16-2.17	기재	李,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한 비판	자체	5	
2.16-2.18	법제사법	문재인 정부 下 삼권분립 헌법적 가치 훼손 사례 분석	자체	13	주간보고
2.16-2.22	환경노동	文정부의 '탈석탄' 없는 탄소중립: 문제점과 시사점	자체	5	
2.17-2.23	기재	尹-安 공약 단일화 아젠더(경제부문)	자체	5	
2.20-2.21	정무	수구좌파들의 황당한 비유法 비판	자체	5	
2.20-2.22	국회운영	대통령-집권당 후보 갈등지수와 대선 함수관계 분석	자체	7	주간보고
2.21-6.15	과학기술	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선방안	자체	23	일일메시지
2.23-2.24	정무	좌파들의 '권위팔이' 수법 대응	자체	5	
2.23-2.25	법제사법, 국회운영	보수층이 추구하는 법치 정상화 방향 및 비전 분석	자체	14	주간보고
2.24-2.27	문화체육관광	불교 문화재 관람료 파동 및 불교계 문화재 인식 분석	자체	9	주간보고
2.26-2.28	정무	'다당제 = 정치개혁' 프레임 비판	자체	5	
2.28-3.2	기재	납세자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자체	5	
3.2-3.5	기획재정,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 소상공·자영업에 끼친 영향 분석	자체	13	주간보고
3.7-3.11	정치외교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례연구 조사	자체	15	주간동향
3.10-3.14	국내정치	'이대녀(20대여성)' 이재명 지지의 원인과 대책	자체	4	주간동향
3.10-3.15	전 분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조언	자체	10	
3.14-5.19	여성가족	2030 여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자체	3	빅데이터 분석
3.17-18	국회운영	윤석열 정부 취임 국민인식 여론조사 분석	자체	5	
3.20-3.28	행정안전, 국회운영	집권초 역대 지방선거 유권자 선택 사례 분석	자체	14	주간보고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고
3.25-4.6	국토교통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제안 -산림청을 녹색국토도시공원청으로-	자체	3	현안보고
4.8-5.11	정무	정국 이슈 트렌드 리포팅(경제)	자체	35	
5.10-5.16	행정안전	지방선거 여야 정책매세지 분석	자체	9	주간보고
5.16-5.18	법제사법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 반대할 명분 없다	자체	3	
5.17-5.19	정무	보수 정부의 5.18기념식 전원 참석, 국민통합의 강한 의지	자체	3	
5.17-5.23	국토교통	정책소비자 관점에서 본 1기 신도시 주민의 정책수요 분석	자체	12	주간보고
5.19-20	외교안보	IPEF 참여와 중국 반발 관련 대응책 연구	자체	3	주간동향
5.19-5.23	산업통상자원	한미원전동맹의 의미와 시사점	자체	7	
5.20-5.22	보건복지	윤석열 정부 '과학적 방역'의 첫 시험대	자체	3	
5.20-5.31	여성가족	지방선거 여성·청년 여론 추이 분석 및 제언	자체	8	여론 동향 분석
5.22-5.23	기재	'민영화 = 악마' 프레임에 대한 대응	자체	3	
5.23-24	외교안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 : 평가 및 향후 과제	자체	3	주간동향
5.24-5.25	정무	기준금리 0.25%p 인상의 의미	자체	3	
5.24-5.26	국회운영	민주당의 하반기 '원 구성' 약속 파기는 후안무치+물상식	자체	3	
5.25-26	대북통일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3발 발사 관련	자체	2	주간동향
5.25-5.30	국회운영	정파별 사전투표 관점 및 유권자 인식 분석	자체	11	주간보고
5.25-5.31	환경노동	중소·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례 분석	자체	6	
5.26-5.27	환노	대법원 '연령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자체	3	
5.26-5.28	보건복지	주식시장 급락에 국민연금 수익률 위기	자체	3	
5.27-28	대북통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관련 대책	자체	4	주간동향
5.30-31	대북통일	정세현 前 통일장관, "북한 압박하면 임기 중 전쟁 날 수도" 발언 관련 비판	자체	2	주간동향
5.30-5.31	기재	윤 정부 '긴급민생안정대책' 평가	자체	3	
5.30-6.1	국토교통	민주당發 '김포공항 이전'공약은 황당무계	자체	3	
6.10	환경노동	화물연대 파업 빅데이터 분석	자체	3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고
6.13-6.17	환경노동	일회용품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해법 모색	자체	5	
6.16-17	국회운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키워드 빅데이터 연구	자체	6	
6.27-7.8	산업통상자원	첫정부 에너지실정 5년: 에너지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체	13	
10.26-12.23	과학기술	디지털민주주의와 정당 - I. 정치참여	공동	1	정책보고 *아테나워 재단 공동
10.26-12.23	과학기술	디지털민주주의와 정당 - II. 의사결정	공동	1	정책보고 *아테나워 재단 공동
12.21	국회운영	3대 개혁과제 빅데이터 분석	자체	2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99부.

나. 토론회 등 개최(54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정책 간담회	1.31-12.31 매주 일요일 21시	온라인 (Webex)	온라인 정책제안	정책기자단 각 지역별 정책 제안 및 정책수렴	총 50회
공개 토론회	11.17	하우스 카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긴급 좌담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허가하라'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을 파악,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 수립 종부세의 최근 상황, 근원적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등	자체
워크숍	11.25	하우스 카페	디지털민주주의와 정당 I. 정치참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공동
공개 토론회	11.30	하우스 카페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긴급 간담회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	금투세 도입 유예 추구를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 올바른 조세체계 마련에 기여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여야 대립, 보완책 마련 등	자체
워크숍	12.2	하우스 카페	디지털민주주의와 정당 II. 의사결정	당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공동

다. 교육·연수활동(21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7.13-7.14	서울 신라호텔	컨퍼런스 참석 및 결과보고 작성	
시민 교육	1.1-3.31	온라인 교육	이수정 교수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 (1강)	연중
시민 교육	1.1-3.31	온라인 교육	이수정 교수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 (2강)	연중
시민 교육	1.28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제1강 당헌 당규	연중
시민 교육	2.10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제2강 대북정책 강사 태영호	연중
시민 교육	2.17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제3강 공직 선거법	연중
시민 교육	2. 24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제4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연중
시민 교육	3. 21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제5강 PPAT 제5강 외교안보 정책	연중
시민 교육	3. 21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PPAT 제6강 안전과 사회 이수정 교수	연중
시민 교육	3. 25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PPAT 제7강 지방자치 원희룡 전 지사	연중
시민 교육	3. 30	온라인 교육	PPAT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PPAT 제8강 청년정책	연중
시민 교육	3.1-3.31	온라인 교육	국민의힘 대선 유세연설원 교육	연중
시민 교육	3.1-3.31	온라인 교육	내 손안의 선거법 1	연중
시민 교육	3.1-3.31	온라인 교육	내 손안의 선거법 2	연중
시민 교육	6.1-12.31	온라인 교육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1	연중
시민 교육	6.1-12.31	온라인 교육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2	연중
시민 교육	6.1-12.31	온라인 교육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3	연중
시민 교육	6.1-12.31	온라인 교육	선거여론조사 제대로 알기1	연중
시민 교육	6.1-12.31	온라인 교육	선거여론조사 제대로 알기2	연중
시민 교육	6.1-12.31	온라인 교육	선거여론조사 제대로 알기3	연중
시민 교육	6.1-12.31	온라인 교육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지성	연중

라. 정책홍보(77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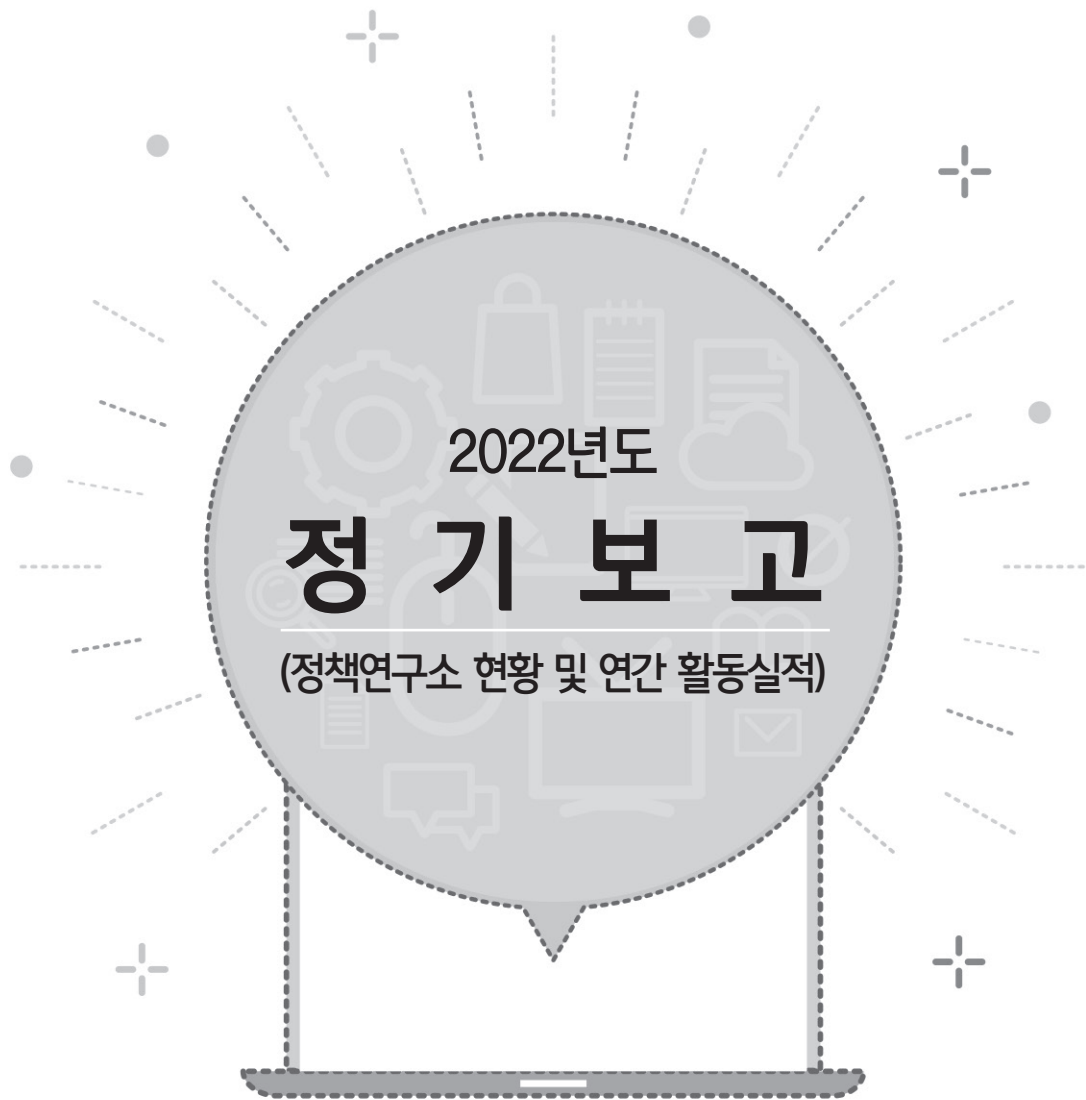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1-12.31	여연아카데미	자체홈페이지	정책 홍보(매일 업데이트)	총 726회
1.1-12.31	SNS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연구원 활동	총 30건
1.4-5.31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배포	데일리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동향	총 18건
11.16-11.17	보도자료	이메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긴급 좌담회” 개최 관련 보도 요청	
11.18	웹 게시물	홈페이지 게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긴급 좌담회” 결과 브리핑	
11.29-11.30	보도자료	이메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긴급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 요청	
12.1	웹 게시물	홈페이지 게재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긴급 간담회” 결과 브리핑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5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3.1-3.31	정책보고서	2022 대선 필승 정책이전다 ①TV토론	자체발간	30부, 선거대책본부 및 주요 당직자에 보고	
3.1-3.31	정책보고서	2022 대선 필승 정책이전다 ②프리임	자체발간	30부, 선거대책본부 및 주요 당직자에 보고	
3.1-3.31	정책보고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조언	자체발간	30부, 선거대책본부 및 주요 당직자에 보고	
12.21	정책보고서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당 I.정치참여	온라인 공개용 PDF 제작 및 책자 인쇄	하드카피 약 300부 인쇄, 온오프라인 배포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공동
12.21	정책보고서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당 II.의사결정	온라인 공개용 PDF 제작 및 책자 인쇄	하드카피 약 300부 인쇄, 온오프라인 배포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공동

바. 그 밖의 주요활동(38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3-1.14	여의도연구원	국민 정책제안 온라인 게시판 운영 및 결과보고	정책제안 취합·분류·검토 보고서 작성 등	여연아카데미
1.4	여의도연구원	윤석열 후보 관훈토론 토론회 평가	관훈토론 인터뷰 내용 분석 후 보고서 제출	
1.6-3.9	-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미래경제지원본부 활동	미래경제 먹거리 관련 대선 공약개발	부분부장
1.6-11.11	-	온라인 언론 외부 기고	민생경제 관련 외부 기고	오피니언타임스 총 7회
1.9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인터뷰 관련 분석·평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북한 비핵화, 주한미군, 한미동맹 관련 인터뷰를 평가	
1.10	여의도연구원	여성징병제 타당성 검토	대선 국면 하에 제기된 여성징병제 관련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비교 분석	
1.13-2.28	여의도연구원	동영상 정책제안챌린지 ‘말하는 대로 2022’ 공모	동영상 정책제안챌린지 기획·샘플 제작·온라인 전개 등	여연아카데미
2.3-12.2	-	경제일간지 기고(칼럼)	서민물가비상, 집값논쟁 등 민생경제 관련 경제칼럼 기고	헤럴드경제 총 11회
2.4	-	2022경제학공동학술대회 정책 논문 발표	“국민 주거인정을 위한 정책적 해법·역대 정부의 정책 패턴을 중심으로”	제도경제학회
2.10	여의도연구원	문대통령 언론 인터뷰 비판적 평가	문대통령의 퇴임 직전 언론 인터뷰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 분석	
3.14-18	-	외교안보분야 데일리 언론동향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군사국방 분야에 대한 언론 동향에 대해 일일 분석	총 4회
11.4	한국컨퍼런스 센터	중앙선관위 주관 <2022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 및 연구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정의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601호 (여의도동, 동아빌딩)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3명	7년 이상: 3명	정규직: 1명	
석사급: 4명	2년 이상~7년 미만: 7명	비정규직 : 0명	
기 타: 4명	2년 미만: 1명		
합 계: 11명	합계: 11명	합 계: 1명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948,001,394	293,502	206,938,271	1,155,233,167	1,109,935,861	45,297,306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98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1월 02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1	내부	2P	
01월 03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2	내부	2P	
01월 04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3	내부	2P	
01월 05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4	내부	2P	
01월 06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5	내부	2P	
01월 09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6	내부	2P	
01월 10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7	내부	2P	
01월 11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8	내부	2P	
01월 12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9	내부	3P	
01월 17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10	내부	2P	
01월 18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11	내부	2P	
01월 19일	운영위원회	대선 상황 분석 및 대응12	내부	2P	
4월 22일 ~5월 23일	운영위원회	불한당들의 한국정치 ; 윤석열 정부의 한계와 정의당의 정치전략	내부	18P	
8월 3일 ~8월 10일	행정안전위 원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초기 얼리덕과 정치정세	내부	5P	
9월 14일 ~9월 21일	행정안전위 원회	한국정치의 통치와 정치, 이중 실패의 전망들	내부	5P	
9월 29일 ~10월 05일	보건복지위 원회	돌봄 관련 리뷰	내부	3P	
11월 02일 ~11월 10일	행정안전위 원회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내부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1월 01일 ~02월 10일	외교통일위 원회	20대 대선 정의당 외교·국방·남북관계 분야 공약	자체	13P	
02월 01일 ~03월 01일	외교통일위 원회	적극적·포괄적 평화·외교 정책 기자회견문과 설명 자료	자체	11P	
01월 01일 ~02월 28일	외교통일위 원회	KBS 등 각종 언론사의 정책공약 검증 외교·안보·남북관계 분야 관련 답변	자체	55P	
01월 01일 ~02월 28일	외교통일위 원회	정책학회·행정학회 등 학계의 외교·안보·남북관계 분야 관련 질의 답변	자체	31P	
01월 01일 ~02월 28일	외교통일위 원회	매니페스토 본부, 경실련·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각종 사회단체의 외교·안보·남북관계 분야 관련 질의 답변	자체	75P	
03월 21일 ~05월 10일	외교통일위 원회	제8회 지방선거 정의당 평화·통일 분야 공약	자체	8P	
07월 01일 ~08월 10일	외교통일위 원회	대만해협 양안 사태와 한반도 평화	자체	5P	
08월 22일 ~09월 21일	외교통일위 원회	북한의 강경한 핵 정책 채택, 합의와 대응	자체	6P	
09월 22일 ~09월 25일	외교통일위 원회	09.26 정당정책토론회 준비 자료	자체	4P	
10월 16일 ~10월 31일	국방위원회	군비증강 국방정책, 여야를 초월한 일관성, 그 문제점과 대안	자체	5P	
10월 01일 ~11월 10일	외교통일위 원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채택 배경·합의와 대응	자체	12P	
1월 1일 ~2월 28일	환경노동, 산업,에너지, 농업,교통	그린노믹스등 대선공약개발	자체	40P	
3월 14일 ~3월 25일	환경,산업,기 후	윤석열정부 환경/기후공약 검토	자체	9p	
3월 20일 ~5월 31일	환경,기후,안 전,경제	지방선거 의제 및 공약개발	자체	32p	
4월 1일 ~5월 31일	환경,교통	녹색이동권조사	자체	40p	
7월 1일 ~12월 31일	환경	영양AWP풍력발전환경영향평가 적정성조사	자체	25p	
7월 1일 ~10월 30일	환경,보건복 지	환경·기후 문제와 개선방향	자체	30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8월 16일 ~9월 8일	환경노동	녹색단체협약 외국사례 조사	자체	17p	
9월 1일 ~10월 30일	환경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사항 이행방안	자체	5p	
1월 1일 ~12월 31일	환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조사	자체	30p	
1월 1일 ~1월 12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기획재정	그린노믹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전략	자체	10p	
1월 4일 ~1월 20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와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자체	11p	
1월 7일 ~1월 25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주요 후보 플랫폼경제 공약 비교	자체	4p	
1월 26일 ~2월 10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노동자경영참여 공약 설명자료	자체	10p	
4월 1일 ~4월 28일	환경노동, 기획재정	돌봄특별도시 모델_지역순환돌봄경제와 일자리보장제	자체	5p	
4월 15일 ~5월 4일	산업통상, 기획재정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자체	9p	
4월 29일 ~5월 8일	보건복지	고용보증수표제	자체	3p	
6월 3일 ~6월 12일	환경노동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입법발의 취지와 대안 방향_노동자 발언권과 권한 강화 방안	자체	15p	
7월 1일 ~7월 25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기획재정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비판과 영국·미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 방향	자체	5p	
7월 27일 ~8월 26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기획재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적 대안 모색과 사회화 과제	자체	20p	
8월 16일 ~9월 6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과 대응 방향	자체	10p	
9월 15일 ~10월 5일	기획재정	3고 이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자체	7p	
9월 17일 ~11월 15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기획재정	돌봄 일자리보장제,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자체	14p	
10월 23일 ~12월 6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불평등 세상, 정의로운 해결 방안	자체	8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2월 7일 ~12월 14일	환경노동, 산업통상	경제위기 대응과 돌봄국가 실현 사업 방안	자체	4p	
01월 02일 ~03월 06일	행정안전위 원회	대선 여론 브리핑	자체	105p	
21년 12월 16일~22년 03월 16일	국토교통위 원회	지역균형발전 관련 인식과 활동 사례 조사 결과	자체	20p	
03월 23일 ~06월 20일	행정안전위 원회	제20대 대선 평가 및 당 정체성 심층 인식 당원조사(FGI)	외부전문가 와 공동	58p	
07월 12일 ~09월 19일	행정안전위 원회	2022 선거 평가 및 당면 과제 당원 여론조사	자체	465p	
08월 07일 ~08월 14일	행정안전위 원회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정의당 현재 여론 흐름	자체	6p	
09월 20일 ~09월 22일	국회운영위 원회	당원여론조사 결과로 본 “있는데 없(다고 인식되)는” 정의당, 어디서 찾아야 하나?	자체	5p	
09월 27일 ~10월 11일	국회운영위 원회	유권자 지형에 따른 정의당 노선 및 정체성 시사점 보고서	자체	12p	
10월 14일 ~11월 09일	국회운영위 원회	정의당의 존재감 리포지셔닝을 위한 SWOT 분석	자체	6p	
10월 25일 ~11월 10일	국회운영위 원회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본 정의당의 노력과 잠재력	자체	7p	
11월 16일 ~11월 18일	국회운영위 원회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여론조사 추이 분석	자체	5p	
11월 18일	행정안전위 원회	10.29 이태원참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정리	자체	6p	
11월 26일 ~11월 28일	행정안전위 원회	11월 4주 여론동향 및 대응	자체	5p	
12월 04일 ~12월 05일	행정안전위 원회	11월 5주 여론동향 및 대응	자체	2p	
12월 18일 ~12월 19일	행정안전위 원회	12월 3주 여론동향 및 대응	자체	1p	
12월 29일	행정안전위 원회	12월 5주 여론동향	자체	2p	
1월 5일 ~2월 20일	국토위	정의당 주거·부동산 분야 대선 공약 발표	자체	1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월 15일 ~2월 20일	산자중기위	정의당 중소기업 분야 대선 공약 발표	자체	11p	
3월 2일 5월 15일	국토위	정의당 주거·부동산 분야 지방선거 공약 발표	자체	15p	
2월 10일 ~5월 15일	산자중기위	정의당 중소기업 분야 지방선거 공약 발표	자체	13p	
4월 1일 ~4월 4일	국토위	대통령직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추진	자체	4p	
4월 10일 ~5월 15일	국토위	정의당 교통 분야 지방선거 공약 발표	자체	9p	
4월 20일 ~4월 27일	국토위	부울경 메가시티 및 가덕도신공항 입장 검토	자체	4p	
6월 21일 ~6월 22일	국토위	정부 6.21 부동산 대책 검토의견	자체	2p	
11월 12일 ~11월 13일	국토위	정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검토	자체	4p	
1월 1일 ~2월 9일	과방위	정의당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대선공약 개발	자체	16p	
3월 15일 ~4월 14일	과방위	정의당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 지방선거공약 개발	자체	5p	
6월 7일 ~6월 15일	과방위	새정부 정책방향 관련 검토	자체	3p	
6월 15일 ~7월 21일	과방위	누리호 발사 관련 현안 정리	자체	2p	
7월 11일 ~7월 20일	과방위	통신비 중간요금제 현안 정리	자체	4p	
10월 15일 ~10월 17일	과방위	카카오톡 장애 사태 분석	자체	3p	
11월 10일 ~11월 16일	과방위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검토	자체	2p	
1월 4일 ~1월 11일	법제사법	다양한가족구성권 제도화 방안	자체	4p	
1월 6일 ~1월 26일	법제사법	수사기관 통신자료 과잉수집 제한 방안	자체	5p	
3월 24일 ~5월 4일	법제사법	난민제도 개선	자체	10p	
7월 20일 ~8월 3일	법제사법	사면제도 개선	자체	7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8월 22일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 문화정책 공약 비교	자체	35P	
10월 1일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송작가의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 방향	자체	30P	
11월 1일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문화 및 언론·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자체	60P	
10월 1일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드라마스태프·프리랜서PD·방송작가 노동실태 조사	외부전문가	104P	
4월 1일 ~4월 30일	보건복지	아동·청소년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자체	49P	
4월 1일 ~4월 20일	보건복지	정의당 복지정책 방안	자체	17P	
5월 1일 ~5월 31일	보건복지	정의당 지방선거 복지공약 마련	자체	46P	
6월 1일 ~6월 30일	국토교통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방안	자체	45P	
9월 1일 ~9월 30일	보건복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 검토	자체	4P	
10월 10일 ~10월 20일	기획재정	민영화 관련 법안 비판적 분석	자체	5P	
11월 10일 ~12월 10일	보건복지	정부 복지예산안 분석	자체	56P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98부.

나. 토론회 등 개최(13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0103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신년 정치대개혁	한국정치의 극단화와 증오와 분열의 정치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를 모색	
간담회	0317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 20대 대선 평가1	정의당 20대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토론회	0705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동시지 방선거 평가	정의당의 성찰과 혁신 과제	
심포지엄	1114	이룸센터	정의당 창당 10주년 심포지엄	지나온 10년, 마주할 10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0923	국회 본과 223호	통상-국제정 치경제 관련 상황 이해 및 대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제정 배경, 한국에의 영향과 대응	
세미나	0812	국회본청 223호	정의당 투표 경험자 온라인 조사, 양대 선거 평가 및 혁신과제 당원인식조사 보고 및 제안	정의당 투표 경험자 및 당원 대 상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에 관한 평가, 정의당의 노선 및 정체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를 보고	
세미나	0712	연구소 회의실	정의당의 실천과제	지방선거 이후 22대 총선까지 정의당의 전략과 실천과제	
세미나	0927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미래사회	미래 한국사회와 정책 의제들 - 성숙사회의 이머징 이슈	
간담회	1208	연구소 회의실	대안지표	GDP를 대체할 대안 국정 지표 개발에 대한 사례 발표 및 한국형 지표 개발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세미나	0721	국회 본청 223호	코로나19 재유행 진단과 대응방안	코로나 재유행 실태와 현 정부 관련 대응 분석	
간담회	0930	국회 본청 223호	2023년 장애인권리예 산 ·장애인권리입 법 간담회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입법 반 영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정의당 간담회 진행	
토론회	1020	국회의원회 관 제2세미나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학술회의	1229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연금개혁TF 1차 전체회의	정의당 연금개혁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	

다. 교육·연수활동(2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집합교육	4월 18일	중앙당 회의실	제8회 동시지방선거교육	
정예당원교육	12월 20일	서울하이유스호스 텔 대강당	-젠더폭력예방교육 -경제불평등 현실, 원인, 그리고 대안 -성평등, 장애평등 통합교육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라. 정책홍보(26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104	대변인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관련 검토 의견	
0323	대변인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검토 의견	
062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6.21 대책 전면 재검토	
081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묻지마 공급' 중단	
09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포기하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중단	
1110	대변인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검토 의견	
122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2023 경제정책방향' 철회	
0214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돌봄 희망 학부모 48.38%.. 초1 73.34%	
0311	정책논평	배포 및 게시	역대급 사교육비, 교육당국 전체의 실패	
0321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새 정부 교육공약 엇박자	
0613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반도체 부족인원, 고졸 가장 많아	
0821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자폐 등 발달장애인, 비진학 미취업 많아	
0905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교육자유특구, 국정과제 추가	
1021	정책논평	배포 및 게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과도하다	
1030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과밀학급 많은 시군구	
1207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노동자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 교육과정	
1215	보도자료	배포 및 게시	유보통합추진단 예산 없다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018	원내대표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카카오톡 장애 사태 관련	
1106	대변인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관련	
0708	정책동향	당 SNS 공유	거침없는 불법 제작, 드라마 '미남당'	
0715	정책동향	당 SNS 공유	공영방송 장악 의도 노골화	
0802	정책동향	당 SNS 공유	반복되는 한체대 생활관 폭행 사건	
0927	정책동향	당 SNS 공유	막무가내 정부위원회 폐지·통합	
0927	정책동향	당 SNS 공유	공영방송 장악 시도 본격화 가능성 커져	
0928	정책동향	당 SNS 공유	정부 여당, MBC 민영화까지 주장하며 총공세	
1110	정책동향	당 SNS 공유	MBC취재진 대통령전용기 탑승 배제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7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316	정책이론지	연구소 정책이론지 '보다 정의' 제3호 발간	자체 발간	200부, 당원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재	
0615	정책이론지	연구소 정책이론지 '보다 정의' 제4호 발간	자체 발간	200부, 당원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재	
0914	정책이론지	연구소 정책이론지 '보다 정의' 제5호 발간	자체 발간	200부, 당원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재	
1215	정책이론지	연구소 정책이론지 '보다 정의' 제6호 발간	자체 발간	200부, 당원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재	
0814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8월	자체 발간	당원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재	
0921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9월	자체 발간	당원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재	
1109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11월	자체 발간	당원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재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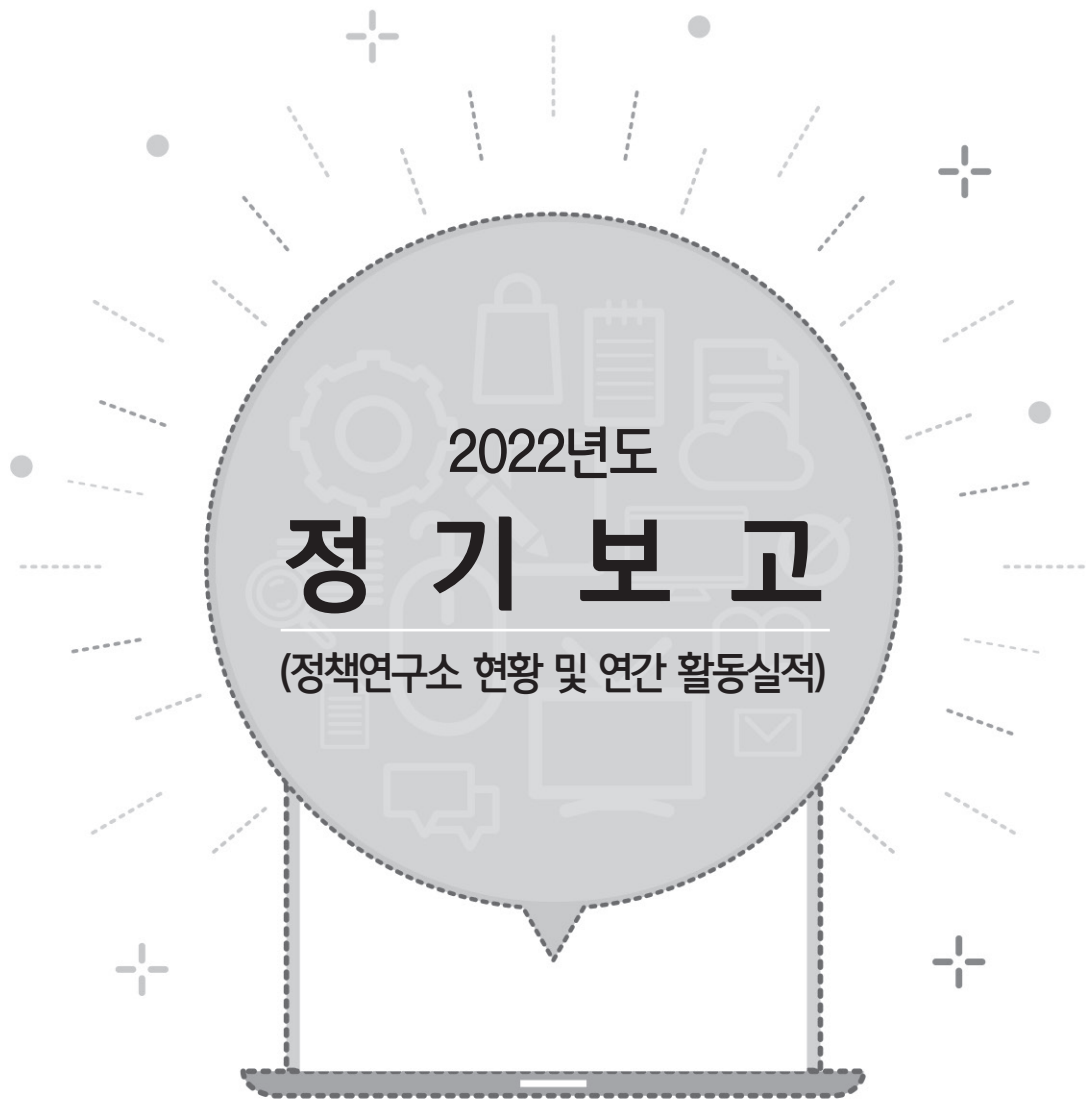
바. 그 밖의 주요활동(44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0.31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군비증강 국방정책, 여야를 초월한 일관성, 그 문제점과 대안	
02월 26일~ 02월 27일	자체	재보궐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3월 9일 재보궐선거 대비 경기도 안 성시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지원	
02월 27일~ 02월 28일	자체	재보궐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3월 9일 재보궐선거 대비 서울시 종 로구 국회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03월 03일	자체	대선 대비 ARS 여론조사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전국 유권 자 ARS 여론조사 지원	
03월 04일~ 03월 05일	자체	대선 대비 ARS 여론조사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전국 유권 자 ARS 여론조사 지원	
03월 06일~ 03월 07일	자체	대선 대비 ARS 여론조사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전국 유권 자 ARS 여론조사 지원	
4월 29일~ 5월 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인천시장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4월 29일~ 5월 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북 전주시 완 산구 광역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 원	
4월 29일~ 5월 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기도 의정부 시 다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 론조사 지원	
4월 29일~ 5월 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4월 29일~ 5월 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광주 서구 가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4월 29일~ 5월 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광주 서구 라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 3일~ 5월 9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기도 남양주 시 바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 론조사 지원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5월 3일~ 5월 9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울산시 북구청장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 3일~ 5월 9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북 전주시장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 3일~ 5월 9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남 영암군수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 3일~ 5월 9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남 곡성군 광역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 3일~ 5월 9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광주 서구 다 선거구 기 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0일~ 5월16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부산시장선거 ARS 여론 조사 지원	
5월10일~ 5월16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남 영암군수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0일~ 5월16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제주도 광역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0일~ 5월16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기도 성남시 카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0일~ 5월16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대전시 서구 다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0일~ 5월16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남 거제시 라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7일~ 5월2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서울 마포구 마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7일~ 5월2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서울 마포구 아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7일~ 5월2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기 성남시 타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7일~ 5월2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17일~ 5월2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부산 동래구 가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5월17일~ 5월22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남 거제시 나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남도지사 선거 ARS 여 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북 경산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서울 관악구 아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서울 노원구 바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서울 성북구 가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인천 동구 가 선거구 기 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전남 목포시 사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5월23일~ 5월30일	자체	지방선거 대비 ARS 여론조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경북 경산시 가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ARS 여론조사 지원	
1월 13일	온라인	28차 이사회	-이사 선출의 건 -부소장 선출의 건 -2021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 사업평가 심의 의결의 건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 의결의 건 -2021년 하반기 결산안 및 2022년 상반기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기타안건	
2월 10일	중앙당 회의실	정책협약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시민사회 5대영역 정책협약식	
2월 24일	국회본청 223호	정책협약식	제20대 대통령선거 한국비정규토동센터 정책협 약식	
2월 25일	국회본청 223호	정책협약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의료비백만원' 정책협약식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7월 15일	중앙당 회의실	제29차 이사회	-2022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상반기 결산안 및 하반기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인사확정의 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타안건	
11월 25일	온라인	제30차 이사회	-소장 인준의 건 -기타안건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6층 606호(여의도동, 산정빌딩)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정규직 :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비정규직 :	
기 타: 3	2년 미만 : 3		
합 계 : 3	합 계 : 3	합 계 :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73,000,000	1,217,520	4,278,634	78,496,154	76,250,027	2,246,127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2. 1. 1.~12. 31.)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4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2.01-03.15	기획재정	대선 관련 정책 분석	국내 정치권 자료 조사	45p	별첨1
04.03-04.30	기획재정	황재세 동향	국내외 자료 조사	15p	별첨2
06.11-06.19	환경노동	기후위기 동향	국내외 자료 조사 법안 탐구	10p	별첨3
07.25-08.04	법제사법	주요 정치인 사법리스크 동향	국내 언론보도 탐사, 내부토론	12p	별첨4
09.01-09.11	기획재정	인플레이션 동향	국내외 자료 조사	13p	별첨5
09.05-09.23	외교통일	미중 외교 갈등 속 외교정책 방향	국내외 자료 조사 내부토론 진행	25p	별첨6
09.11-09.25	보건복지	자살자와 무연고 사망자 통계 분석	용혜인 의원실 자료 요청, 내부 분석	13p	별첨7
09.25-10.01	기획재정	미연준금리문제와 한국경제	국내외 자료 조사 내부토론 진행	15p	별첨8
10.01-10.2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모빌리티 산업 동향	국내외 자료 조사	11p	별첨9
10.01-10.25	환경노동	직무급제 관련 논의	국내외 자료 조사	9p	별첨10
10.05-11.01	외교통일	대북정책과 시사점	국내외 자료 조사	33p	별첨11
10.11-11.25	환경노동	기후정책의 주요 갈래	국내외 자료 조사	8p	별첨12
12.01-12.22	기획재정	2023년 경제전망	정부 동향 조사	13p	별첨13
11.01-12.25	행정안전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현황	언론 동향 탐색 정부 동향 조사	22p	별첨14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4 부.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별첨’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02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세미나	22'11.09	국회의원 의원회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값의 성격과 개혁방향	국민연금 문제점과 노인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토론회	22'12.14	국회의원 의원회관	카탈루냐 기본소득 실험과 한국의 시사점	카탈루냐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지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02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소 집합교육	22'04.15-22'04. 16	연구소	정치철학 및 지방선거 전략 논의	
연구소 집합교육	22'09.15-22'09. 16	연구소	기후위기 담론 논의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라. 정책홍보(00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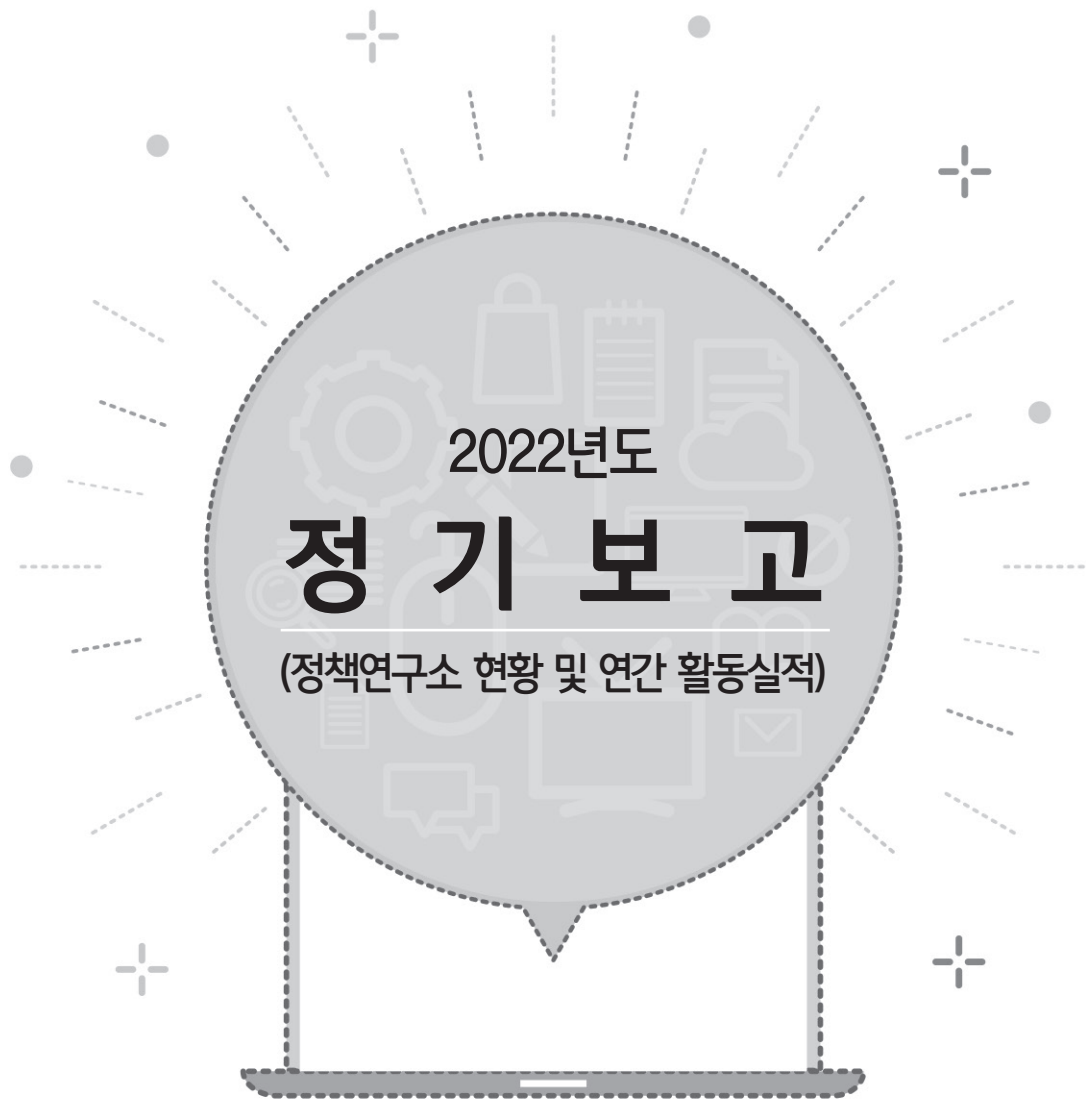
발간일자	종류	제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22'04.14	토론회 자료	지방선거와 정치 전략	온라인 자체발간	온라인 공유 및 주요 당직자 대상 활용	
22'11.01	연구논문	대북정책과 시사점	자체발간	40부 내부 당직자 대상 교육 활용	
22'12.22	연구논문	2023년 경제전망	자체발간	30부 내부 당직자 대상 교육 활용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일자 (기간)	장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 시대전환 시대전환LAB -

시대전환LAB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406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수		직원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정규직 :	
석사급: 1	2년 이상~7년 미만 : 1	비정규직 :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1	합 계 : 1	합 계: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0,107,180	9,252	9,391,288	19,507,720	2,627,400	16,880,320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2. 1. 1.~12. 31.)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	-	-	-	-	-

나. 토론회 등 개최(1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시대전환 도약전환포럼	2022.09.22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미래 혁신의제 정책화 포럼	10대 이머징 이슈 탐구 및 정책화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1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코어100 프로젝트 시즌1 현실정치	2022.03 ~ 2022.07	온라인(ZOOM)	민주정치 교육	
코어100 프로젝트 시즌2 제도개혁	2022.07 ~ 2022.10	온라인(ZOOM)	민주정치 교육	
코어100 강좌	2022.04.23	여의도 하우스카페	민주정치 교육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라. 정책홍보(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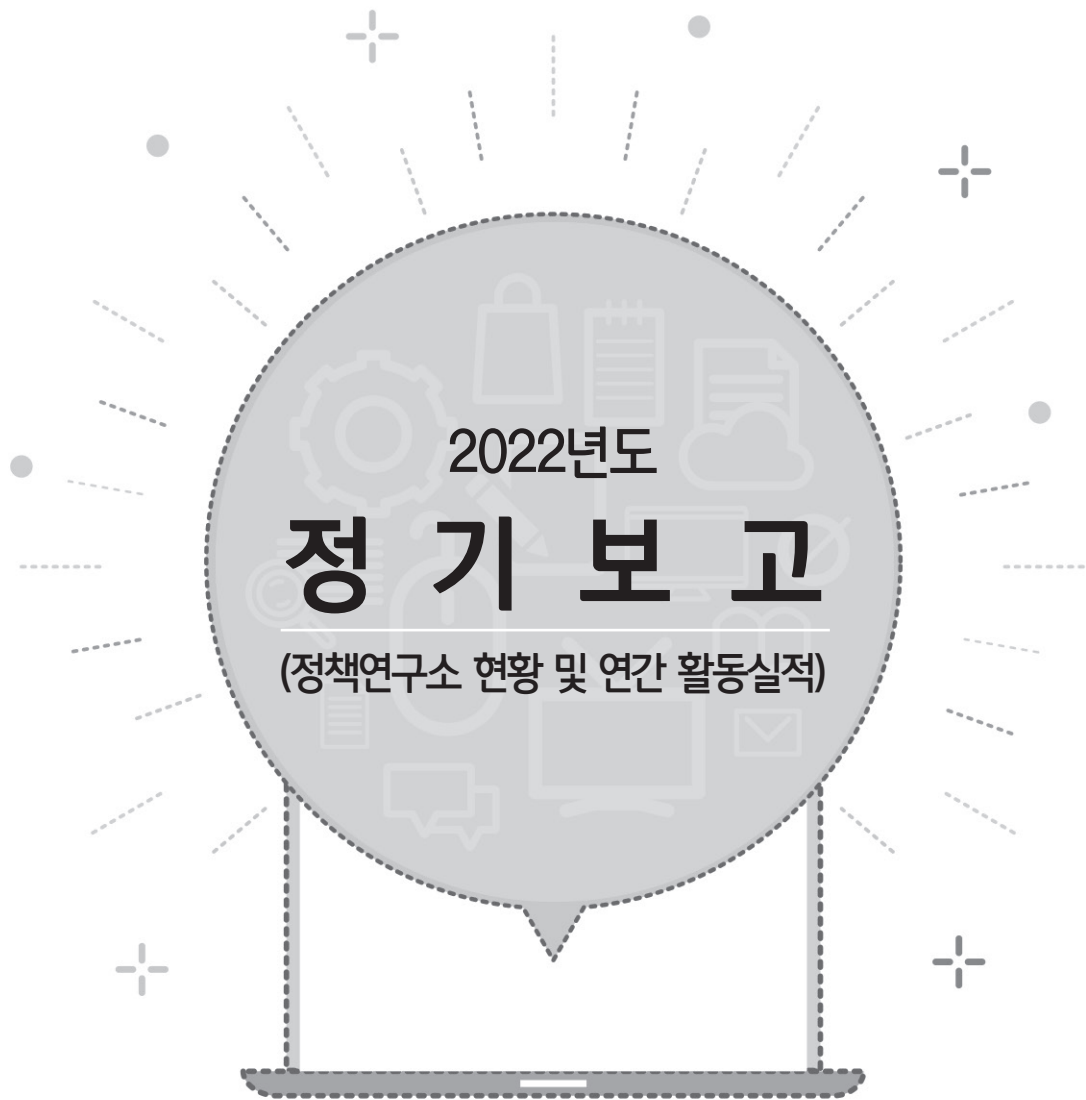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22.03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민주정치 교육	
~2022.04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게재	민주정치 교육	
2022.09.20.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게재	10대 이머징 이슈 정책화 논의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	-	-	-	-	-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22.04 ~ 2022.06	온라인 및 국회 의원회관	청년, 국회전환	정책 심의 및 선정	-



2022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정규직 : 5	2022.12.31. 기준
석사급: 3	2년 이상~7년 미만 :	비정규직 : 0	
기 타: 1	2년 미만 : 4		
합 계: 4	합 계 : 4	합 계 : 5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266,464,440	1,964,338	2,345,482,687	2,613,911,465	818,750,544	1,795,160,921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4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7.13.~7.20.	사회	디지털 시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외부 용역	45p	별첨
7.20~7.27.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OTT와 방송패러다임 전환	외부 용역	50p	별첨
10.12~10.20.	정치	여성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부 용역	48p	별첨
10.12~12.12.	정치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민생당의 정책대안과 추진전략	외부 용역	98p	별첨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4부.

나. 토론회 등 개최(7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7.20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디지털 시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디지털 시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간담회	7.27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OTT와 방송패러다임 전환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OTT와 방송패러다임 전환	
간담회	8.12	북카페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토크쇼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토크쇼	

간담회	8.30	비체펠리스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간담회	10.12	혁신과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여성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성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11.24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간담회	12.1	우석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가치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변화로 보는 지속가능정책	

다. 교육·연수활동(3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2022 민생당 핵심당원 및 사무처 연수	8.29~8.30	비체펠리스 (충남 보령시 소재)	헌법과 정당정치 개괄, 당원 및 사무처 역량 강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주최
혁신과미래연구원 워크숍	8.30	비체펠리스 (충남 보령시 소재)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민생당 핵심당원 및 사무처 워크숍	10.25~10.26	소노벨 변산 (전북 부안군 소재)	핵심당원 및 사무처 역량 강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주최

라. 정책홍보(7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7.20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게재 보도자료배포	디지털 시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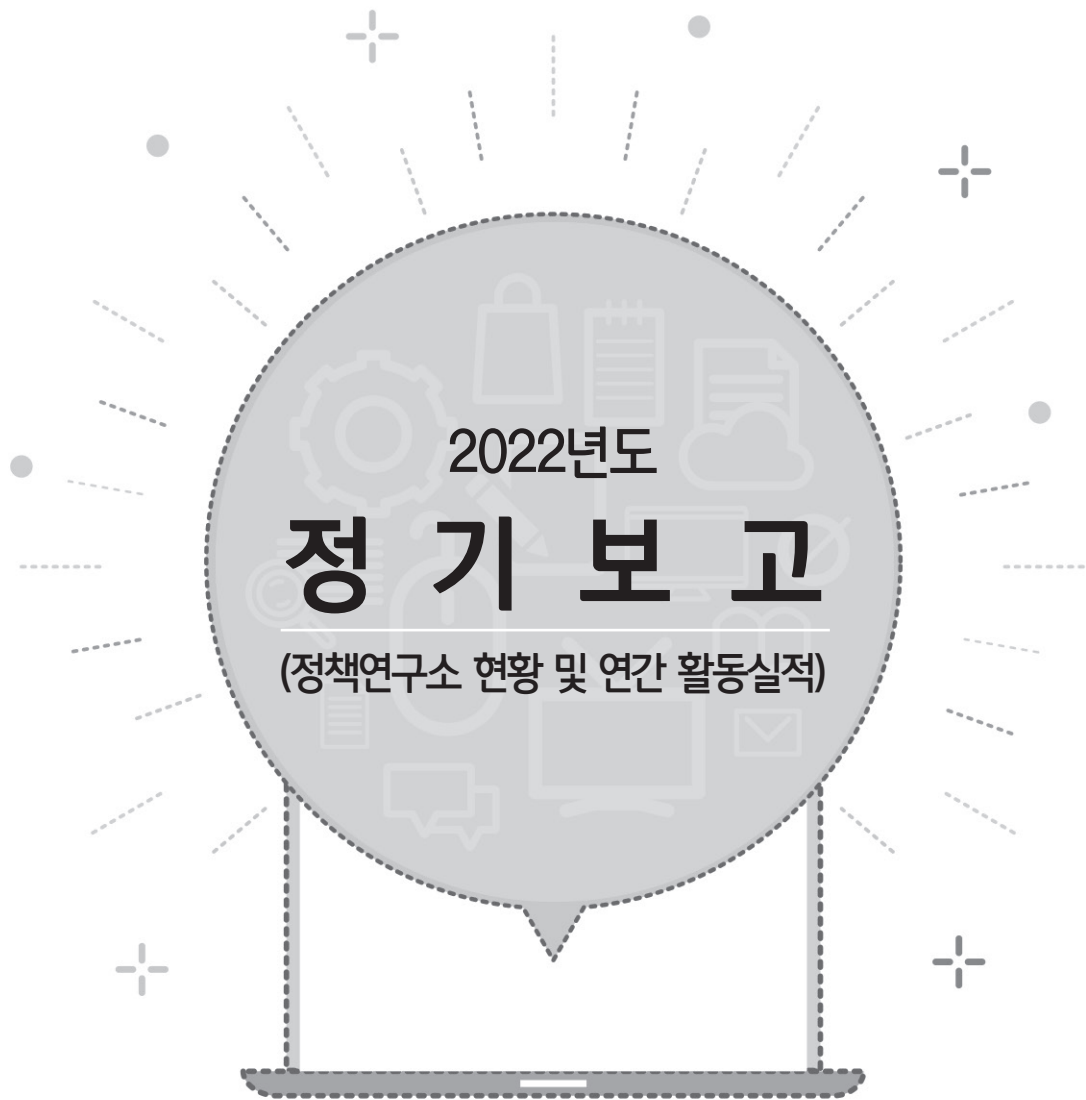
7.27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게재 보도자료배포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OTT와 방송패러다임 전환	간담회
8.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게재 실시간 영상송출 보도자료배포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토크쇼	간담회
8.30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간담회
10.12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게재 보도자료배포	여성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11.24	인터넷 보도자료	홈페이지게재 보도자료배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간담회
12.1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가치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7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7.20	간담회 자료집	디지털 시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7.27	간담회 자료집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OTT와 방송패러다임 전환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8.12	간담회 자료집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토크쇼	자체발간	200부 현장 배부	
8.30	간담회 자료집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자체발간	50부 현장 배부	
10.12	간담회 자료집	여성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체발간	20부 현장 배부	
11.24	간담회 자료집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자체발간	800부 현장 및 기관 배부	
12.1	간담회 자료집	가치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1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2.05	국회의사당 앞	올바른 국정조사 촉구집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촉구집회	



- 민생당 민주평화연구원 -

민주평화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없음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자체고용:	
석사급:	2년 이상~7년 미만 :	외부파견:	
기 타:	2년 미만 :		
합 계: 없음	합 계 : 없음	합 계: 없음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0	399	599,146	599,545	283,400	316,145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나. 토론회 등 개최(0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다. 교육·연수활동(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라. 정책홍보(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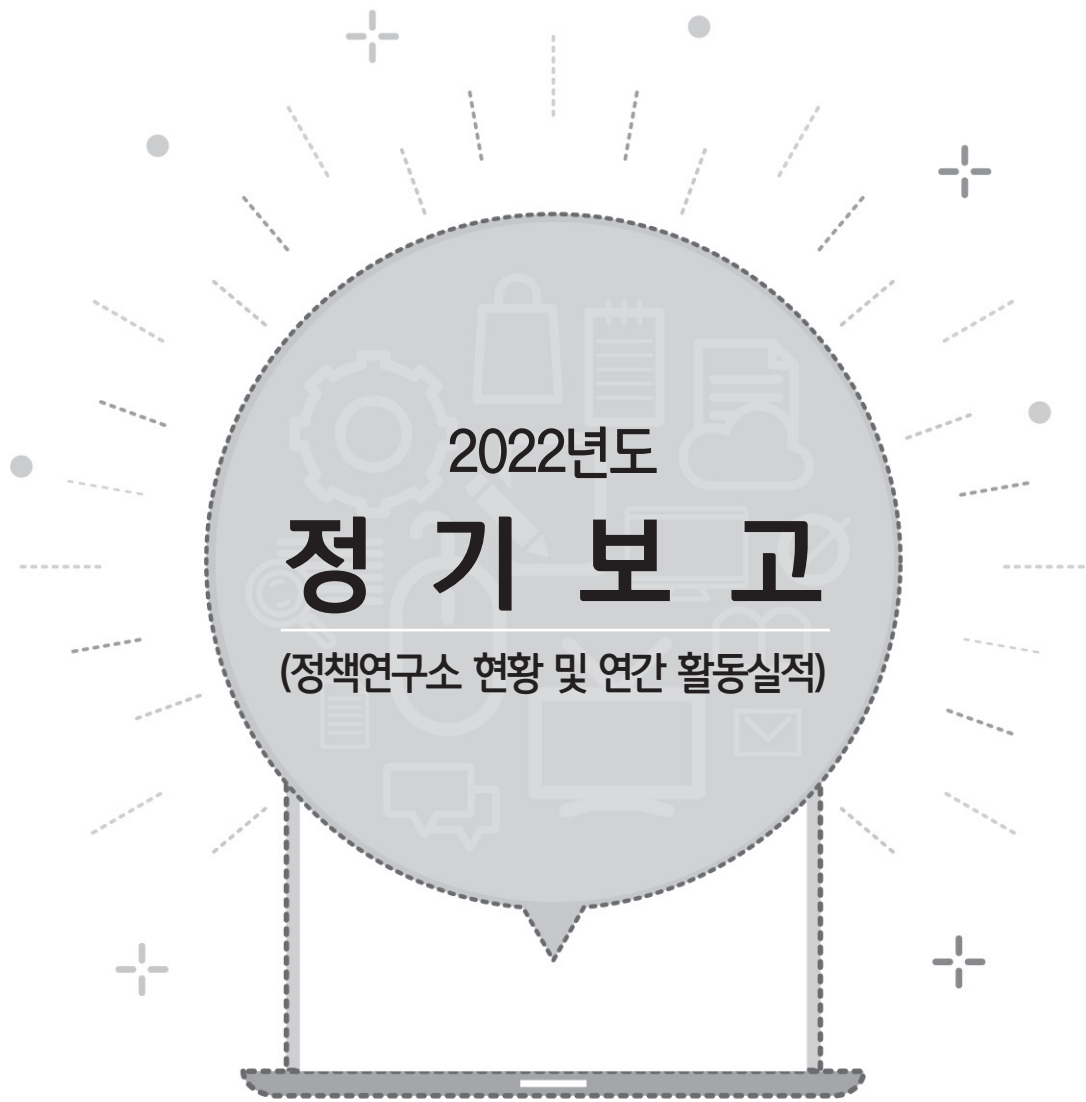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바. 그 밖의 주요활동(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 우리공화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V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 2	7년 이상 : 2	정규직 : 0	
석사급 : 0	2년 이상~7년 미만 : 0	비정규직 : 0	
기타 : 0	2년 미만 : 0		
합계 : 2	합계 : 2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6,500,000	20,001,046	3,417,562	39,918,608	39,732,310	186,298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2. 1. 1. ~ 12. 31.)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해당 없음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별첨’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2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세미나	05.16. 15:00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5.16혁명 61주년 기념 세미나	○ 5.16혁명정신과 이 시대의 과제	
세미나	06.20. 15:00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6.25 72주년 구국 세미나	○ 잊지말자 6.25 공선적화 야욕 ○ 625 전쟁과 국제사회의 희생 ○ 제7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변화 ○ 7차 핵실험전야의 북한의 내부상황 과 전망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해당 없음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라. 정책홍보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해당 없음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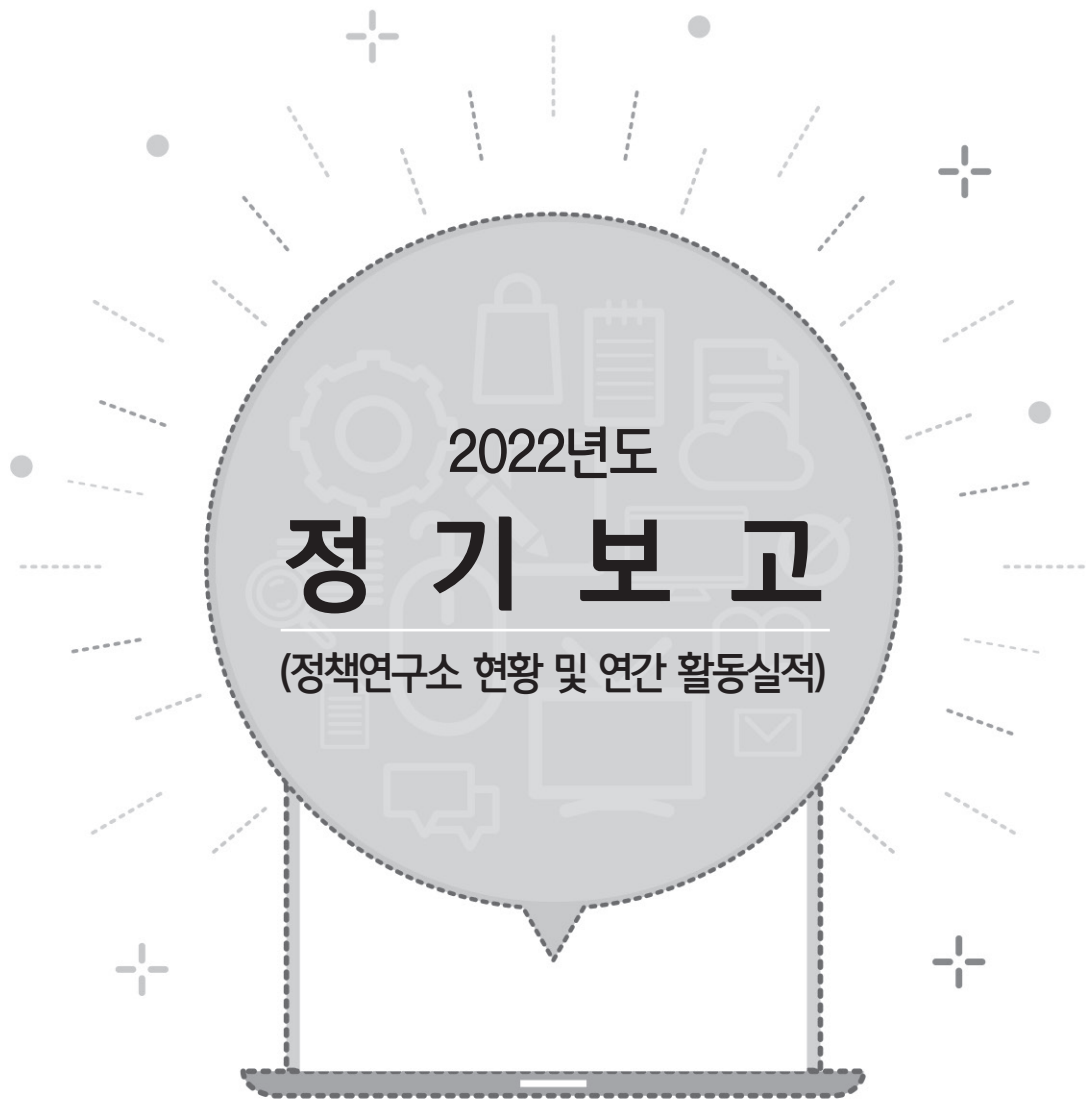
발간일자	종류	제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해당 없음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일자 (기간)	장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해당 없음				



2022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

진보정책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1108호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7년 이상 :	정규직 : 2	
석사급: 1	2년 이상~7년 미만 : 1		
기 타: 1	2년 미만 : 1		
합 계: 2	합 계 : 2	합 계: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00,000,000	2,629,612	5,633,363	108,262,975	104,089,612	4,173,363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8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2021.5~1.20	환노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을 제안한다	자체/외부	208P	별첨1
4.1~5.11	환노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자체/외부	67P	별첨2
6.1.~12.31	농림	농민·농업·농촌기본법(농민기본법)	자체/외부	223P	별첨3
8.1~10.17	정무	진보당 정치개혁 방안	자체	15P	별첨4
10.1~11.23	환노/국토	지역현장의 기후위기 대응방안	자체	50P	별첨5
10.1~12.26	환노	사각지대 노동자 조직사업	자체	25P	별첨6
5.1~12.27	기재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자체/외부	180P	별첨7
12.1~12.30	환노/국토	전기가스요금 인상 저지 정책과제	자체	20P	별첨8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8부.

나. 토론회 등 개최(14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3.7	진보당 대회의실	성평등임금공시제 성별임금격차해소	성별임금격차 현장고발, 페이미투	
공동회의	4.19	진보당 대회의실	기후특위 정책제안	신재생에너지문제점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정책수립	
토론회	8.17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것인가?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	
세미나	8.9	진보당 대회의실	진보당 정세강연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	현 경제 정세 현황을 진단하며, 공공성 강화 방향성 검토	
세미나	9.6	진보당 대회의실	기후위기, 거대한 전환	기후위기의 현실태, 정책 대안 방향성수립	
세미나	10.11	진보당 대회의실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진보당의 정치개혁 방향성 수립 및 사회적 대응토론	

집담회	10.23	경기도당 대회의실	청소년 내일을 말하다	청소년 정치/인권/페미니즘/ 기후위기/교육 청소년의제토론	
간담회	10.25	진보당 소회의실	국가보안법 폐지교육센터 소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교육센터 설립 향후 활동공유 간담회	
포럼	11.23	진보당 대회의실	지역과 현장에서 대안을 -기후의제 포럼-	에너지공공성,먹거리, 쓰레기, 교통 등 기후주요의제 논의	
세미나	11. 28	민주노총 대회의실	권력을 주민에게 주민대회 워크숍	주민대회 추진 지역사례나눔, 발전전망워크숍	
토론회	11. 28	국회 정론관	농민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	농민농업종촌 정책 기본법 주요개요 의미, 향후 농정방향	
토론회	12.7	진보당 대회의실	전환기 한반도 정세 전망과 평화해법	윤성력정부 대북정책분석 및 핵무력 법령화 북 입장과 대외정책 변화	
토론회	12.4	진보당 대회의실	울산 동구 사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최소생활노동시간 실현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토론	
토론회	12.27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심화되는 불평등과 경제위기, 그속에서의 노점상의 현실과 대안	

다. 교육 · 연수활동(10회)

교육 · 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중앙당당직자워크숍	10.6~7	김포 수련원	진보당 2기 중앙당 당직자 라포형성을 위한 워크숍	당직자
진보당 성평등강사단 보수교육	10.23	온라인 줌 교육	성평등 강령 필요성/젠더기반폭력 표준교육강의안 설명	정예당원
진보당 금융복지상담사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0.29~ 12.31	진보당 대회의실 & 온라인 줌	경제위기, 가계부채위기 대응 금융복지상담 전문가양성과정 (총8회)	정예당원
장애인평등교육	11.14~ 12.18	찾아가는 시도당사무실 & 온라인 줌	17개 시도당 주요 당직자 장애인평등교육 실시함(총 24회차)	정예당원
성평등교육	11.14~ 12.28	찾아가는 시도당사무실 & 온라인 줌	17개 시도당 주요 당직자 성평등교육 실시함(총 30회차)	정예당원

청년진보당 정세강연	11.27	진보당 대회의실	국가보안법의 모든것	집합교육
청년진보당 정세강연	12.11	진보당 대회의실	왜 황재세인가	집합교육
빈민당 초급활동가 정치학교1	12.15	민주노련사무실	진보당과 진보집권	정예당원
빈민당 초급활동가 정치학교2	12.22	민주노련사무실	노점상과 빈민운동	정예당원
노동자기금 워크샵	12.26	진보당 대회의실	노동자 기금 취지 및 추진 계획 안내 -지역별 과제 발표	지방당직 자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라. 정책홍보(31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2022.03.02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022탈핵대선 정책협약	
2022.03.0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공공부터 민간까지 모든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전환	
2022.03.07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미래	
2022.03.08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땀이 빛나는 세상, 진보집권의 길 비전	
2022.04.2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장애인 이동권 권리보장	
2022.05.1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선거정책 발표	
2022.07.16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성소수자 인권증진과 차별금지법 제정	
2022.08.1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생평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2022.08.2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돌봄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2022.08.2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농민기본법 제정	
2022.09.0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건설노동자 유급법정	

			공유일 적용하라!	
2022.09.1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노조법 2,3조 개정	
2022.09.1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제2N번방 강력처벌	
2022.10.0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가계부채 119센터, 길거리 채무상담	
2022.10.11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2022. 10.1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022.10.18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2022.10.1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	
2022.10.24	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반지하참사대책 및 공공임대주택 예산확충	
2022.10.25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특수경비노동자 정의행위 노동권 보장	
2022.10.28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2022.11.08	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쌀값 보장, 농민생존권보장	
2022.11.22	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건설안전특별법제정 건설현장 안전보장	
2022.11.3	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청소년인권법 제정	
2022.11.23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지역과 현장에서 기후의제포럼	
2022.11.30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은행 예대마진 규제, 대출금리인하방안마련	
2022.12.07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전환기한반도정세 전망과 평화해법	
2022.12.14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	
2022.12.22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출금리인하대책	
2022.12.29	정책과 논점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에너지 기업 규제강화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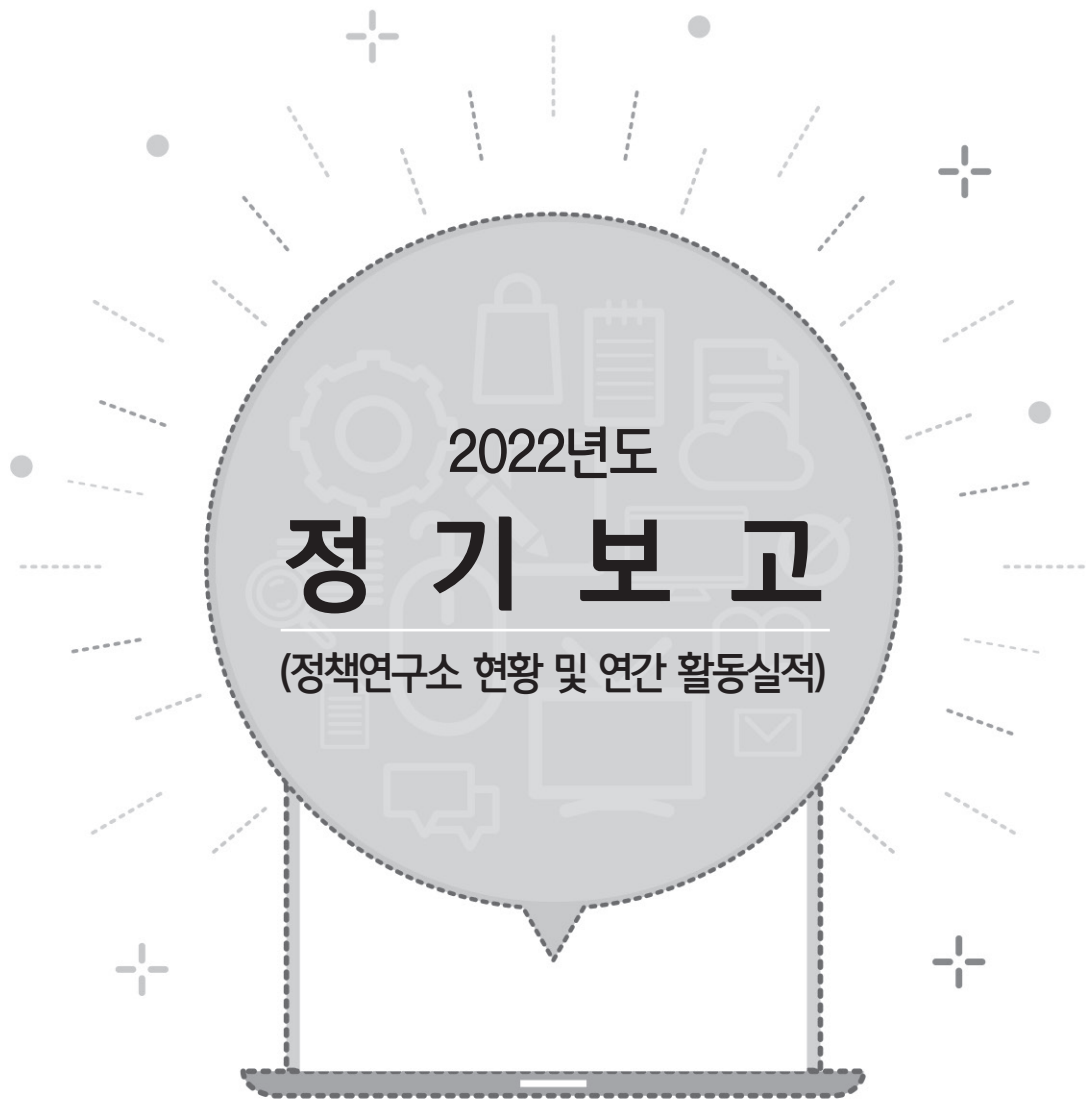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20	자료발간	돌봄기본법	자체/외부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20	자료발간	돌봄노동자기본법	자체/외부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8.17	토론회자료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것인가?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농민당회원토론	
9.20	자료발간	진보당 대중운동 사례집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9.30	자료발간	진보당 당선 사례집	자체발간	지방자치위원, 지역당원배포	
10.2	홍보브로셔	주민에게 권력을	자체발간	500부 지역위원회 토론	
10.11	토론회자료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1.23	토론회자료	지역과 현장에서 대안을 〈기후의제 포럼〉	자체발간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11.23	책발간	농민기본법	자체/외부	500부 농민당 배부	
12.14	토론회자료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	자체발간	30부 지방의원단 배부	
12.27	토론회자료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체/외부	당홈페이지개시 및 빈민당 토론	
10~12	당 기관지	당의 활동 및 정책홍보 기관지 '너머' (총3회)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바. 그 밖의 주요활동(6)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0.12~11.30	남대문/홍대입구 /청량리 총 6곳	가계부채119센터 찾아가는 상담(6회)	대출금리폭등으로 서민 금융복지서비스. 찾아가 는 민생채무상담/온라인 채무상담 실시함.	



- 친박신당 미래한국사회연구원 -

미래한국사회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40, 101동 409호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학력별】	【경력별】		
박사급: 3	7년 이상 : 0	정규직 : 0	
석사급: 0	2년 이상~7년 미만 : 0	비정규직 : 1	
기 타: 1	2년 미만 : 4		
합 계: 4	합 계 : 4	합 계 : 1	

- 「주」 1.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2. 경력은 정당정책연구소,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	4,991	5,005,150	5,010,141	-	5,010,141	

- 「주」 1. 활동경비 관련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 하단에 작성합니다.
2.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 2021. 1. 1. ~ 12. 31.)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0회)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나. 토론회 등 개최(00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다. 교육·연수활동(00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라. 정책홍보(00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